

월간

재정포럼

2023. December
Vol.330

12



권두칼럼

지방시대를 위한 재정분권

| 이영

현안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 허경선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방법론의
비교 분석

| 배진수

정책토론포트

2023년도 PEMNA 연차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4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Inflation Adjustments)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3.12 Vol.330

월간 재정포럼 2023년 12월호 통권 제330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지방시대를 위한 재정분권 | 이영

현안분석

0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 허경선

37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방법론의 비교 분석 | 배진수

정책토론포트

62 2023년도 PEMNA 연차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86 미국 - 2024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Inflation Adjustments)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재정분권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성장과 집중에서 균형과 분권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작은 국토 규모, 낮은 발전 단계를 근거로 지방분권에는 회의적인 의견을 필자는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가 높아지고 지역 간 불균형과 저출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필자는 이제 성장과 경쟁, 효율, 집중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균형과 공존, 안정, 분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 정책의 통합적 추진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1995년 지방선거가 제도입된 후 모든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행·재정 권한의 이양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공공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과거에는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상호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였다.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접근 방식은 분권도, 균형발전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단순한 행·재정 권한의 이양에 머무르는 지방분권 정책들은 실효성이 높을 수 없었으며,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에 내려보내고 일반 지자체가 교육청과 중앙 정부의 별다른 도움 없이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균형 정책들도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에는 실패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실효성 낮은 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분리 추진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수도권 지역의 GDP가 2015년 비수도권의 지역 GDP보다 높아졌고, 수도권 인구 수도 2019년 비수도권보다 더 많아졌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법을 '지방시대'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육정책 변화를 통한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구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법을 '지방시대'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예는 지방 대학 지원 정책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는 특정 목적의 지역 대학 육성사업에 관한 교육부 예산 4조원 중 절반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설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중앙부처 중심의 지방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사업을 재정분권화, 사업설계 및 시행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통합 연계형 지역균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RISE 체계의 거버넌스도 지방정부, 지역 산업,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이사회 형태의 RISE 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초중고, 지역 대학, 교육청,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정주체계를 총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지역 초중고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일반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중 특별교부금이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강한 형태의 행·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지방시대 정책이 부족했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체계 구축이라는 요소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결합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체계가 구축되어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유치와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를 교육 정책이 채워줄 수 있고, 동시에 기존 지방 대학 정책이 지방정부의 참여 부족으로 효과가 낮았던 부분을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채워줄 수 있으므로 교육 정책과 지방시대 정책의 결합은 상호보완적이며 교육과 지역균형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명시적으로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의 구축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돌봄,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방 대학-산업 연계 강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역 초·중등 교육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기업 유치도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결합된 정책으로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제공될 규제 특례들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상향식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즉,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향후 규제 관련 규정을 중앙정부 부처의 시행령이 아닌 지방정부의 조례로 내려보내는 법 정비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시행령, 조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 유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뿐 아니라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에 대한 과세 특례와 감면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를 ‘교육발전특구’와 결합하여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와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지역 초·중고,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으로 이양된 행·재정 권한을 이용하여 지역기업을 유치·발전시키고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저출생, 지역불균형, 저성장, 삶의 질 저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PF

현안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방법론의 비교 분석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¹⁾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heo@kipf.re.kr)

1. 서론

2023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 폭우, 가뭄, 홍수,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7월의 온도가 역대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하며 회원국이 즉각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행동에 나서야 함을 호소하였다.²⁾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Bova, 2021). 예산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공투자, 재정지출, 조세 등에 환경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줄여가는 방법은 정부 정책의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도 촉진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을 들 수 있다. 녹색예산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사업을 식별하고 각 사업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환경친화적 편성을 달성하는 것을

1) 본고는 허경선(2023 발간예정)의 일부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2) 『동아일보』, 『“지구가 끓고 있다… 온난화 끝, 열대화 시대” 경고』, 2023. 7. 2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28/120465914/1>, 검색일자: 2023. 8. 6.

목표로 한다(Bova, 2021). 녹색예산은 국가 예산에 특정 정책목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인지예산제도(Priority-based Budgeting)에 해당하며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예산은 최근 OECD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21년 녹색예산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국가는 14개였으나 2022년 22개로 대폭 증가하였다.³⁾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근거로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 9월에 2023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최초의 녹색예산 보고서인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⁴⁾를 공개하였다. 다음해인 2023년 9월에는 두 번째 보고서인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온실가스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체계적인 평가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⁵⁾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의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에는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온실가스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in 2022,” 2023, <https://www.slideshare.net/OECD-GOV/greenbudgetingioecd-countriesin2022pdf>, 검색 일자: 2023. 8. 14.

4) 이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모두 포함하여 통칭함

5) 본장의 내용은 허경선·오형나,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의 V.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내용을 요약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립 친화적 지출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되며, 재정 전반에 걸쳐 탄소의 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⁶⁾을 명시하였다. 탄소인지예산제도(안)은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보다 명확한 제도의 목표를 드러낼 수 있으며, 예산 및 결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로 명칭과 포함 범위가 확정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⁷⁾로 정의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⁸⁾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개정안(2021. 6.)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정의와 도입목적,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시기, 주요내용, 예·결산 작성기

<표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개요

구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근거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시행시기	2022. 1. 1. ~ (2023회계연도 예산, 결산부터 적용)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적용범위	예산, 기금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¹⁾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²⁾	- 예산의 집행실적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 및 방식을 제시	
작성주체	중앙관서의 장	
제출방법	(예산서)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 (결산서) 결산보고서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	

주: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를 합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통칭함

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기금결산서를 합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로 통칭함

출처: 허경선·오형나(2022), p. 121

6)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2. 7.

7)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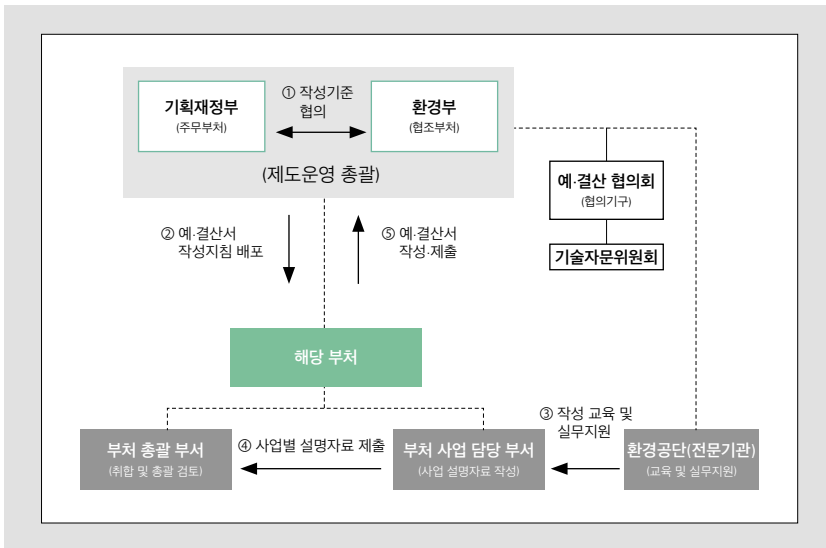
준 등은 <표 1>과 같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22년 3월에는 부처에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배포하였고, 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담당부처가 작성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와 예·결산 협의회를 거쳐 2022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2차년도인 2023년 4월에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부처에 배포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⁹⁾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조부처인 환경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의 총괄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며 각 부처로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과 실무지원, 사업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조부처인 환경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추진체계



출처: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p. 2

9)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은 대부분 세부사업 단위이지만 일부 내역사업 단위의 사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및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다.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및 수정 요청을 진행한다.¹⁰⁾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예산서 검토과정의 투명성, 적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부처, 전문기관,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대상사업의 선정,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¹⁾

Ⅲ. 적용 대상과 방법

1. 대상사업 선정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정부의 전체 사업에 대한 기후영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국가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식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규모와 기후영향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사업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감축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¹²⁾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사업은 예산 분류상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하며 감축사업 여부의 판단은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사업 단위에서 판단한다. 내역사업 중 감축사업이 1개라도 포함된 세부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내역사업이 독립적이거나 해당 내역사업 비중이 낮은 경우 내역사업 단위로도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은 대부분 세부사업 단위지만 일부 내역사업 단위의 사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온실가스감축인지

10) 탄소중립포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https://www.gihoo.or.kr/netzero/user/board/promotion/nv_cardNewsView.do?bbscttId=BBSCTT_0000000802&bbsId=CARDNEWS, 검색일자: 2022. 6. 27.

11)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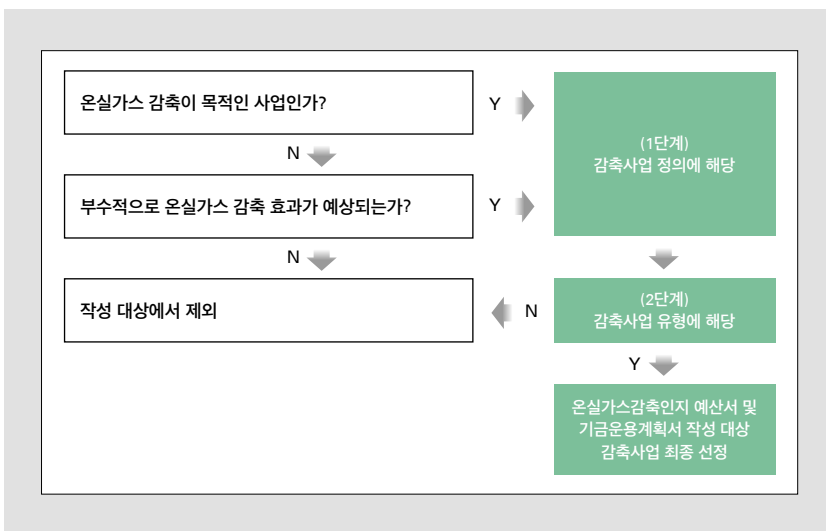
12) ibid.

예산서에 포함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수많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사업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감축사업’을 판별해 내는 작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의 첫 번째 과정이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다. 대상사업 선정은 각 부처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감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각 부처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부처가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환류를 제공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감축사업’을 선정하여 제출한다.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감축사업’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2단계는 감축사업의 10가지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상의 2단계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사업만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¹³⁾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의 10개로 구분하였다.¹⁴⁾

[그림 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방법



출처: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p. 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감축사업’을 판별해 내는 작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의 첫 번째 과정이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다.

13)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14) 2023년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서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 3.) 기준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CCUS·산림, 시장활용, 인식제고·정책지원의 10개 유형을 활용함. 유형별 설명과 예시는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p. 5를 참조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사업이 '감축사업'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 산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 산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감축사업'을 우선 선별한 후 부처가 선별한 '감축사업'에 할당된 예산의 규모를 합산하면 정부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사업이 '감축사업'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하는 사업의 단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부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의 '감축사업'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역사업 단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세부사업이더라도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역사업 중에 감축사업이 아닌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부사업 단위에서 합산한 예산의 규모와 내역사업 단위에서 합산한 '감축사업'의 예산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사업 예산서에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¹⁵⁾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 규모와 내역사업 단위의 '감축사업' 예산을 모두 표기하여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¹⁶⁾

3.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효과분석은 해당 예산 또는 기금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작성해야 한다. 감축 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성격의 판단과 감축 효과 분석은 내역사업 단위에서 수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부처에서 선별한 대상사업을 사업의 특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량 가능성에 따라 정량사업, 정성사업, R&D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다. 첫째, 국제공인 배출계수, 실적, 통계 등과 같이 신뢰성

15) 『경향신문』,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조원 '뺄튀기」, 2022. 10. 6.,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41826001>, 검색일자: 2023. 8. 6.; 『KBS』, 「첫 탄소 성적표 “계산오류-정부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2022. 11. 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02159>, 검색일자: 2023. 8. 6.

16)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있는 산출근거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은 정량사업으로 구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량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산정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감축량 산정에 적용한 배출계수, 모델 등 자료의 출처를 근거로 제시해야만 한다. 산정 기간은 해당 예산 회계연도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감축량을 매년 산정하고 2040년 누적 감축량, 2050년 누적 감축량을 산정한다. 정량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둘째, 정책, 제도, 교육 등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산출방법이 정형화되기 어려운 사업은 정성사업으로 구분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기여도 등 감축 효과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¹⁷⁾ 정성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등이 있다. 셋째, 국가기술개발 사업은 R&D 사업으로 별도 구분한다. R&D 사업이 기술개발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량하여 산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정성적으로 서술한다. 결과적으로 정량사업과 상용화 단계 R&D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계량적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고, 그 외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기여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다. R&D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의 첫 단계는 대상사업을 특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량 가능성에 따라 정량사업, 정성사업, R&D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예산 보고서였던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의 구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등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예산서의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¹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구성은 전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종합 결과를 설명하는 개요와 사업별 설명자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대상사업과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전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와 주요 사업, 특징을 설명한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사업이 속한 부처에 따라 구분하였다. 부처별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총괄표가 제시되고 개별 사업별로 설명자료가 제공된다.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사업

17)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18)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p. 7의 내용을 참고할 것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16개 부처의 294개 사업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8,776억원이다.

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예산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성과목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¹⁹⁾

IV.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주요 내용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16개 부처의 294개 사업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8,776억원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정부예산안 656.9조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내역사업 단위에서 파악한 ‘감축예산’은 10조 887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안 대비 1.5%를 차지한다. 처음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를 파악했던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은 2023년 288개에서 2024년 294개로 6개 증가하였지만, 예산의 규모는 2023년 11.9조원에서 약 1조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5%가 감소하였다. 내역사업 단위로 파악한 감축예산의 규모는 2023년 9.9조원에서 2024년 10.1조원으로 0.2조원 증가하여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전체 정부예산안 증가율인 2.8%보다 낮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중 정량사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²⁰⁾은 2023년 336만톤에서 2024년 436만

<표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단위: 개, 조원, 천톤CO₂e, %)

구분	2023년(A)	2024년(B)	증감액(B-A)	증감률
대상사업 수	288	294	6	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11.9 (1.9%)	10.9 (1.7%)	-1.0 (-0.2%p)	-8.5 -
감축예산 (내역사업 단위)	9.9 (1.6%)	10.1 (1.5%)	0.2 (-0.1%p)	1.8 -
정부예산안	638.7	656.9	18.2	2.8
온실가스 감축량 (당해년도)	3,360	4,362	1,002	29.8
2030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	28,717	23,437	-5,280	-18.4

주: 괄호 안 숫자는 전체 정부예산안 대비 비율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9)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20)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정량사업은 2023년 70개 사업에 6조 2,8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81개 사업에 6조 2,414억원이 배정되었다.

2천톤으로 29.8%가 증가하였으나 2030년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2,871만 7천톤에서 2,343만 7천톤으로 오히려 18.4% 감소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이 5조 9천억원, 기금이 5조 9천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체의 61%, 기금이 39%로 예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7.2%, 특별회계는 27.3% 증가한 반면 기금은 전년 대비 28.6%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2023년 1조 9,011억원에서 2024년 4,165억원으로 78.1% 감소하였다.²¹⁾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대응기금도 2023년 2조 3,767억원에서 2024년 2조 2,024억원으로 7.3%가 감소하였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3조 7,856억원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며, 기후대응기금이 2조 2,024억원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이 5조 9천억원, 기금이 5조 9천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체의 61%, 기금이 39%로 예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3>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단위: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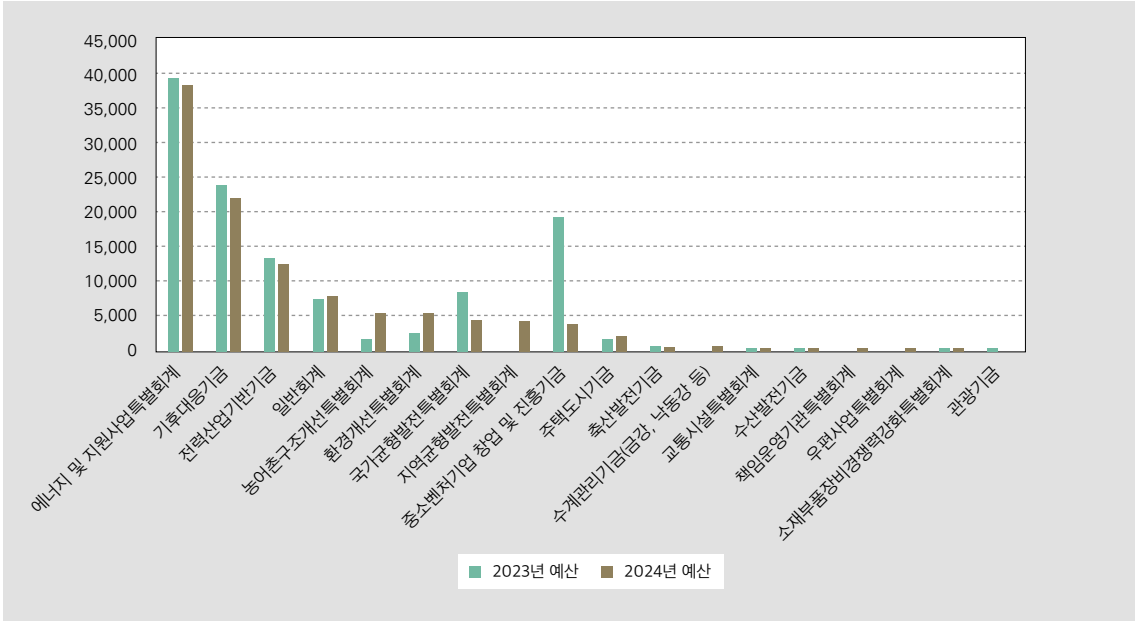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B-A)	증감률		
	사업 수	예산(A)	사업 수	예산(B)				
예산	소계	95	59,465	122	66,371	6,906	11.6	
	일반회계	41	7,330	55	7,857	527	7.2	
	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2	467	4	409	-58	△1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	8,450	9	4,694	-3,756	△4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	4,371	4,371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1,780	15	5,638	3,858	216.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134	2	21	-113	△84.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1	38,860	22	37,856	-1,004	△2.6
		우편사업특별회계	0	0	1	22	22	1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	0	1	69	69	100
환경개선특별회계	13	2,444	10	5,434	2,990	122.3		
기금	소계	193	59,363	172	42,405	-16,958	△28.6	
	기후대응기금	148	23,767	141	22,024	-1,743	△7.3	
	수산발전기금	1	363	1	299	-64	△17.6	
	전력산업기반기금	38	13,328	21	12,502	-826	△6.2	
	주택도시기금	1	2,046	1	2,130	84	4.1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	19,011	3	4,165	-14,846	△78.1	
	축산발전기금	1	768	1	689	-79	△10.3	
	수계관리기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0	0	4	596	596	100	
	관광기금	1	80	-	0	-80	△100	

주: 2023년 예산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288개 사업 예산의 합계임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은 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에 포함된 신성장기 반자금 사업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전체 세부예산 1조 4,886억 원을 포함하였으나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이 세부사업 중 Net-Zero 유망기업 내역사업 예산 966.7억원만을 포함하였다.

[그림 3]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

(단위: 억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단위: 개, 억원, %)

기관	2023년		2024년		증감 (B-A)	증감률
	대상사업	금액(A)	대상사업	금액(B)		
환경부	20	39,249	19	41,785	2,536	6.5
산업통상자원부	68	22,377	55	22,180	-197	-0.9
기획재정부	148	23,767	141	22,024	-1,743	-7.3
산림청	4	197	11	5,108	4,911	2498.9
중소벤처기업부	3	19,011	3	4,165	-14,845	-78.1
교육부	1	4,212	1	3,585	-627	-14.9
해양수산부	22	4,610	28	3,444	-1,166	-25.3
국토교통부	7	2,435	15	3,156	721	29.6
농림축산식품부	7	1,431	7	1,415	-15	-1.1
경찰청	1	885	1	859	-26	-2.9
농촌진흥청	5	259	6	645	386	149.1
기상청	1	317	1	278	-40	-12.4
보건복지부	0	0	2	72	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2	26	26	
국방부	0	0	1	25	25	
국가보훈부	0	0	1	7	7	
문화체육관광부	1	80	0	0	-80	-100.0
총계	288	118,828	294	108,776	-10,053	-8.5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조 2,502억원으로 11.5%, 일반회계가 7,857억원으로 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5,638억원으로 5.2%, 환경개선특별회계가 5,434억원으로 5.0%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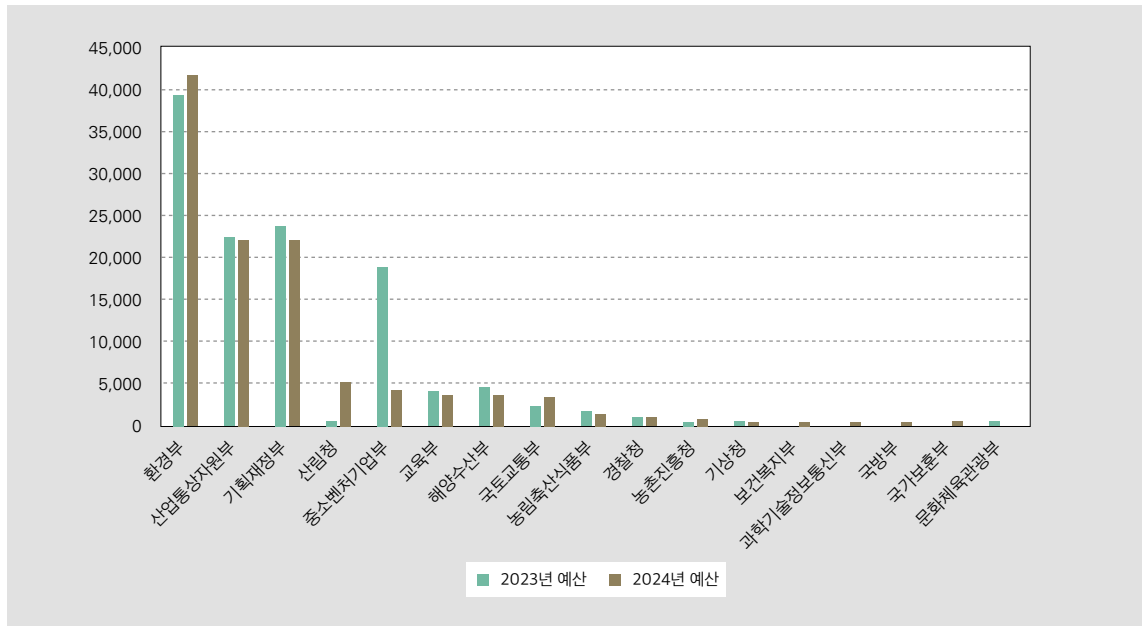
부처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환경부가 4조 1,785억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 2,024억원으로 20.4%, 기획재정부가 2조 2,024억원으로 20.2%, 산림청이 5,108억원으로 4.7%, 중소벤처기업부가 4,165억원으로 3.8%, 교육부가 3,585억원으로 3.3%의 순이다. 부처별 예산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산림청이 2023년보다 4,911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농촌진흥청은 386억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배 증가하였다. 환경부는 2,536억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고 국토부는 721억원 증가하여 29.6%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4,845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8.1%가 줄어들었으며 기획재정부는 1,743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3%가 줄어들었다(<표 4> 참조).

감축사업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부터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축사업

감축사업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부터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4]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2023년, 2024년)

(단위: 억원, 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감축사업의 유형별로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송이 4조 1,750억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한다.

의 유형별로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송이 4조 1,750억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하며, 산업이 1조 7,849억원으로 16.4%, 전환이 1조 7,079억원으로 15.7%, 건물이 1조 5,764억원으로 14.5%, 흡수원이 8,783억원으로 8.1%

<표 5>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수와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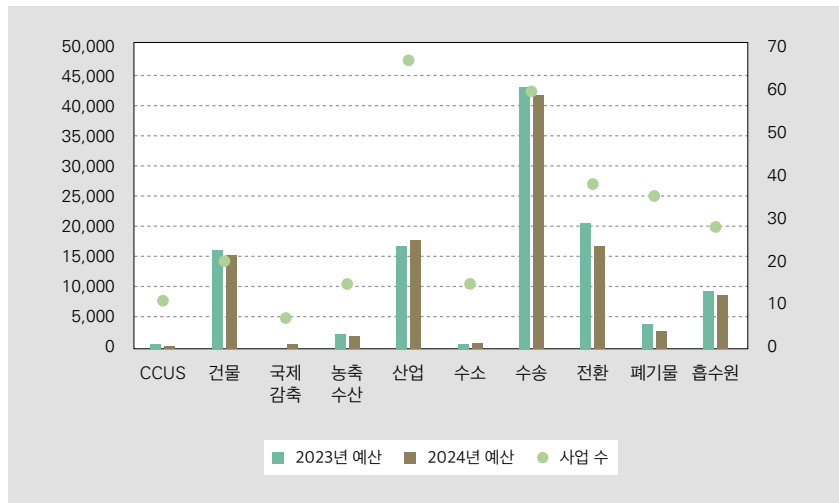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유형	사업 수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B-A)	증감률
CCUS	11	768	564	-205	-26.6
건물	20	16,062	15,764	-298	-1.9
국제감축	7	217	734	517	237.7
농축수산	15	2,446	2,264	-182	-7.4
산업	66	16,782	17,849	1,067	6.4
수소	15	615	937	323	52.5
수송	59	42,983	41,750	-1,232	-2.9
전환	38	20,794	17,079	-3,715	-17.9
폐기물	35	4,107	3,052	-1,055	-25.7
흡수원	28	9,431	8,783	-649	-6.9
합계	294	114,206	108,776	-5,430	-4.8

주: 2023년 예산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294개 대상사업의 2023년 예산 합계임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단위: 억원, 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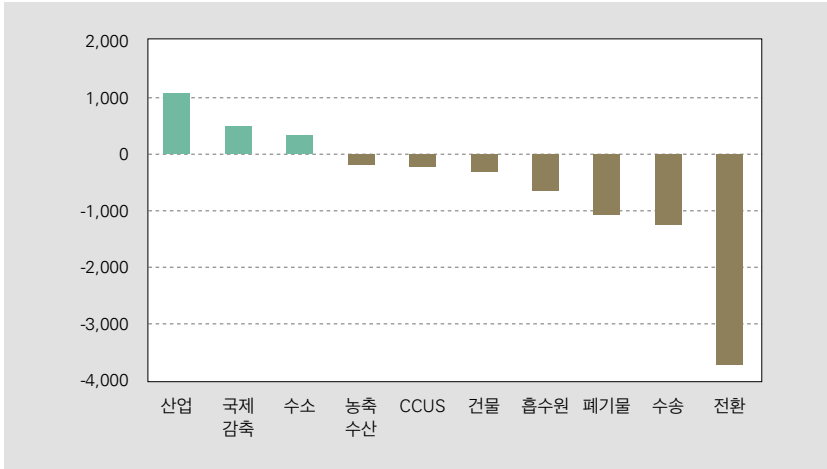
의 순이다.

유형별 예산 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이 2023년보다 1,067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고, 국제감축이 517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7배 증가하였다. 수소는 323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52.5% 증가하였다. 반면 전환은 3,715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9%가 줄어들었으며 수송은

유형별 예산 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이 2023년보다 1,067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고, 국제감축이 517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7배 증가하였다.

[그림 6]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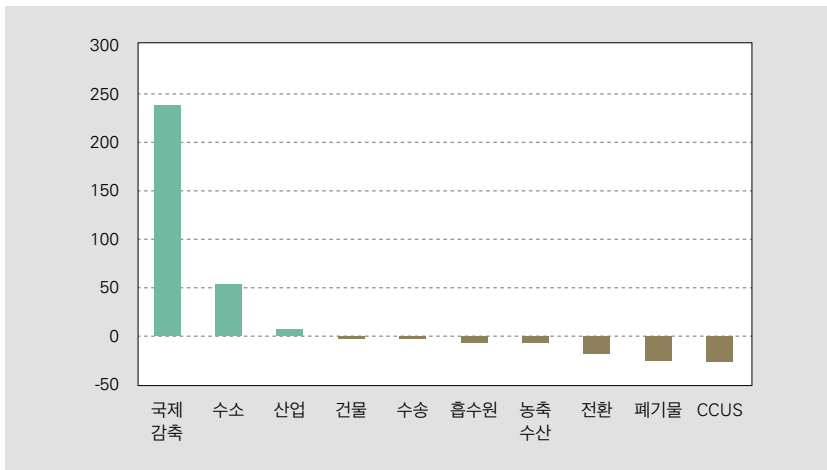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증감률

(단위: %)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정량사업의 예산은
2024년 기준 81개 사업에
6조 2,414억원의 규모로
전체 예산의 57.4%를
차지한다.

1,232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9%가 줄어들었다. 폐기물은 전년 대비 1,055억원이 감소하여 25.7%가 줄어들었다(<표 5> 참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량, 정성, R&D 사업으로 분류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정량사업의 예산은 2024년 기준 81개 사업에 6조 2,414억원의 규모로 전체 예산의 57.4%를 차지한다. 정량사업은 2023년 대비 사업 수는 70개에서 81개로 증가했으나 예산은 444억원(0.7%)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성사업은 2024년 기준 74개 사업에 3조 742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28.3%이다. 정성사업은 2023년 대비 사업 수는 62개에서 74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7,615억원(19.9%)이 감소하였다. R&D 사업은 2024년 기준 139개 사업에 1조 5,6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4%에 해당한다. R&D 사업은 2023년 대비 사업 수가 156개에서 139개로 감소하였으며 예산은 1,993억원(11.3%) 감소하였다(<표 6> 참조).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량사업에 한해 산정이 이루어졌다. 81개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24년 436만 2천톤으로 산정되었고 2030년까지 누적 2,343만 7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표 6>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유형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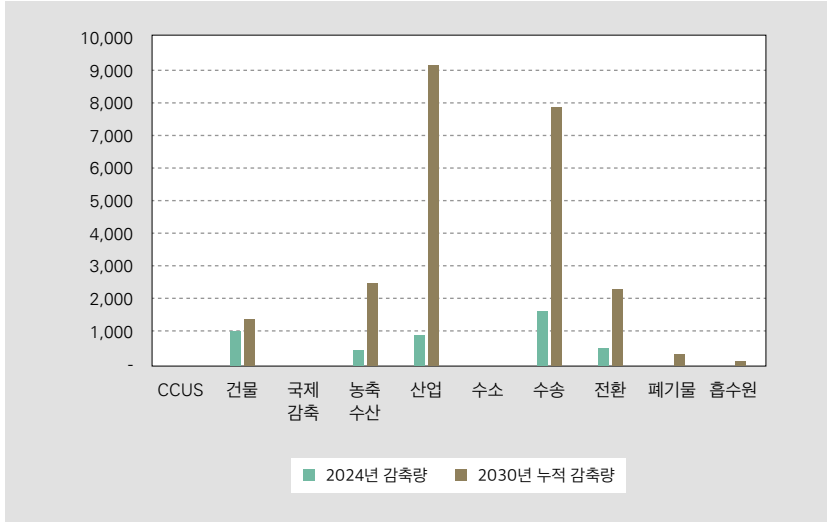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3년(A)	2024년(B)	증감액(B-A)	증감률
정량	예산 (감축예산)	62,858 (61,359)	62,414 (60,205)	-444 (-1,154)	-0.7 (-1.9)
	사업 수	70	81	11	15.7
정성	예산 (감축예산)	38,357 (21,050)	30,742 (27,353)	-7,615 (6,303)	-19.9 (29.9)
	사업 수	62	74	12	19.4
R&D	예산 (감축예산)	17,613 (16,721)	15,620 (13,329)	-1,993 (-3,392)	-11.3 (-20.3)
	사업 수	156	139	-17	-10.9
합계	예산 (감축예산)	118,828 (99,130)	108,776 (100,887)	-10,052 (1,757)	-8.5 1.8
	사업 수	288	294	6	2.1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사업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천톤CO₂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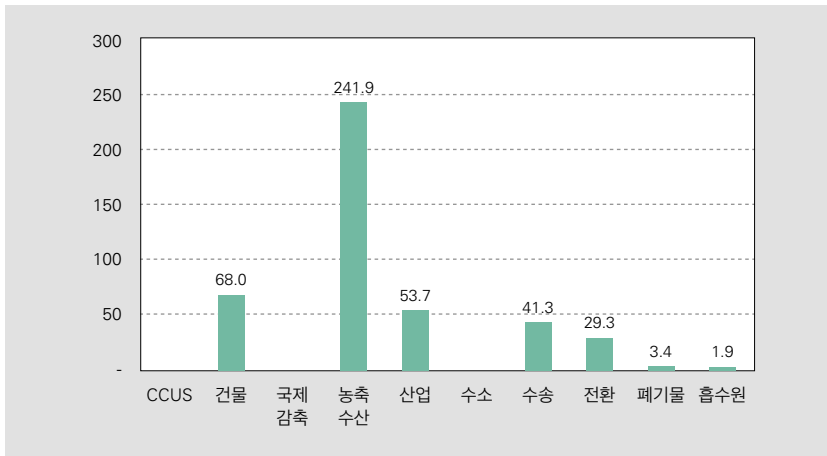
10개 유형별로 정량사업의 2024년 예산액 대비 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것으로 추산되었다.

10개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송 159만 4천톤, 건물 100만 1천톤, 산업 90만 4천톤, 전환 48만 7천톤, 농축수산 35만 2천톤의 순으로 나타나고, 2030년 누적 기준은 산업 906만 4천톤, 수송 777만 2천

[그림 9] 사업 유형별 정량사업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톤CO₂e/백만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상수도정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톤, 농축수산 246만 7천톤, 전환 226만 7천톤, 건물 139만 5천톤의 순으로 나타난다.

10개 유형별로 정량사업의 2024년 예산액 대비 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예산 100만원당 농축수산 분야가 241.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건물 분야가 68톤, 산업 분야가 53.7톤, 수송 분야가 41.3톤 전환 분야가 2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현황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2조 3,988억원),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7,344억원), 노후상수도정비(4,05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3,585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3,464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은 3조 1,332억원으로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표 7>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유형	정량/정성/R&D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률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수송	정량	2,565,224	2,398,754	-6.5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수송	정성	518,856	734,441	41.6
	노후상수도정비(자율)	건물	정량	393,436	405,490	3.1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수송	정량	380,794	346,427	-9.0
교육	그린스마트스쿨조성	건물	정성	421,158	358,484	-14.9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수송	R&D	313,591	342,408	9.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생산 및 시설자금)	전환	정량	467,300	338,925	-27.5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전환	R&D	362,314	318,710	-12.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산업	정량	263,334	294,575	11.9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전환	정성	250,000	312,500	25.0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비중이 매우 높다.

예산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2,156억원 증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용자 지원(1,116억원 증가), 전력효율 향상(1,116억원 증가), 재도약지원자금(625억원 증가), 신성장기반자금(505억원 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가 가장 큰 5개 사업의 유형은 산업, 수송, 건물, 전환이다. 온실가스 분석유형은 5개 사업 모두 정성사업에 해당한다.

예산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1,665억원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1,395억원 감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1,284억원 감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875억원 감소),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659억원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규모가 가장 큰 5개 사업유형은 전환이었으며 수송, 흡수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규모가 큰 5개 사업의 온실

예산 증가가 가장 큰 5개 사업의 유형은 산업, 수송, 건물, 전환이며, 분석유형은 5개 사업 모두 정성사업에 해당한다.

<표 8>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감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유형	정량/정성/R&D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증감률
환경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수송	정성	518,856	734,441	215,585	41.6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용자 지원	산업	정성	147,000	258,600	111,600	75.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효율향상	건물	정성	51,802	163,374	111,572	215.4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전환	정성	250,000	312,500	62,500	25.0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Net-Zero유망기업)	산업	정성	46,200	96,674	50,474	109.3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9> 전년 대비 예산 감소 규모 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유형	정량/정성/R&D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증감률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수송	정량	2,565,224	2,398,754	-166,470	-6.5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전환	정량	214,383	74,861	-139,522	-65.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생산 및 시설자금)	전환	정량	467,300	338,925	-128,375	-27.5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전환	정량	247,000	159,455	-87,545	-35.4
기획재정부	탄소중립도시숲조성	흡수원	정량	206,644	140,737	-65,907	-31.9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예산 감소의 규모가
큰 5개 사업의
온실가스 분석유형은
모두 정량사업에
해당한다.

가스 분석유형은 모두 정량사업에 해당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상 사업을 통해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규모가 큰 사업은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93만 8,937톤), 무공해차 보급사업(74만 7,999톤), 전환 교통 지원(44만 492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용자)(36만 8,137톤),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27만 2,834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각 사업의 감축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감축효율)을 살펴 보면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가장 큰 사업은 전환 교통 지원(해수부, 163.1톤/100만원),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43.6톤/100만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30.7톤/100만원), 전환 교통 지원사업(국토부,

<표 10> 2024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순위

(단위: 백만원, 톤CO₂e)

부처	사업명	유형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4년 감축량	2030년 감축량
기획재정부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구축지원	건물	23,988	31,090	938,937	938,937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수송	2,565,224	2,398,754	747,999	5,235,993
해양수산부	전환 교통 지원	수송	2,700	2,700	440,492	440,49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용자)	산업	263,334	294,575	368,137	2,576,959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농축수산	5,821	6,251	272,834	1,909,838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1> 2024년 온실가스 감축효율 순위

(단위: 백만원, 톤CO₂e, 톤CO₂e/백만원)

부처	회계	사업명	2024년 감축예산 (A)	2024년 감축량 (B)	감축 효율 (B/A)	유형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전환 교통 지원	2,700	440,492	163.1	수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6,251	272,834	43.6	농축수산
기획재정부	기후대응 기금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구축지원	30,590	938,937	30.7	건물
국토교통부	에너지 및 자원발전 특별회계	전환 교통 지원사업	4,184	127,266	30.4	수송
해양수산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글로벌 저탄소 선박정책 대응지원	22,624	264,599	11.7	수송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0.4톤/100만원), 글로벌 저탄소 선박정책 대응 지원(11.7톤/1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높은 사업이 속한 분야는 수송, 건물, 농축수산의 순으로 나타난다.

V. 성과와 한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22년 9월에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최초로 공개하였고, 2023년 9월에 두 번째 보고서인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공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와 가능성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재정관리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가격제 등 재정정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특정 부서의 특정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식별하고 그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다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녹색예산(Green Budgeting)과 녹색재정관리(Green PFM)에 해당한다.²²⁾ 녹색재정관리는 기후변화가 예산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역시 이러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최초로 전체 정부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식별하고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예산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예산의 전체 규모를 공개한 적은 있으나²³⁾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별 예산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또한 사업선정의 기준이나 예산사업의 단위가 공개되지 않아 대상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23년,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내용과 사업별 예산(2023년 288개, 2023년 294개)을 세부사업 단위²⁴⁾에서 공개하고 있어 예산의 구성과 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재정관리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2) 녹색예산(Green Budgeting)과 녹색재정관리(Green PFM)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허경선·오형나(2022), Gonguet et al.(2021)을 참조할 것

23)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한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11.9조 원 규모의 「2022년도 탄소중립 정부예산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탄소중립 예산 규모를 8.5조원으로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허경선·오형나(2022, pp. 108~112)를 참조할 것

24) 대부분 세부사업 단위이나 일부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용이하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전체 정부예산 중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의 규모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부 재정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감축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이 가능한 정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고²⁵⁾ 정량화가 어려운 정성사업과 R&D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내역사업 단위에서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이다.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정량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방법과 공인된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고, 정성사업과 R&D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의 기후변화 분야 재정 지출 및 투자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해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관련 부처 및 사업담당자는 작성 과정에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와 기여도에 대한 판단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담당하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학습하고 인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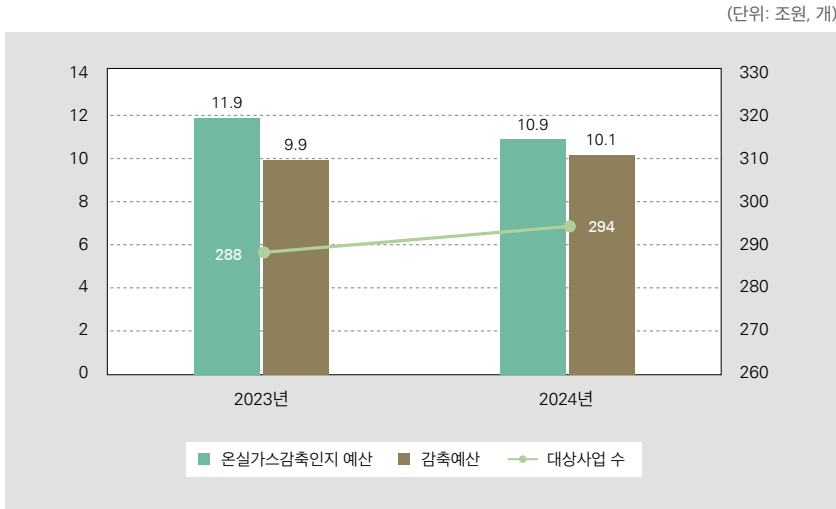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3년과 2024년에 공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 목적에 대한 기여는 불분명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²⁶⁾로 정의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²⁷⁾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분석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

25) 2023년에는 전체 288개 사업 중 70개 사업에 대하여 33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고, 2024년에는 436만 2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산정하였다.

26)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27) ibid.

[그림 1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수의 66.3%에 해당하는 195개의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하였다.

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감축 효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사업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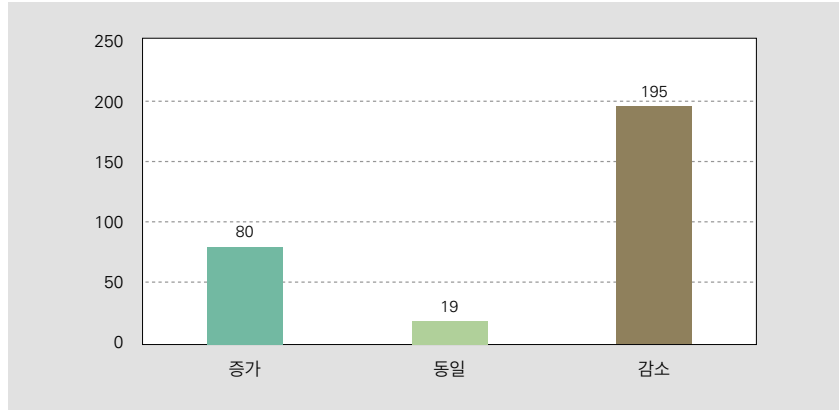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예산반영 여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선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는 11.9조원에서 10.9조원으로 오히려 1.0조원이 감소하였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1.9%에서 2024년 1.7%로 감소하였다. 전체 정부예산은 2.8%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8.5% 감소한 것이다. 내역사업 단위에서 파악한 ‘감축예산’도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1.8%가 증가하여 전체 정부예산에서 감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1.5%로 더욱 감소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식별된 사업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오히려 해당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수의 66.3%에 해당하는 195개의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하였다. 19개 사업(6.5%)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였고, 80개의 사업(27.2%)만이 전년 예산보다 증가하였다. 이 중 9개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순증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사업의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1] 2024년 온실가스 감축사업(294개)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감 사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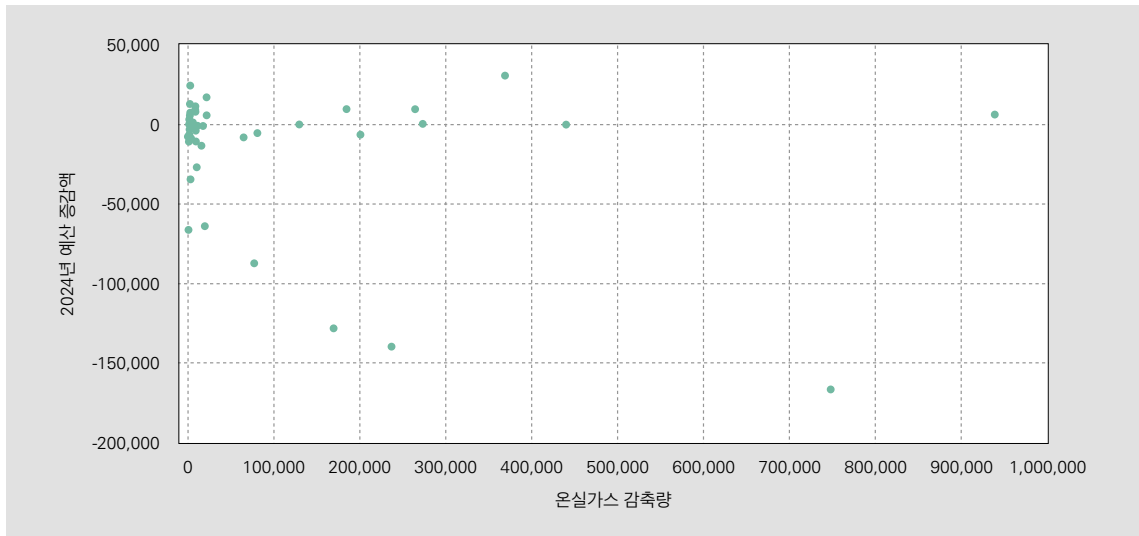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71개로 전체의 24.1%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사업의 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81개 정량사업의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예산 증감액, 온실가스 감축효율과 예산 증감액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온실가

[그림 12]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24년 예산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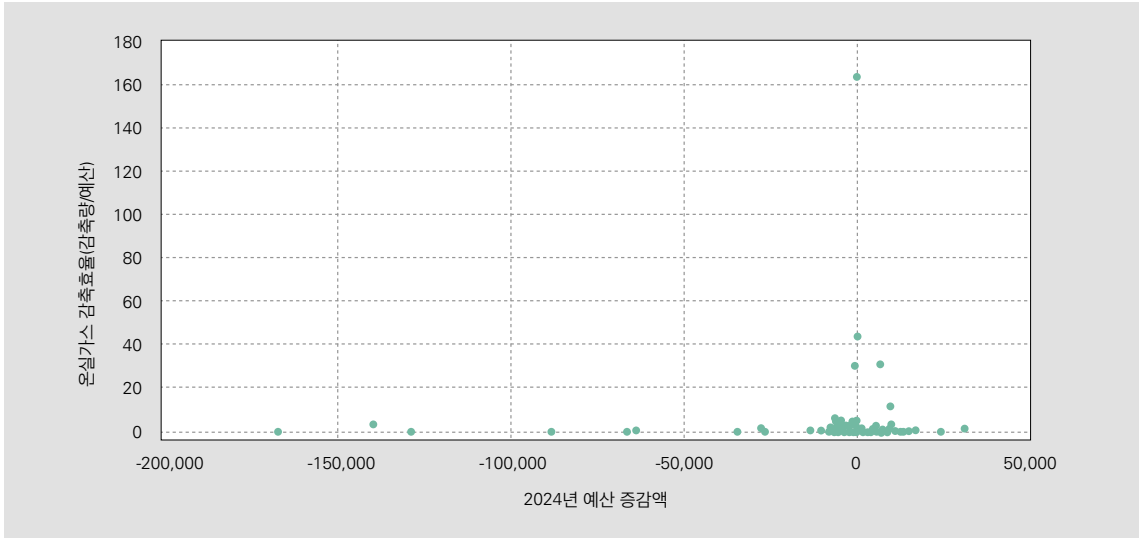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톤CO₂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3]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율 대비 2024년 예산 증감액

(단위: 백만원, 톤CO₂eq)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스 감축 규모가 크거나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높은 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은 2024년 예산안에서는 그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²⁸⁾ 이는 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예산 배정 및 우선순위 판단에 반영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예산편성 등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항목 중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얼마만큼의 중요도로 반영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OECD(2023)가 제시한 ‘Spending Better Framework’의 10개 원칙 중 6) 정보에 기반한 지출결정(informed spending decisions) 원칙은 지출결정에는 기존의 성과평가 정보를 핵심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성인지예산과 녹색예산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의 반영 여부와 반영 방식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 반영을 위하여 수많은 정부 재정

2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29) OECD, “Spending Better: Post-Covid Budget Frameworks,” 45th Annual Meeting of Senior Budget Officials,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예산 규모만으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엄청난 노력을 들여 분석하였으나, 실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사업별 중요도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해져야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이러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량 혹은 정성적인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는 산정 시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정성적인 기여도는 작성자별로 서술방법이 상이하여 각 사업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비교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정량사업과 정성사업 간 비교는 더욱욱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는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이행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목표 설정의 합리성과 도전성, 성과의 측정 및 평가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두 번째 한계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표로 하는 직접 사업과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간접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축을 제외한 정부의 기후대응 투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예산 규모만으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총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례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3년 재정투자 규모는 13.3조원이나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11.9조원으로 약 1.4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정부예산의 기후대응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과 기금’ 사업에

<표 12>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2024~2027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합계	133,455	765,738	899,193	11.54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79,480	466,283	545,763	11.48
기후변화 적응 대책	29,856	164,213	194,068	9.43
녹색산업 성장	10,45	54,453	64,912	7.34
정의로운 전환	2,366	19,837	22,203	37.57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4,602	30,319	34,922	25.36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5,999	26,881	32,881	2.11
국제협력	693	3,751	4,444	1.59

주: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2023. 4. p. 23

온실가스 감축 외에
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예산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해서만 감축사업을 식별하고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기후대응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식별해 내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중립적이거나 또는 감축과 배출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 중립, 복합 등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외에 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예산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례 등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³⁰⁾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이 조세지출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및 기금 외에 조세지출 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한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023년 처음으로 공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예산 규모 산정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³¹⁾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부족한 사업을 대상사업에 포함했다거나 예산 규모 집계 방식의 모호함, 감축량 산정 방식의 부적합, 단순 수치 오류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초기인 만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전년도보다 수치 작성이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감축예산의 별도 표기, R&D 사업 기여도

30) 프랑스의 예산과 조세지출 중 부정적 사업의 비중은 허경선, 오형나(2022, p. 50)를 참조할 것

3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2; 『경향신문』,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조원 '뺄튀기」, 2022. 10. 6; 『KBS』, 「첫 탄소소성적표 "계산오류-정부 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2022. 11. 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 방식 명확화 등 정확성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선정 기준의 논란³²⁾ 및 수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유형 분류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선정이다.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여부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량의 규모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선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직접사업의 경우 비교적 판별이 용이하나 사업목적과 별개로 부수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간접사업의 경우 판별이 어려워진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매우 낮은 사업을 포함할 경우 그린워싱으로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부처에서 추가적인 보고서 작성과 사업관리의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축사업의 식별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축사업으로 부처가 식별한 사업 위주의 검토가 아니라 전체 예산 사업을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공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해당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사업별로 분석하였으며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입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

3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분석』, 2023의 내용을 참고할 것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 확대가 연계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신규 도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부처의 적극적인 감축사업 식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결과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제공하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쉬운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성적 기여도, 정량적 감축량, 성과지표 혹은 이행지표 달성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과 정보가 각 사업의 중요도와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되어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³³⁾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다양한 독자에게 전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국민, 언론, 예산 관련 정책결정자, 국회의 예산심의 관련자, 전문가 등 다양한 독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는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보도자료, 데이터 파일 등은 우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지속적인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분석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와 더불어 전담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담당부서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작성 방법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는 녹색예산제도의 단계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33)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500페이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 계획서는 718페이지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의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적용하고 있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의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정운용의 기후대응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예산 및 기금 외에 조세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감축사업 외에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적응과 관련한 사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관련 사업만을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예산은 최근

<표 13> 유럽연합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

항목		유럽연합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			한국
		1단계: 기본(Essential)	2단계: 발전(Developed)	3단계: 고급(Advanced)	
범위	환경 목표	- 기후변화 관련	- 기후변화 관련 - 그 외 일부 환경 목표	- 모든 기후·환경 목표	-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감축)
	예산 항목	- 긍정적 지출 - 긍정적 수입	- 긍정적인 항목 - 부정적인 항목	- 긍정적인 항목 - 부정적인 항목 - 조세지출	- 긍정적 지출
	일반 정부	- 국가(사회보장 포함)	- 국가(사회보장 포함) - 지방정부	- 국가(사회보장 포함) - 지방정부 - 기타(예: 공기업 + 예산 외)	- 국가
방법론	- 예산 식별 (Tagging)	- 예산 식별 (Tagging)	- 예산 식별(Tagging) - 정책의 사전 영향 평가 - 정책의 사후 영향 평가	- 예산 식별(Tagging) - 정책의 사전 영향 평가	
성과물	- 연간 예산 내 식별 - 예산 집행 보고	- 연간 예산 식별 - 예산 집행 보고 - 다년도 계획 추정치	- 연간 예산 내 식별 -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 - 다년도 계획 추정치 - 예산 외 지출 보고서	- 연간 예산 내 식별 - 예산 집행 보고	
거버넌스	- 임시 중앙 태스크포스(TF)	- 정규 전담 조직 (필요에 따라 분리되지 않음)	- 정규 전담 조직(필요에 따라 분리되지 않음) - 다양한 부처/기관 내의 녹색예산 담당자들	- 정규 전담 조직(필요에 따라 분리되지 않음) - 다양한 부처/기관 내의 녹색예산 담당자들	
투명성 및 책무성	- 모든 성과물 공개 - 방법론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 모든 성과물 공개 - 방법론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 성과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의회 토론	- 모든 성과물 공개 - 방법론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 성과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의회 토론 - 사후 검토	- 모든 성과물 공개 - 방법론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 2022, p. 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5/European%20Union%20Green%20Budgeting%20Reference%20Framework.pdf>, 검색일자: 2023. 4. 14.

홍수, 태풍,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높다. 또한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중장기 기후대응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와 더불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2023. 4.

_____,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2. 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3.

_____,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2.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3. 4.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3.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효과성 연구』, 수시연구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발간 예정

허경선·오형나,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Bova, E., Green Budgeting Practices in the EU: A First Review, European Economy Discussion Papers, European Commission, 2021.

Gonguet, F., C. Wendling, A. Ozlem, and B. Battersby, Climate-Sensitiv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Green PF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in 2022,” 2023, <https://www.slideshare>.

net/OECD-GOV/greenbudgetinginoecdcountriesin2022pdf, 검색일자: 2023. 8. 14.

OECD, "Spending Better: Post-Covid Budget Frameworks," 45th Annual Meeting of Senior Budget Officials, 2023.

『경향신문』,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조원 ‘뺑튀기’」, 2022. 10. 6.,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41826001>, 검색일자: 2023. 8. 6.

『동아일보』, 「“지구가 끓고 있다… 온난화 끝, 열대화 시대” 경고」, 2023. 7. 2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28/120465914/1>, 검색일자: 2023. 8. 6.

탄소중립포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https://www.gihoo.or.kr/netzero/user/board/promotion/nv_cardNewsView.do?bbscttId=BBSCCTT_0000000802&bbsId=CARDNEWS, 검색일자: 2022. 6. 27.

『KBS』, 「첫 탄소성적표 “계산오류·정부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2022. 11. 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02159>, 검색일자: 2023. 8. 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5/European%20Union%20Green%20Budgeting%20Reference%20Framework.pdf> 검색일자: 2023. 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3. 3. 28., 일부개정)

「국가재정법」(2022. 12. 31., 일부개정)

02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방법론의 비교 분석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sbae@kipf.re.kr)

I. 서론

최근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예로, EU는 관행적으로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해 왔던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역외국들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추후 2030년까지 EU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되는 모든 품목들에 확대할 예정으로 탄소가격의 광범위한 부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시적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탄소세는 장기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38개 국가 중 19개 국가들이 유류소비세 인하 정책을 취하였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탄소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²⁾은 탄소세를 인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1~2023년 기간 탄소세를 인상하여 탄소감축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가격시그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논의들은 대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1년 교통·에너지

1)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quarterly(IEA) 자료에 의하면 영국,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한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스페인, 룩셈부르크, 독일, 체코, 칠레, 벨기에, 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배진수, 2023a)

2)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배진수, 2023a)

탄소가격의 수용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외
경제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격 선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환경세 일몰 예정을 앞두고 「탄소세법안」³⁾이 발의되는 등 탄소가격의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 배출권거래제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 규제 및 재정·금융 수단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계류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회사무처, 2021. 11. 26.).

탄소가격의 도입은 여러 경제주체에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탄소가격 부과에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해외사례를 보면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이 철회되거나 도입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럿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산업계의 반발과 전기, 가스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2014년 탄소세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소비에 대한 탄소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세금 인상에 반발한 시민들의 노란 조끼 운동으로 인해 탄소가격 인상을 철회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에 에너지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자동차 연료 추가부담금과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60%의 찬성을 나타내었으나 실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가 있다.

이처럼 탄소가격의 도입이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나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및 수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조성진, 2021). 하지만 탄소가격의 수용성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국가별로도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선의 수용성 제고 방안(one-fit-all-solution)은 없다고 할 수 있다(UN, 2021, p. 46). 따라서 탄소가격의 수용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외의 경제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격 선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소가격 도입의 정치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들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본고에서는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론인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투표실험법(Referendum Experiment)을 사용하여 얻은 탄소가격

3)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부 개정안」,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을 발의함
4) 윤여창(2021), 조성진(2021), 배진수 외(2022) 등

부과의 수용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탄소가격 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설문 응답자의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를 통해 수행되므로 어떠한 결과를 얻더라도 해당 결과가 응답자들의 실제 선호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방법론이 응답자들의 선호를 왜곡해서 이끌어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⁵⁾ 따라서 방법론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방법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추후 연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좀 더 신뢰할 만하고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기존 해외 선행연구 중 실제로 존재하거나 논의되었던 탄소가격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Mildenberger et al.(2022)은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당 정책이 탄소가격 부과의 수용성을 확대시켜주는지 대규모 설문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Douenne and Fabre(2022)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이후 예정되었던 탄소세 인상이 유예되자 국가통계와 설문조사를 병합하여 탄소세를 기피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Carattini et al.(2017)은 스위스에서 2015년에 부결된 에너지 세제 개편 국민투표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상적인 대안에 관한 설문을 수행하여 탄소세에 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논의된 탄소감축 정책에 관한 수용성을 연구한 Leiserowitz et al.(2013), Kotchen et al.(2013)의 연구가 있으며, 독일의 1999년 에너지 개혁을 연구한 Beuermann and Santarius(2006), 영국에서 2001년 도입된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에 관해 연구한 Dresner et al.(2006), 프랑스에서 1999년에 도입되어 2000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환경세 개혁에 관해 연구한 Deroubaix and Lévêque(2006)가 있다.

본고는 위 연구들과는 달리 어떠한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 것은 아니며, 가상의 정책 상황에 대해 다양한 진술선호 방법론 간의 비교를 통해 실제 선택이 아닌 응답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방법론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그렇지 못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문에서 사용된 가상적 정책 상황은 기존 선행연

기존 해외 선행연구 중 실제로 존재하거나 논의되었던 탄소가격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5)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응답자들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설문상에서는 하게 되는 가상적 편향(hypothetical bias)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탄소가격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많으나
대표적인 요인들은
응답자의 특성,
탄소가격 정책의 특성
(탄소가격 수준,
수입활용 방안 등),
정보의 제공 유무
등이 있다.

구에서 탄소가격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주 다루어진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특정 정책으로 연관짓기보다는 후속 연구 및 정책적 논의의 참고로 삼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탄소가격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많으나 대표적인 요인들은 응답자의 특성, 탄소가격 정책의 특성(탄소가격 수준, 수입활용 방안 등), 정보의 제공 유무 등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환경친화적 성향, 소득 수준, 연령 등이 주로 분석 대상이 되었다. Thalmann(2004)은 스위스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진보적일수록, 환경친화적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60세 미만인 경우 탄소세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캐나다 밴쿠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Hsu et al.(2008)은 응답자들이 부유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미국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Kotchen et al.(2017)의 경우에는 나이, 성별, 교육연수, 가구원 수는 탄소가격 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pta(2016)는 인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과 교육 수준,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불의사 금액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이탈리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Rotaris and Danielis(2019)의 연구에서는 여성이거나,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할 때 지불의사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탄소가격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탄소가격의 크기, 수입의 활용방안, 면제 조항의 유무, 해외 국가의 도입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석 대상이 되나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대상은 수입의 활용방안이다. Carattini et al.(2017)은 스위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실험을 통해 응답자들이 수입을 전 국민 균등배분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소비세 감면이나 환경개선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노르웨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Sælen and Kallbekken(2011)의 연구는 응답자들이 에너지세 수입을 환경목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으며 정부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튀르키예에서 수행된 Gevrek and Uyduranoglu(2015)는 응답자들이 탄

소수입을 저탄소 기술 지원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소득층 지원보다 더 선호하였다. 영국의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에서 수행된 Bristow et al.(2010)의 연구는 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수입을 탄소감축 행태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수용성이 높았으며 지방세 감면, 탄소배당, 소득세 감면 등은 비슷한 수용성을 나타냈다. 가장 수용성이 낮은 것은 수입을 일반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한편 모든 성인들에게 탄소 배출 4톤까지 공제되는 정책을 매우 선호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Beiser-McGrath and Bernauer(2019)의 연구에서는 탄소세 수입을 법인세 감면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전 국민 균등배분, 탄소감축 기술투자, 소비세 감면, 사회적 약자 지원 모두에서 긍정적 선호를 보였으며, 선진국이 탄소가격을 도입하는 경우에 탄소가격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윤여창(2021)의 연구에서는 탄소감축 기술투자, 세금감면 정책이 수용성에 영향을 주

탄소가격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탄소가격의 크기, 수입의 활용방안, 면제 조항의 유무, 해외 국가의 도입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석 대상이 되나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대상은 수입의 활용방안이다.

<표 1> 선행연구 결과 정리

연구자	연구 특징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타
	방법	대상국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성별 (남성)	차 보유	가구원 수	환경 친화	
Thalmann(2004)	투표실험	스위스	-	+			-		+	도시에 거주하고 진보적일수록 선호
Hsu et al.(2008)	선택실험	캐나다		+	+		-			
Kotchen et al.(2017)	설문	미국	0	0	+	0		0		
Gupta(2016)	조건부가치 측정법	인도	-	+	+			+	+	
Rotaris and Danielis(2019)	조건부가치 측정법	이탈리아	-	+	+	-	+			
연구자	연구 특징		세수 활용방안					기타		
	방법	대상국	전 국민 균등배분	탄소감축 (환경개선) 기술투자	소비세 소득세 감면	사회적 약자 지원	법인세 감면			
Beiser-McGrath and Bernauer(2019)	선택실험	미국, 독일	+	+	+	+	-/0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선호		
Bristow et al.(2010)	선택실험	영국	+	++	+			1인당 탄소 4톤에 대한 공제를 선호		
Carattinit et al.(2017)	선택실험	스위스	+	-/0	0	+				
Sælen and Kallbekken (2011)	선택실험	노르웨이		+						
조성진(2021)	선택실험	한국 (원전과세)						목적세가 수용성을 높임		
윤여창(2021)	설문	한국	-	0	0					

출처: 해당 참고문헌을 기초로 저자 작성

본고의 목적은
탄소가격 수용성을
선택실험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투표실험법의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지 않았으며 탄소배당의 경우 오히려 수용성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과 탄소가격 정책의 특성(가격 수준, 국제동향을 고려한 도입 시기, 면제조항, 수입활용 방안)을 설문에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탄소가격의 정책적 특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투표실험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본고의 목적은 탄소가격 수용성을 선택실험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투표실험법의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참가자 간 설계(between-subject design)를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다.⁶⁾ 방법론별로 수용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용성은 특정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질 경우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하였다.⁷⁾

1.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선택실험법은 응답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alternatives)을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여 그 응답을 기초로 응답자들의 선호를 추론하는 방법론이다. 선택실험법은 2010년 전후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탄소가격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Bristow et al., 2010; Sælen and Kallbekken, 2011; Alberini et al., 2018; Carattini et al., 2017; Beiser-McGrath and Bernauer, 2019; Sommer et al., 2022).

선택실험법에서 주어지는 대안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attributes)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1]은 선택실험연구에서 응답자들이 보게 되는 설문 문항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설문에서는 하나의 탄소가격 정책은 그 정책이 부과하는 탄소가격의 크기, 면제조항의 포함 여부, 도입 시기, 수입의 활용 방안과 같이 해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탄소가격의 여러 특성들을 비교하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6) 각 응답자들이 한 가지 방법론에만 참여하였으며 각 방법론에 참여한 서로 다른 참여자들의 수용성을 비교하였다는 의미이다.
7) 선행연구들의 경우 수용성을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 간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와 같은 리커트 척도로 수용성을 측정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는 0에서 11점 사이에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 간의 수용성 비교가 어렵다.

[그림 1] 선택실험법 설문 문항 예시

Q. 3가지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안은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정책 A와 정책 B를 대비하여 탄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정책 A	정책 B	현재 정책 유지
탄소배출 비용	4만원/톤 가구 평균 연 26만원 부담	6만원/톤 가구 평균 연 40만원 부담	-
면제 조항의 유무	면제 조항 없음	면제 조항 없음	-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유무	해외 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중국, 인도 등 다배출 국가 도입 시 도입	-
탄소 배출 비용 수입 활용방안	법인세 감면	탄소 감축기술 투자	-
선택	[]	[]	[]

- **소득세 감면:** 탄소배출감축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 소득세 감면에 활용
- **법인세 감면:** 탄소배출감축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 법인세 감면에 활용
- **탄소배당:** 탄소배출감축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분배
- **탄소 감축기술 투자:** 탄소배출감축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경 기술에 투자
- **취약계층 보조:** 탄소배출감축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을 취약계층 보조에 활용

출처: 배진수 외(2022, p. 174)

선택실험법에서 응답한 설문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로짓이나 혼합로짓과 같은 확률효용 모형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선택된 대안을 분석하여 응답자들이 각각의 특성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선택실험법에서 응답한 설문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이나 혼합로짓(Mixed Logit)과 같은 확률효용 모형을 사용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은 설문 문항이 주어진 조건부 로짓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응답자 i 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j 를 선택하는 경우의 효용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⁸⁾ T_{ij} 는 탄소가격의 크기이며 E_{ijk} , G_{ijk} , R_{ijk} 각각 면제조항 유무,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여부, 수입의 활용방안과 같은 정책 특성에 대한 변수를 의미한다.

$$V_{ij} = \bar{V}_{ij} + \epsilon_{ij} = \alpha T_{ij} + \sum_{k=1}^3 \gamma_k E_{ijk} + \sum_{k=1}^3 \beta_k G_{ijk} + \sum_{k=1}^6 \theta_k R_{ijk} + \epsilon_{ij} \quad \text{식 (1)}$$

응답자들이 여러 대안 중 정책 j 를 선택하게 될 확률은 그 정책이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확률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단, 탄소가격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의 효용은 0이라고 가정한다.

추정된 계수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의 수용성,
즉 찬성비율이다.

$$\begin{aligned}
 P_{ij} &= \Pr(V_{ij} > V_{im}) \quad \forall j \neq m \\
 &= \Pr(\overline{V}_{ij} + \epsilon_{ij} > \overline{V}_{im} + \epsilon_{im}) \\
 &= \Pr(\epsilon_{ij} - \epsilon_{im} > \overline{V}_{im} - \overline{V}_{ij})
 \end{aligned}
 \tag{2}$$

여기서 ϵ_{ij} 가 1종 극단값 분포(Extreme Value type 1 distribution)를 따르며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_{ij} = \frac{\exp(\overline{V}_{ij})}{\sum_{m=1}^3 \exp(\overline{V}_{im})}
 \tag{3}$$

개별 응답자들이 설문 K 개의 선택상황에서 응답하는 경우 응답자 i 가 t 번째 설문에서 j 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P_{it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로그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L = \sum_{i=1}^N \sum_{t=1}^K \sum_{j=1}^3 y_{itj} \ln(P_{itj})
 \tag{4}$$

이렇게 도출된 로그 우도 함수를 바탕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⁹⁾

추정된 계수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의 수용성, 즉 찬성비율이다. 이 비율은 응답자 i 가 정책 j 를 현 상황(Status Quo)보다 더 선호할 확률과 같으므로 $pr[V_{ij} > 0]$ 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투표 실험법으로 얻은 수용성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선호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형태를 취한다. 해당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가상적인(Hypothetical)

9) 조건부 로짓모형을 활용한 추정방식이며 추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진수 (2023b)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해당 정부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선호를 도출해낸다 (Arrow et al., 1993).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한 예시는 Kotchen et al.(2013), Gupta(2016), Rotaris and Danielis(2019) 등이 있다. 예를 들어 Kotche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응답자들에게 탄소감축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 금액의 생활비 지출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기를 제시하여 물어보았다.¹⁰⁾

[그림 2]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 문항 예시

Q. 다음은 특정 탄소가격체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가격 정책이 도입된다면 해당 정책에 따라 연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특징 1.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의 탄소가격 면제
- 특징 2. 미국과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이 도입 시 유사하게 도입
- 특징 3. 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정부수입은 전액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에 사용

해당 탄소가격에 따른 수용 가능한 가구 평균 연간 지불금액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수 활용방안의 혜택은 고려하지 않은 순지불금액. 예를 들어 탄소가격으로 연간 20만원을 지출하면 정부정책에 따라 30만원어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도 지불금액이 2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

탄소가격 부담 수준	체크
0원/톤(휘발유 0원/L 상승), 가구 연평균 0원	
0.6만원/톤(휘발유 12.6원/L 상승), 가구 연평균 0~5만원	
1.3만원/톤(휘발유 27.3원/L 상승), 가구 연평균 5~10만원	
2.0만원/톤(휘발유 42.0원/L 상승), 가구 연평균 10~15만원	
2.7만원/톤(휘발유 56.7원/L 상승), 가구 연평균 15~20만원	
3.5만원/톤(휘발유 73.5원/L 상승), 가구 연평균 20~25만원	
4.2만원/톤(휘발유 88.2원/L 상승), 가구 연평균 25~30만원	
5.0만원/톤(휘발유 105.0원/L 상승), 가구 연평균 30~35만원	
5.7만원/톤(휘발유 119.7원/L 상승), 가구 연평균 35~40만원	
6.5만원/톤(휘발유 136.5원/L 상승), 가구 연평균 40~45만원	
7.2만원/톤(휘발유 151.2원/L 상승), 가구 연평균 45~50만원	
8.0만원/톤(휘발유 168.0원/L 상승), 가구 연평균 50~55만원	
8.7만원/톤(휘발유 182.7원/L 상승), 가구 연평균 55~60만원	
기타(가구 연평균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	

출처: 저자 작성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선호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가상적인(Hypothetical) 정부 정책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Congress is considering a [randomize ‘cap-and-trade policy’ or ‘carbon tax policy’ or ‘policy to regulate carbon dioxide as a pollutant’] that would reduce U.S. greenhouse gas emissions 17% by 2020. This policy would increase the cost of living for all American households. In support of this policy, what is the maximum amount your household would be willing to pay each year for the next 10 years? (select one answer) \$0, \$26, \$60, \$121, \$157, \$193, \$250, \$475 or more, Don't know.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선택실험법과 다른 점은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특정한 탄소가격 정책을
응답자에게 가상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이다.

<표 2>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제시한 가상적 상황

구분	면제조항의 유무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동향을 고려한 도입 시기	탄소배출 비용 수입 활용방안
정책 1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정책 2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법인세 감면
정책 3	고용이 많은 기업의 탄소가격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탄소 감축기술 투자
정책 4	고용이 많은 기업의 탄소가격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특정 목적 없음 (국가 재정 기여)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탄소가격의 특징을 가상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불 의사를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선택실험법과 다른 점은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특정한 탄소가격 정책을 응답자에게 가상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 실험법은 응답자들이 (탄소가격 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나,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들이 연구자가 특정하여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되므로 대안 간의 비교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지불의사에 집중하여 응답하게 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는 <표 2>의 네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용의를 도출하였다. 응답자들은 특정 탄소가격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탄소가격의 수준이 자신의 지불용의보다 낮으면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불용의 정보를 이용하면 특정 탄소가격 정책을 수용할 응답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른 방법론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투표실험법(Referendum Experiment, RE)

본 연구에서 투표실험법이라고 지칭하는 방법은 탄소가격 정책에 대한 가상적인 국민투표 상황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찬성,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투표실험법에서 사용된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은 탄소가격의 특성과 가격을 제시받고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기권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투표실험법은 앞서 말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유사하나 일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투표 상황이 현실에서 국민의 선호를 취합하는 데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실제 선택과 가까운 환경에서 응답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응답자들이 탄소가격의 크기에 대해 단조적(monotonic)인 형태의 선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들은 탄소가격이 연간 4만원/톤이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탄소가격이 연간 5천원/톤이면 해당 정책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다. 투표실험법은 이러한 비단조적인 선호를 가진 경우에도 응답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¹¹⁾ 반면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은 응답자 선호의 단조성을 가정하므로 만일 응답자들 선호의 비단조성이 강하다면 투표실험법의 결

투표실험법은 응답자들이 실제 선택과 가까운 환경에서 응답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응답자들이 탄소가격의 크기에 대해서 단조적인 형태의 선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 투표실험법 설문 문항 예시

Q. 다음은 특정 탄소가격체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가격 정책이 도입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래 표에서 각 탄소가격에 대한 **찬성 여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징 1.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의 탄소가격 면제
- 특징 2. 미국과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이 도입 시 유사하게 도입
- 특징 3. 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정부수입은 전액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에 사용

탄소가격 수준	찬성	반대	의견 없음
5천원/톤(휘발유 10.5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약 3만원 부담			
1만원/톤(휘발유 21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약 6만원 부담			
2만원/톤(휘발유 42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13만원 부담			
4만원/톤(휘발유 84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26만원 부담			
6만원/톤(휘발유 126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40만원 부담			
9만원/톤(휘발유 189원/L 상승) 가구 평균 연 60만원 부담			

(탄소가격 수준은 정부의 세수 활용방안의 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불하는 탄소가격 수준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11)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지불 의사를 숫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응답자들이 더 낮은 가격의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선택실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43쪽의 식 (1)을 보면 응답자들의 효용은 탄소가격이 커지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앞선 방법론들에서
 수용성을 산출하는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만일 응답자들이
 모든 방법론에서
 동일한 선호를 표현한다면
 방법론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수용성을
 얻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과가 다른 두 방법론과 상당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투표실험법에서 제시된 가상적 상황은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주어진 가상적 상황과 동일하다(<표 2> 참고). 투표실험법에서는 설문 그 자체가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 찬성할 사람과 찬성하지 않을 사람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탄소가격의 수용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른 방법론들을 통해 얻은 수용성과 비교하였다.

4. 비교분석 방법 요약

<표 3>은 앞선 방법론들에서 수용성을 산출하는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만일 응답자들이 모든 방법론에서 동일한 선호를 표현한다면 방법론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수용성을 얻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방법론의 특성이 응답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면 수용성의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결과들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 방법론 비교 요약

방법론	수용성의 계산	특성
선택실험법 (CE)	• 확률효용 모형의 계수를 추정한 후 특정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 찬성할 응답자의 비율($pr[V_{ij} > 0]$)을 계산	• 응답자들이 정책 간 비교를 통해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형태 • 응답자의 선택을 확률효용 모형을 이용해 선호를 도출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 특정 탄소가격 정책에 대한 지불용의가 탄소가격 수준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	• 응답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불 의사를 응답하는 형태
투표실험법 (RE)	• 특정 탄소가격 정책에 대해서 찬성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 응답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가부를 응답하는 형태 • 비단조적인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가능함

출처: 저자 작성

IV. 연구결과

1. 선택실험법 분석결과

선택실험법의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¹²⁾ 탄소가격의 경우 예상대로 계수

12) 추정된 결과의 자세한 해석은 배진수 외(2022), 배진수(2023b)를 참고할 수 있다.

<표 4> 선택실험 모형 추정결과

특성	수준	계수	지불용의 (만원/톤)
탄소가격의 크기	{0.5,1,2,4,6}만원/톤	-0.217*** (0.00899)	
면제 조항의 유무	1. 면제 조항 없음	-	-
	2.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0.0143 (0.0443)	-0.066
	3.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0.181*** (0.0497)	-0.834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동향을 고려한 도입 시기	1. 해외 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	-
	2.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에 도입	-0.00583 (0.0422)	-0.027
	3. 중국, 인도 등 다배출 국가 도입 시에 도입	-0.0471 (0.0409)	-0.217
탄소 배출 비용 수입 활용방안	1. 특정 목적 없음(국가 재정 기여)	-	-
	2. 전 국민 균등 배분	0.575*** (0.0560)	2.650
	3. 탄소 감축기술 투자	0.395*** (0.0611)	1.820
	4.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0.528*** (0.0617)	2.433
	5.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0.427*** (0.0603)	1.968
	6. 법인세 감면	-0.0630 (0.0646)	-0.290
상수		0.778*** (0.0648)	
표본 수		8,820	

-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 2. 더미 변수에 대한 계수 값은 참조 변수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 3. 표본 수는 응답자들이 응답한 선택 상황의 수를 의미하며 1인당 9개를 응답했기 때문에 총 980명의 응답자들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 4.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배진수 외(2022, p. 121), 배진수(2023b)에서 발췌

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응답자들은 낮은 탄소가격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탄소가격의 계수로 다른 특성의 계수를 나누면 이는 각 특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용의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수입을 전 국민 균등 배분에 활용하는 것에 지불용의가 2.650만원/톤¹³⁾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탄소가격 수입을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 국민 균등 배분에 활용하는 경우 탄소가격이 2.650만원이 올라가도 응답자들의 효용은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추정된 계수를 통해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수용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용성은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 효용이 현 상황의 효용보다 더 큰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pr[V_{ij} > 0]$). 본고는 선택실험법에서 얻은 수용성을 조건부가치측정법과 투표실험법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므로 해당 방법론들에서 질문이 이루어진 <표 2>의 네 가지 탄소가격 정책에 대해서 수용성을 산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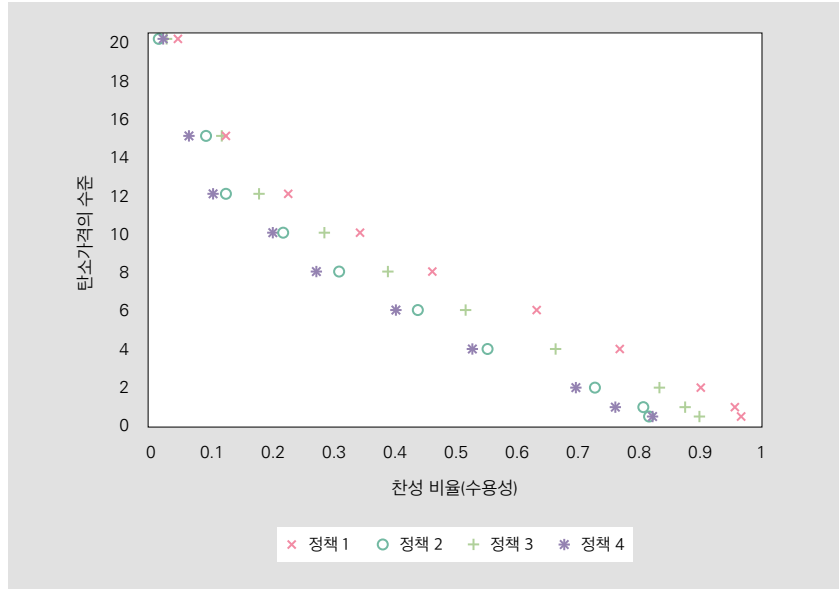
선택실험법에서
수용성은
탄소가격 정책이
주어졌을 때 효용이
현 상황의 효용보다
더 큰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13) 참고로 이산화탄소 1톤은 휘발유 약 434.7ℓ를 소비할 때 배출되는 양이며 이는 연비가 16km/ℓ인 차량이 서울, 부산을 약 8회기량 왕복 가능한 양이다. 탄소 배출 1톤당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휘발유 1ℓ 소비에는 약 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림 4]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얻은 계수를 이용하여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그래프이다.

[그림 4] 선택실험법으로 얻어진 탄소가격의 수용성

(단위: 만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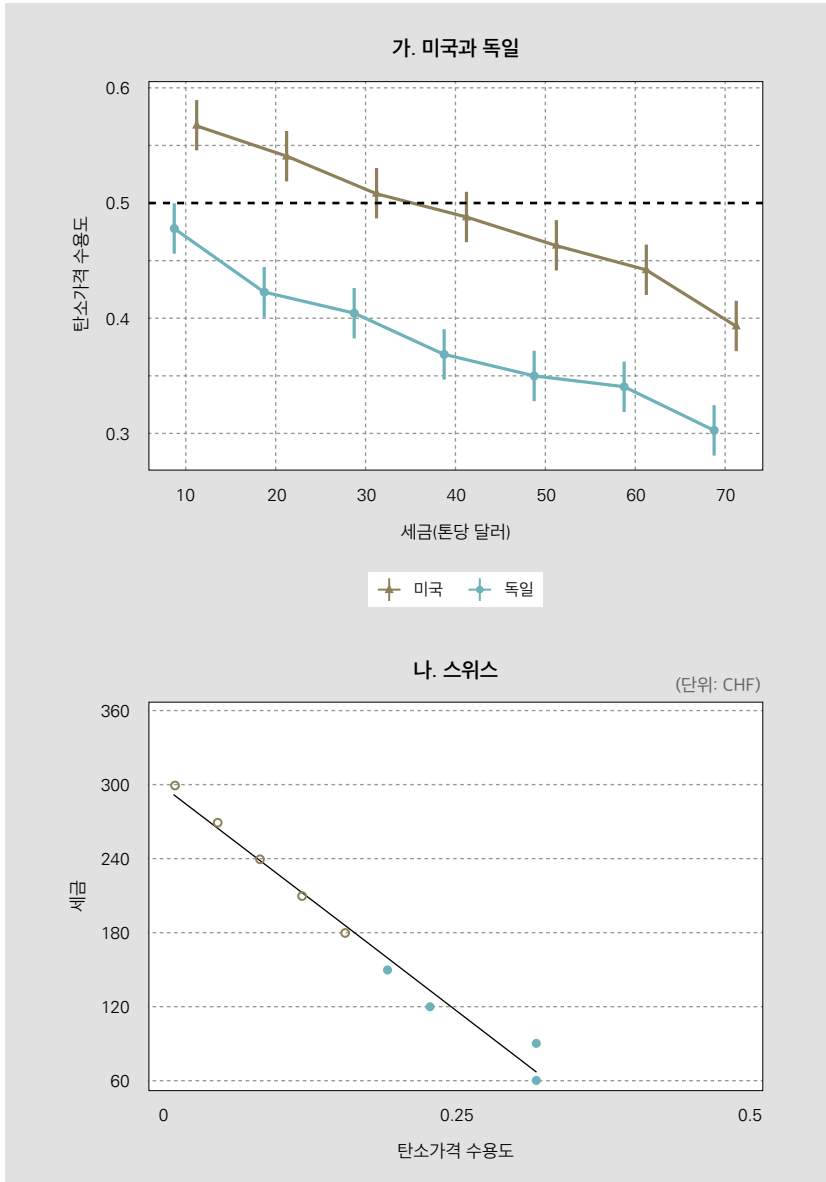


주: x: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o: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법인세 감면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탄소 감축 기술 투자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특정 목적 없음(국가 재정 기여)
 출처: 배진수(2023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얻은 계수를 이용하여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그래프이다. 추정된 수용성의 크기를 보면 낮은 탄소가격 수준에서는 높은 수용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에서의 수용성이 더 높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5]는 미국, 독일, 스위스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낮은 가격대에서도 수용성이 과반을 못 미치거나 겨우 과반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탄소가격의 수용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탄소가격 수준이라고 해도 탄소가격 정책의 특성이 다른 경우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탄소가격 정책의 설계에 따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수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5] 선행연구에서의 탄소가격 수용성



출처: Beiser-McGrath and Bernauer(2019), Carattinit et al.(2017)

탄소가격 수준이 높아지면 탄소가격 정책의 특징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되며 가격 수준이 수용성의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소가격의 수준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탄소가격 수준이 높아지면 탄소가격 정책의 특징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되며, 가격 수준이 수용성의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된다. 또한 탄소가격 정책의 특징이 실질적으로 정책 도입의 가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정책 특성 변화를 통해 수용성이 50% 이하에서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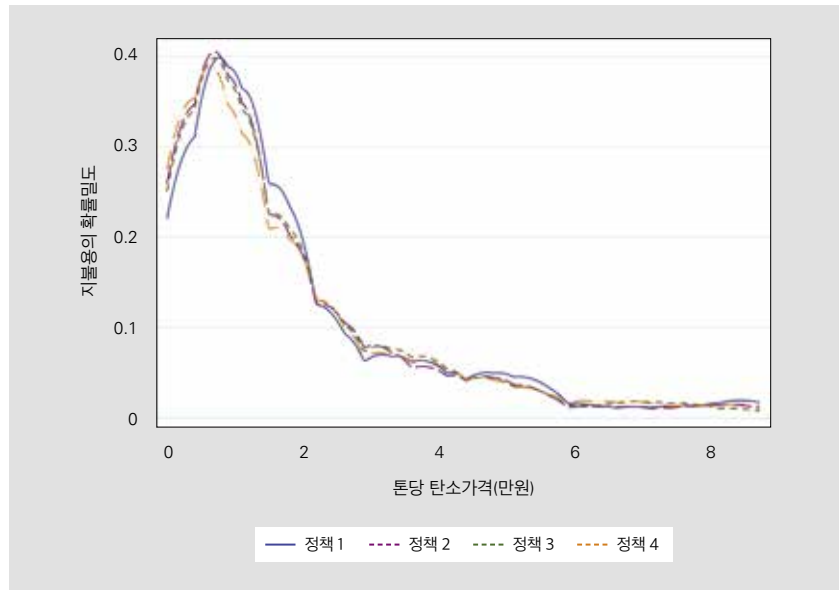
[그림 6]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문 응답을 기초로 지불용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네 가지 정책의 지불용의 분포는 낮은 탄소가격 수준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으로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탄소가격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다른 연구 방법론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

[그림 6] 지불용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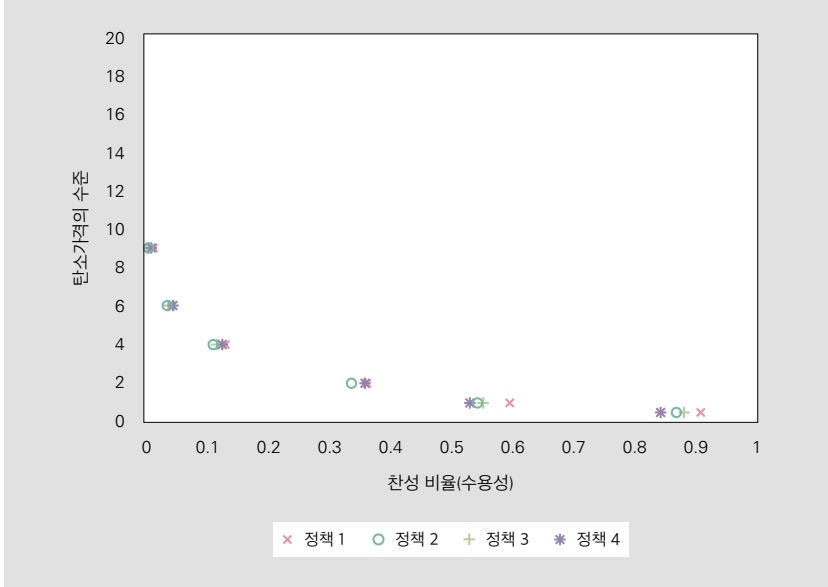


주: 정책 1: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정책 2: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법인세 감면
 정책 3: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탄소 감축 기술 투자
 정책 4: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특정 목적 없음(국가 재정 기여)
 출처: 배진수(2023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문 응답을 기초로 지불용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네 가지 정책의 지불용의 분포는 낮은 탄소가격 수준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가격 약 1만원/톤 정도의 지불용의를 지닌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의 가격에서는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지불용의를 가진 응답자가 줄어드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6만원/톤 이상의 가격에서는 지불용의 확률밀도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낮은 탄소가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림 7]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탄소가격의 수용성

(단위: 만원/톤)



[그림 7]은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도출된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탄소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탄소가격 정책 간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 :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법인세 감면
- +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탄소 감축 기술 투자
- *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특정 목적 없음(국가 재정 기여)

출처: 배진수(2023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볼 수 있다.

[그림 7]은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도출된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탄소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탄소가격 정책 간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천원/톤에서 첫 번째 정책 조합은 90.8%의 수용성을 나타냈으며 네 번째 정책은 84.2%의 수용성을 나타내어 6.6%p의 차이를 보였으며, 1만원/톤에서 첫 번째 정책은 59.6%, 네 번째 정책은 53.2%의 수용성을 보여 6.4%p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탄소가격이 2만원/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책 간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아 탄소가격 수준이 수용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택실험법의 수용성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탄소가격이 낮을 경우 탄소가격 정책의 특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탄소가격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수용성 결정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며, 정책의 특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선택실험법에서
 도출된 수용성이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도출된 수용성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택실험법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탄소가격 특성이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도 가장 수용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론들이 응답자들의 상대적인 선호를 잘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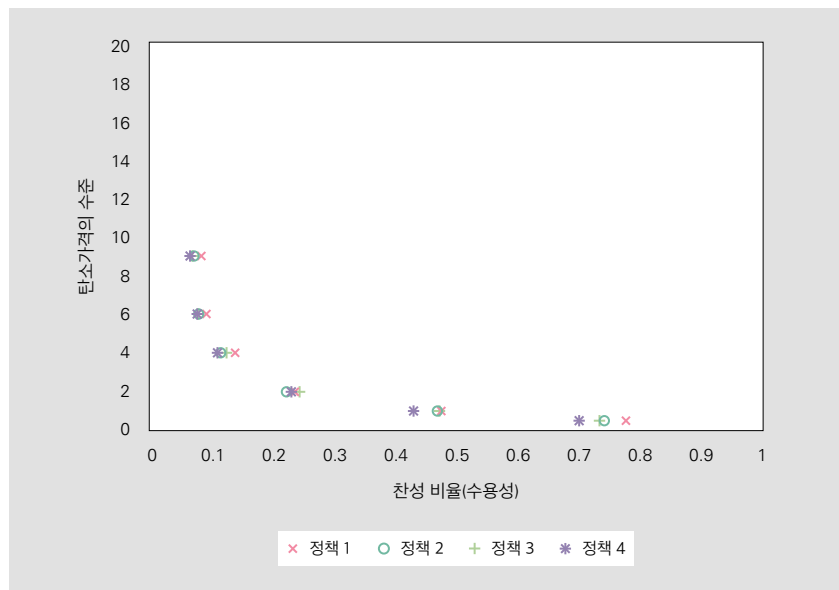
하지만 두 방법론은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택실험법에서 도출된 수용성이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도출된 수용성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법론의 선택에 따라 탄소가격 수용성의 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투표실험법

[그림 8]은 투표실험법을 통해서 얻은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투표실험법은 상기하였듯이 응답자들 선호의 단조성(monotone)을 강

[그림 8] 투표실험법으로 얻어진 탄소가격의 수용성

(단위: 만원/톤)



주: ×: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 도입, 법인세 감면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탄소 감축 기술 투자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해외국가 도입 여부 무관하게 도입, 특정 목적 없음(국가 재정 기여)
 출처: 배진수(2023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하지 않으므로 응답자들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는 탄소가격의 크기가 2만원/톤 정도이면 해당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동일한 정책의 탄소가격이 5천원/톤이면 탄소가격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응답자들의 선호가 비단조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투표실험법의 결과는 다른 방법론들과 크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림 8]은 투표실험법을 통해 도출된 탄소가격 수용성을 나타낸 것이다. 선택실험법 및 조건부가치측정법과 공통적으로 탄소가격이 낮을 때에는 탄소가격의 특성에 따라 수용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천원/톤의 탄소가격에서는 첫 번째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이 77.7%로 나타났으나 네 번째 탄소가격 정책은 70.1%로 나타나 7.6%p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1만원/톤의 가격에서도 첫 번째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은 47.6%를 나타내었고 네 번째 정책은 43.1%를 나타내어 4.5%p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탄소가격이 2만원/톤의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탄소가격의 수용성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 탄소가격이 수용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조건부가치측정법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며 선택실험법의 결과와도 정성적으로 유사하다.

한편 투표실험법에서 가장 높은 수용성과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인 탄소가격의 특성이 선택실험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동일하게 나온 것은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탄소가격 특성 간 상대적 선호를 잘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투표실험법의 결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들이 대체로 단조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¹⁴⁾

다만 투표실험법에서 얻어진 수용성의 정량적인 크기는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투표실험법은 국민투표와 같이 실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과 다른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투표실험법의 결과는 실제 응답자들이 탄소가격 정책에 대해 수용성이 크게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투표실험법은 국민투표와 같이 실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14) 다만 개별 응답자를 기준으로 비단조적인 선호를 가지는 응답자는 상당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배진수(2023b)를 참고할 수 있다.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정책의 특성으로 인한
수용성의 차이가
줄어드는 점도
세 방법론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탄소가격 수준이
수용성의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선택실험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투표실험법 세 가지의 진술선호 연구방법론을 통해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세 방법론은 정성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수용성의 정량적인 분석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어 한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탄소가격 정책의 수용성을 분석하는 경우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주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론 모두 낮은 가격대에서는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었으나 탄소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도 충분한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해외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이며, 국내의 응답자들이 최소한 낮은 가격 수준에서 탄소가격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방법론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탄소가격 정책과 수용성이 가장 낮은 탄소가격 정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정책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진술선호 방법론들이 일관성 있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수용성을 상대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고려하는 경우 진술선호 방법론들의 결과를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정책의 특성으로 인한 수용성의 차이가 줄어드는 점도 세 방법론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탄소가격 수준이 수용성의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책의 비교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높은 탄소가격 수준에서 가격의 절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탄소가격의 수용성 크기에는 방법론 간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여 방법론 간 차이점을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선택실험법은 다른 두 방법론에 비해 상당히 큰 수용성의 크기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선택실험법은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에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선택실험법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과대한 수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제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경제학 문헌에서는 선택실험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교하는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바가 있으며 해당 두 가지 방법론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택실험법에서는 응답자가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응답하는 반면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는 금전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응답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He et al.,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의 특성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실험법을, 특정 대안에 대한 금전적인 수용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후속 연구들은 방법론 간 정량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견고한 연구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방법론 간 정량적인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대안의
특성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실험법을,
특정 대안에 대한
금전적인 수용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6호』, 보도자료, 2021. 11. 26.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
- 배진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a.
- _____, 『탄소가격 수용성 연구 방법론의 외적타당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b.
- 배진수·고지현·정재현,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윤여창,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KDI, 2021.
- 조성진,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 Alberini, A., Bigano, A., Ščasný, M., and Zvěřinová, I., "Preferences for energy efficiency

- vs. renewables: what is the willingness to pay to reduce CO2 emissions?," *Ecological Economics*, 144, 2018, pp. 171~185.
- Arrow, K., Solow, R., Portney, P. R., Leamer, E. E., Radner, R., and Schuman, H.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58(10), 1993, pp. 4601~4614.
- Beiser-McGrath, L. F. and Bernauer, T., "Could revenue recycling make effective carbon taxation politically feasible?," *Science Advances*, 5(9), eaax3323, 2019, pp. 1~8.
- Beuermann, C. and Santarius, T., "Ecological tax reform in Germany: handling two hot potatoes at the same time," *Energy Policy*, 34(8), 2006, pp. 917~929.
- Bristow, A. L., Wardman, M., Zanni, A. M., and Chintakayala, P. K., "Public acceptability of personal carbon trading and carbon tax," *Ecological Economics*, 69(9), 2010, pp. 1824~1837.
- Carattini, S., Baranzini, A., Thalmann, P., Varone, F., and Vöhringer, F. "Green taxes in a post-Paris world: are millions of nays inevitabl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68(1), 2017, pp. 97~128.
- Deroubaix, J. F., and Lévêque, F., "The rise and fall of French Ecological Tax Reform: social acceptability versus political feasibility in the energy tax implementation process," *Energy policy*, 34(8), 2006, pp. 940~949.
- Douenne, T., and Fabre, A., "Yellow vests, pessimistic beliefs, and carbon tax aver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4(1), 2022, pp. 81~110.
- Dresner, S., Dunne, L., Clinch, P., and Beuermann, C., "Social and political responses to ecological tax reform in Europ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Energy policy*, 34(8), 2006, pp. 895~904.
- Gevrek, Z. E. and Uyduranoglu, A., "Public preferences for carbon tax attributes," *Ecological Economics*, 118, 2015, pp. 186~197.
- Gupta, M., "Willingness to pay for carbon tax: A study of Indian road passenger transport," *Transport Policy*, 45, 2016, pp. 46~54.
- Hsu, S. L., Walters, J., and Purgas, A., "Pollution tax heuristics: An empirical study of willingness to pay higher gasoline taxes," *Energy Policy*, 36(9), 2008, pp. 3612~3619.

- Jie He, Jérôme Dupras & Thomas G. Poder, "The value of wetlands in Quebec: a comparison between contingent valuation and choice experi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6(1), 2017, pp. 51~78.
- Kotchen, M. J., Boyle, K. J., and Leiserowitz, A. A., "Willingness-to-pay and policy-instrument choice for climate-chang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nergy Policy*, 55, 2013, pp. 617~625.
- Kotchen, M. J., Turk, Z. M., and Leiserowitz, A. A., "Public willingness to pay for a US carbon tax and preferences for spending the revenue,"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2(9), 2017, pp. 1~5.
- Leiserowitz, A., Maibach, E., Roser-Renouf, C., Feinberg, G., Marlon, J., and Howe, P. *Public Support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in April 2013*, Connecticut: Yale University, 2013.
- Mildenberger, M., Lachapelle, E., Harrison, K., and Stadelmann-Steffen, I., "Limited impacts of carbon tax rebate programmes on public support for carbon pricing," *Nature Climate Change*, 12(2), 2022, pp. 141~147.
- Rotaris, L. and Danielis, R., "The willingness to pay for a carbon tax in Ital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67, 2019, pp. 659~673.
- Sælen, H., and Kallbekken, S., "A choice experiment on fuel taxation and earmarking in Norway," *Ecological Economics*, 70(11), 2011, pp. 2181~2190.
- Sommer, S., Mattauch, L., and Pahle, M. "Supporting carbon taxes: The role of fairness," *Ecological Economics*, 195, 2022.
- Thalmann, P., "The public acceptance of green taxes: 2 million voters express their opinion," *Public Choice*, 119(1), 2004, pp. 179~217.
- UN, *United Nations Handbook on Carbon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2021.



정책토론키포트

+ 2023년도 PEMNA 연차총회



2023년도 PEMNA 연차총회

개요

- **주 제** Making Fiscal Decentralization Work for Growth and Better Service Delivery
-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 11월 9일(목)
- **주 최** 라오스 재무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참 석 자** 146명
 - PEMNA 11개 회원국 공무원,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전문가
 - 참가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14개 회원국 중 11개국 참석¹⁾)

1)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불참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회의는 2023년 11월 7~9일 3일에 걸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관, 라오스 재무부 및 세계은행(WB) 주최 하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성장과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화(Making Fiscal Decentralization Work for Growth and Better Service Delivery)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분과별 세부 회의주제는 아래와 같음

- 예산분과: 효과적인 재정분권 방안(Effective Intergovernmental Fiscal Arrangements)

- 국고회계분과: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통합 재정정보시스템(FMIS for Better Service Delivery)

DAY 1

11월 7일(화)

Opening Session

Welcome Remarks

• Phouthanouphet Saysombath (Lao PDR)

■ 라오스 재무부 차관 Phouthanouphet Saysombath는 환영사를 통해 라오스의 최근 공공재정 관리 개혁과 재정분권화 정책을 소개하고, 2023 PEMNA 연차총회가 라오스와 회원국들의 공공재정관리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원함

■ 라오스는 공공재정 강화를 위해 2017년에 Vision to 2030과 Public Finance Development Strategy to 2025를 채택하였고, 총 세 단계에 걸쳐 공공재정관리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 근대화 도입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현재 라오스는 두 번째 이행 단계에 있으며, 보다 제도화된 PFM을 운영하고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 현 단계의 목표임
- PFM 개혁은 비단 재정 부문뿐 아니라 법률, 거시경제, 투자, 기업 활동 등에서도 라오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라오스는 PFM 개혁과 재정분권화 달성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간 예산 규모, 기업관리 역량 등에서 존재하는 지역 격차로 인해 재정분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라오스는 본 총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를 소망하며, 참석자들이 국가별 예산관리 방식, 관련 법적 제도, 재정정보시스템(FMIS) 발전을 위한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FMIS 개혁과 관련된 지식도 공유할 것을 장려함
- 마지막으로 Phouthanouphet Saysombath 차관은 성공적인 총회를 기원하고, 2024년부터 아세안(ASEAN)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라오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연설을 마침

Opening Remarks I

• Mariam J. Sherman (The World Bank)

- Mariam J. Sherman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PEMNA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며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회원국들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장려함
- 1990년 이전까지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에 지방정부가 전체 공공투자 지출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분권화가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분권화 정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함

- 분권화는 경제, 공공서비스 조달, 거버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건, 사회 질서, 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권화 정책이 필수이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정부 간 행정처리 방식 △지방정부로의 예산 이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체계의 부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정정보시스템(FMIS) 조화의 부재 △인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
- 위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증대하여 분권화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체계 개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며, 공공투자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켜 국가채무가 악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 본 총회와 같이 주변국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간 경제·정치·행정·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함

Opening Remarks II

• Hankyeung Choi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심의회관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 △불안정한 재정 환경 등의 트라일레마(trilemma)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화합과 협력,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최 심의관은 “성장과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본 총회가 트라일레마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대화와 토론을 장려함

■ 아울러 한국의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분권화에서 가지는 역할을 언급하며 트라일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함

■ 또한 최 심의관은 2012년 PEMNA가 발족한 이래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한 세계은행, 유럽연합, 그리고 회원국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본 총회가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되길 소망함

Opening Remarks III

• Niall Leonard (EU)

■ 주라오스 EU대사관의 대사대리 Niall Leonard는 재정분권화가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주요 국가 경제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가의 포용적 성장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저

축을 장려하고 이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관할 지역의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

● 일례로 비엔티안 타임스(Vientiane Times)의 기사를 인용하여, 올해 라오스 정부가 9개 주(province)에서 거두어들인 세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례를 소개

■ Niall Leonard는 본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기원함

Joint Session

Keynote Speech I

• Serdar Yilmaz (The World Bank)

■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Serdar Yilmaz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존재 의의를 정치, 행정, 재정 측면에서 설명함

■ 정부는 미시 경제의 안정화, 소득 재분배,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존재하며 특히 효율적인 자원 분배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가지는 핵심

기능임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 공공재와 서비스의 수요와 비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함
-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선거와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체 법률과 규율을 제정하여 지역 사회의 개발과 안전, 복지에 기여함
-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이때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평(equality)과 공정(equity)의 가치를 준수해야 함
 -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수혜자의 역량과 납세 능력도 서비스 공급 시 고려 대상임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정분권화 정도는 모두 다르며, 2021년 기준 분권화 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있음
-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재정분권화는 앞으로 계속 중요한 현안이며, 각 국가와 지역의 정세를 고려한 분권화 정책이 필요함

Keynote Speech II

• Sifong Oumavong
(Ministry of Finance, Lao PDR)

- 두 번째 기초연설자인 라오스 재무부의 Sifong Oumavong은 재정분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재정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함
- 효과적인 공공재정관리는 △투명한 제도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확대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 등에 의해 뒷받침됨
- Sifong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라오스의 공공재정관리 개혁은 위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함
 - 현재 라오스는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재정분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Sifong은 본 총회가 성공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연설을 마침

Joint Presentation

• Damien Ruggeri (EU)
• Christina Popivanova (UNICEF)

- EU와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Public Finance Facility(PFF)는 아동을 위한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협력 국가들을 지원함

- PFF는 아동과 관련된 SDG 목표 1(빈곤 종식), 3(건강과 복지), 4(양질의 교육), 16(평화, 정의와 제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고자 함
 - 최근 발생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위기와 국가 부채 상승으로 이어져 올바른 예산 사용을 저해함
 -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국가들은 SDG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임
 - EU와 UNICEF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 이는 정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로섬 게임을 방지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함
 - 높은 수준의 재정분권화를 달성한 국가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용이함
 - 아태지역 국가들은 교육, 보건, 사회안전 분야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재정분권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사회안전 분야에서 달성률이 높음
 - 단, 지역의 인구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함
- 아태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와 SDG 달성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 위기와 미래의 불확

실성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원 분배, 장기간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정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예산분과 Session 1

Global and Regional Trends in Sub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Presentation 1

• Delphine Moretti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 분야 고위 공무원 회의체(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 SBO)를 통해 회원국들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올바른 거버넌스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재정분권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또한, OECD 내 네 개의 유관 부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며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세계 정부들은 낮은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안게 됨
 - 지방정부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아태지역의 지방정부 지출

규모는 다른 지역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인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위해 데이터 공유와 성과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
 - 명확한 재정 목표와 장기계획 수립, 지속적인 지출 보고 등이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지출을 장려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자산, 잉여 현금 등을 모니터링해야 함

Presentation 2

• Sylvie Zaitra, Elodie Maria-Sube
(Switch-Asia EU)

- 유럽연합(EU)의 Switch-Asia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개혁 촉진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로, 스페인 및 아태 지역의 환경보호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입 사례를 소개함
- EU의 그린딜(Green Deal)은 75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32개가 승인되었음. 특히, 친환경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은 해당 법안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SDG 및 그린딜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 EU 회원국들은 이미 높은 GPP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GPP는 특히 건설과 수송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는 공공 조달의 50%를 GPP로 이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전기차 사용 및 녹색기업 지원 등을 장려하며 시민 감사를 통해 GPP 달성률을 높이고자 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율이 도입됨
 -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율은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되며, 말레이시아 재무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2021년부터 GPP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태국은 2005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GPP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제4차 GPP 증진 계획을 시작함
 - 이 계획은 2027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더 많은 기관들의 GPP 참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결과적으로 그린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함

국고회계분과 Session 1

Evolution of the FMIS and its Impact on Decision Making and Accountability

Presentation 1

• Khuram Farooq (The World Bank)

- Khuram Farooq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FMIS)의 발전 과정과 활용 실태, 그리고 IFMIS가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바를 소개함
- 예산관리의 세 가지 핵심은 예산관리규정 준수(budget compliance), 현금 계획(cash planning), 투명성 및 의사결정이며, IFMIS는 이 핵심 사항들에 준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데 기여함
 - IFMIS는 재정정보관리의 각 절차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능별로 분류된 세 가지 주요 모듈로 운영됨
 - 각 모듈이 수집한 정보는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보고용으로 활용됨
- IFMIS의 장점은 데이터 통합(consolidation)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 IFMIS의 성공적인 도입과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숙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지출, 회계 계정과목(Charter of Accounts, CoA) 등을 위한 기본 모듈이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IFMIS에서 다뤄지지 않는 기금과 지출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창고, 파키스탄의 대시보드 사례를 소개하면서 IFMIS의 재정정보 분석 기능이 효과적인 재정 집행과 부패 척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Presentation 2

• Muhammad Priandi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FMIS는 국가재무예산시스템(SPAN)과 SAKTI라 불리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회계 처리를 통해 국가 재정 투명성 재고에 기여함
- FMIS(재정정보시스템)는 공공재정관리 과정들을 하나로 합친 시스템으로, 신속한 데이터 보고, 의사결정 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 분야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짐
- 인도네시아는 2001년에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2003년과 2004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FMIS 혁신의 선도자 역할을 함
 - FMIS 개혁을 담당하는 부서(Directorate General of Treasury, DGT)를 재무부 내에

설립하였고, DGT는 양질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률 및 조직 개혁을 담당함

- 인도네시아의 FMIS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초기에는 수기 작성으로 정보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T)을 시스템에 접목한 이후 현재까지 발전 중임

■ 인도네시아의 FMIS는 재무부가 관리·사용하는 SPAN과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출부서(spending unit)에서 사용하는 SAKTI로 구성되어 있음

- SPAN과 SAKTI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어 있음
- 이 두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보고와 회계 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회계 감사, 현금 유동성 예측,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성 증대 등에 기여함
- 특히 SAKTI 도입 이후 현금 계획에 맞추어 지출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금 계획의 정확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이룸

■ 인도네시아는 실시간 보고와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FMIS를 발전시킬 계획임

-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국가의 실정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IT 도입, FMIS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함

Presentation 3

• Hyeon Cheol Han (Korea)

■ 한국은 기존 FMIS였던 dBrain을 발전시킨

dBrain+를 운영 중이며, dBrain+로의 발전은 재정 투명성과 사용자 편리성을 증대함

■ 2007년에 3세대 한국형 FMIS로 도입된 dBrain은 국가 재정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저장함으로써 정보 관리 및 저장을 용이하게 하고 재정정보 투명성 증대에 기여함

- 그러나 재정정보가 방대해지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dBrain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dBrain의 단점을 보완한 dBrain+는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에 도입됨

- 현재 dBrain+ 이용자 수는 1만 9,800명이며 △모듈화 △디지털화 △개방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증대함
- dBrain+는 개방형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dBrain+에 저장하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표준 형태로 정보를 저장함
-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는 자동으로 dBrain+에 저장되며, 이는 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창출함
- dBrain+는 135개의 재정정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정보 분석에 용이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됨
- dBrain+에 저장된 정보는 열린재정(Open Fiscal Data)에 공개되어 대중들이 재정정보에 접근이 용이함

Presentation 4

• Vanphone Phommasone (Lao PDR)

- 기존 재정정보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한 라오스는 세 단계에 걸친 IFMIS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IFMIS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라오스 재무부는 CoA, PFM, 예산 운용 기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무부는 정부재정정보시스템(GFIS)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표준화된 집행 방식의 부재로 문제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재무부는 IFMIS를 세 단계에 걸쳐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첫 번째 단계를 이행하는 중임
 - 재무부는 IFMIS 도입이 예산과 현금, 부채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정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재정 투명성 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하리라 기대함
 - 이 시스템은 라오스 정부 기관, 국제기구, 기타 외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FMIS에서 제공하지 않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케 하고자 함
-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IFMIS는 계획보다 지연된 시스템 발전 속도, 제한된 사용자 범위, 관련 법률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재무부는 관련 기업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IFMIS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Presentation 5

• Saleh bin Hashim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통합재정관리회계시스템(iGF-MAS)으로 불리는 FMIS를 도입하면서 예산을 관리 및 담당하는 부서들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의사결정, 비용편익 분석, 회계 분석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재정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발생주의 회계 도입, 예산 계획안 수립에 자산 평가 도입, 법률 정비 및 제정이 그 예임
 - 특히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는 말레이시아가 iGFMAS를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임
 - iGFMAS로 실시간 온라인 보고가 가능해졌고, 최신 기술을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목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와 생산성, 효율성을 증대함
 - 데이터가 iGFMAS에 자동으로 실시간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보고가 가능해지면서 iGFMAS는 정확한 의사결정에도 기여함
 - 또한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MyCost라 불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iGFMAS와 함께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음

- iGFMAS는 감사 전 과정을 기록하며, 잘못된 접근과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서버도 운영함
 -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발달로 iGFMAS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FMIS는 이전과 비교하여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명성 증대 역시 iGFMAS를 통해 성취한 괄목할 만한 발전임
- 4차 산업, IT,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면서 iGFMAS는 한층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DAY 2

11월 8일(수)

예산분과 Session 2

Making Fiscal Decentralization Work for Productive and Inclusive Growth

Presentation 1

• Lyme Ty (Cambodia)

- 다양한 법률 제정 및 행정·재정 개혁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을 위한 발전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캄보디아는 25개의 주(州)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함

-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이 분권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과 행정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와 기타 수입원을 활용함

-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 예산의 12%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2023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3% 증가함
- 정부의 주 수입원은 세금, 임대료, 조건부 이전 (conditional transfer) 등이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 사회 발전, 지역사회 치안, 일반 행정의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자체들 또한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함
- 그보다 하위 단위인 코뮌(commune)에서도 세외수입, 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더 밀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캄보디아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수입원을 보유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사용함

- 다만 이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수입원 확보, 관련 법률 강화, 담당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Presentation 2

• Ilham Hadiana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 종교, 국가 안보 등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
 - 지방분권화를 통해 재정분권화도 이루어졌으며, 지역 간 불평등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그러나 여전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학교 출석률 등의 특정 지표에서는 지역 간 큰 격차가 존재함
- 인도네시아의 재정분권 개혁은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필요시 선택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재정분권화를 통한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 지출낭비 방지, 국가 전체의 복지과 번영 창출이 개혁의 목적임
 -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성과 및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등 특정 분야의 성과에 기반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농촌 지역의 경우 농촌기금(village fund)을 조성하여 농촌과 그 외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며,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지출낭비 방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resentation 3

• Sujin Park (Korea)

- 한국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독립적인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금 이전, 보조금, 기금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구 규모, 생산성, 고용률 등에서 지역 간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재정분권화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
 -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자율성, 공정성, 결속성, 성장 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독려함
 -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조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특수구역 지

정, 교육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

계획 중임

- 한국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균형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함

Presentation 4

• Souvankham Soumphonphakdy (Lao PDR)

- 라오스는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구분하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아직 재정분권화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님
 - 중앙정부는 관세, 국세, 벌금 등을 징수하고, 이러한 수입 중 일부를 주(州), 지역(district), 마을(village) 단위의 지방정부로 이전함
 -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의 수입 상승률과 예산 집행률이 지방정부보다 높아 재정분권화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방정부 내에서도 주 단위 정부의 수입 상승률과 예산 집행률이 지역 단위보다 더 높음
- 라오스의 사례는 아직 재정분권화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예산 집행 단계에서 더 큰 현실을 보여주고, 재정분권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안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화를 위한 더욱 명료한 지침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Presentation 5

• Idwan Ariff Abdul Rahman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존재함. 특수한 사례인 대출과 보증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지방법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1년에 최소 1회 국립 재정협의회(National Finance Council)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실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지방정부를 위한 14개의 보조금이 존재하며, 2022년에는 사라왁주(Sarawak)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
 - 국가 예산에서 지방정부 보조금은 전체 지출 중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예산은 기타 행정 비용과 국가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토지 임대료, 자연 광물 수입, 종교 수입 등을 통해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항구세, 목재 수출세와 같이 특정 주(사바(Sabah), 사라왁)에서만 징수하는 세금도 존재함
 - 13개의 주 중에서는 사라왁주가 가장 수입이 많으며, 사바주와 슬랑오르주(Selangor)가 그 뒤를 따름

-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재정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공서비스 비용의 증가, 불안정한 수입 증가율, 화폐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

Presentation 6

• **Andria Patricia C. Labudahon**
(The Philippines)

- 필리핀 지방정부는 원래 내국세 중 일부만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세수의 40%를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분권화되었음
 - 대법원 판결로 중앙정부가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는 감소했지만, 그에 비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였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진행함
 -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PFM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실시된 프로젝트의 수가 상이하며, 현 예산 배분은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와 면적에 따라 예산이 분배된 기존 방식 대신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과 빈곤율에 따라 예

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Presentation 7

• **Farat Somsaen (Thailand)**

- 태국은 헌법과 예산·재정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재정분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요청하면, 담당 부처 및 내무부의 검토와 승인 이후 예산을 지원받음
 - 지방정부는 예산이 승인된 후 지역 발전 기여 및 기존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예산 지출안 작성, 자원 소요 계획안 작성이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전통 보존 등과 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 검토함
 - 또한 국가 계획과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원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정부의 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예산, 지방세, 보조금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음
 - 지방정부의 수입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함
 - 한편, 재무부 웹사이트는 예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과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지방정부는 전년도 예산, 공공지출의 결과와 효과, 예산 계획과 국가 계획 간의 관계 등을 기술

한 예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각 지역의 예산실(Area Budget Office)은 예산 집행을 관장하고 지방 공무원들의 예산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태국의 재정분권 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Presentation 8

• Vu Duc Hoi (Vietnam)

■ 베트남의 국가예산법(State Budget Act)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수입의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전됨

- 국가 수입 중 광산사용료, 토지세 일부, 복권 수입 등은 전액 지방정부로 이전되며, 소득세와 일부 부가세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입을 배분함

■ 중앙정부의 예산은 소속 부처·기관과 지방정부, 원조 등을 위해 사용되며, 지방정부 역시 지역 단체와 자체 기금 마련 등에 예산을 사용함. 다만, 지방정부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정부에 예산을 분배함

- 이와 같이 베트남의 예산 분배는 하의상달식과

정과 상의하달식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분배될 예산은 국회가 제정한 정책에 부합해야 함

- 예산이 지방정부에 분배된 이후에는 각 지역의 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함

■ 베트남은 민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가의 성장과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분권화를 실시하며, 국회와 지역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함

-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사안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함
-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수입 증가와 사회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중앙정부도 국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 성공적인 재정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수입 감소,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성 부족, 지방정부 간 협력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극복 방안을 모색 중임

예산분과 Session 3

Multi-level Fiscal Reforms for Enhanced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Risk Management

Presentation 1

• Guang Li (Hunan Province, China)

■ 중국 후난성은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의

회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함

■ 후난성은 정부 수입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미래 재정 위기를 예방함

- 매년 후난성 내 부서들은 예산 집행 현황과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을 점검하여 예산 낭비 여부를 확인함. 모든 부서의 활동들이 평가 대상이며,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평가를 진행함
- 프로그램 이행 이전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전문가 참여의 예산관리 평가도 실시하여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함
- 자체 평가, 부서별 평가, 포괄적 재정성과 평가로 구성된 이러한 평가는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10개 이상의 관리 규율을 제정하여 모든 예산이 평가와 관리의 대상임을 명시함

■ 또한, 예산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임

- 성과 관련 데이터는 모두 공유되어 예산 집행 결과가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예산성과 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

Presentation 2

• Quynh Nhi Bui (Ho Chi Minh City, Vietnam)

■ 호찌민시는 베트남 면적의 0.6%를 차지하지만, 2022년 국가 수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임

■ 베트남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도시, 지역, 코뮌으로 나누어진 지방정부에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를 형성하였고, 2022년에는 지방자치제 예산 구조를 개편하여 각 수준의 지방정부가 각자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 해당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은 그 지방의 소유이지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다른 수준의 지방정부들과 공유됨
- 지방정부는 예산을 교육, 보건, 안보 등 13개 분야에 지출함

■ 호찌민시의 수입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의 약 6분의 1이 자체 수입원에서 창출됨

- 전체 지출 중 52%는 자본 지출이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의 지출이 34%로 가장 많음

- 지방정부의 예산은 관련 법률(Law on State Budget)과 국회 결의안에 따라 집행됨
 - 국회 결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각 지방이 특수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호찌민시의 사례는 정부예산 수반 정책을 수행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민과의 소통,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등이 중요함을 시사함
 - 호찌민시는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파일럿 실험을 통해 현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임

국고회계분과 Session 2

Harmonization of FMIS at Subnational Government Level

Presentation 1

• Rama Krishnan, Khuram Farooq
(The World Bank)

- 지방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FMIS)에는 현재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여 FMIS의 기능이 지방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FMIS는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 성과 모니터링, 투명성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됨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방정부

FMIS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FMIS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FMIS에 기록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FMIS는 체계적이지 않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정과목표 구성의 차이점으로 인해 두 계정과목표 간 일관성이 부족함
- 또한 지방정부에는 FMIS 전문가가 많지 않으며 IFMIS 프로젝트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우가 적음
- 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FMIS 운영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시스템 관리 주체, 시스템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 외부 감사 등을 고려해야 함

-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은 예산관리와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IFMIS에 저장된 데이터는 예산 집행 내역과 재정통계 보고,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됨
 - 이 외에도 IFMIS는 외부 PFM 시스템과 연동되어 다양한 예산·재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그러나 현재 IFMIS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으며, 관련 법률 부재, 전문가 부족 등으로 IFMIS가 본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문제점 진단 – 정책 마련 – 해결책 도입 – 기술 도입’의 네 단계로 IFMIS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계정과목표 구성을 세분화·표준화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IFMIS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협업하여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오스트리아, 프랑스,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IFMIS를 사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앙정부와 전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IFMIS가 각각 한 개씩 존재함
 - 반면 인도와 나이지리아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IFM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IFMIS의 형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름

Presentation 2

• Te Yourroath (Cambodia)

- 캄보디아의 FMI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 발전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캄보디아는 2008년 FMIS 도입을 시도하여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2017년에는 기존 FMIS를 발전시켜 이전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함
- 캄보디아는 국가 행정을 위한 예산과 지방 행정을 위한 예산을 구분하고, 지방 행정 예산은 각

지방정부 내 재무담당 부서가 집행함

- 그러나 캄보디아의 FMIS는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모든 정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고함
- 중앙정부의 사업은 FMIS 내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은 다른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시스템은 불필요한 작업 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보안 문제도 있음
- FMIS에 저장된 정보는 FMIS Portal V1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 모두 공개 대상임
 - 위 포털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 예전 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러나 FMIS와 마찬가지로 포털 운영에 필요한 자원 부족, 관련 부처 간 협업 부족, 관련 법률과 정책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캄보디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FMIS의 구성을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Presentation 3

• Rentsenkhand Vanchin (Mongolia)

- 몽골은 1993년에 재무부가 창설된 이후 예산·재정 데이터를 취합하고 공개하는 정부재정정보시스템(GFMIS)을 2005년에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음

- 몽골 재무부는 2002년 재무단일계정(Treasury Single Account)을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재무단일계정을 한 개씩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계정 탓에 업무 부담이 가중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에 GFMS가 도입되었음
 - 그러나 인터넷 전산망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재무부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음
- GFMS는 웹 기반의 형태로 2018년에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며, 이전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함
 - 새 GFMS는 공공투자관리시스템, 급여(payroll)시스템, 포털시스템, 전자서명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며 이 기능들을 처리한 시스템들은 2022년에 통합되었음
 - GFMS의 발전은 투명성 제고, 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효과적인 현금 관리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함
- 몽골의 GFMS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안 유지와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GFMS 발전을 도모하는 중임

Presentation 4

• Zhen Xie (Hunan, China)

- 중국 후난성은 중국 중앙정부의 성공적인 GF-

MI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재정관리와 디지털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GFMS를 발전시킴

- 2019년 중국 정부가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을 발표한 이래, 2021년까지 중국의 14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후난성 역시 통합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 중 한 곳이며, 이와 같은 통합관리는 정보 공유, 관리 기준의 표준화, 예산 규율 준수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음
- 후난성은 표준화된 업무 강령을 도입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배치한 한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킴
- 그러나 여전히 부서별로 예산관리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느린 시스템 처리 속도,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난성은 다양한 모듈 간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일관된 업무 처리 방식을 장려하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Presentation 5

• Andi Panca Wardana (Bojonegoro, Indonesia)

-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지역에 위치한 보조네고로(Bojonegoro)는 FMIS가 도입된 2008년

이전까지는 수기로 예산 관련 데이터를 입력 하였으나, 2008년에 지방정부를 위한 FMIS인 SIMDA를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FMIS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 지방정부에 도입된 FMIS는 정부의 분권화,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보조네고로는 예산·재무 관리와 예산 보고를 위해 2003년에 개발된 SIMDA와 지역 발전 계획과 조달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된 SIPD의 두 가지 FMIS를 사용 중임
 - 이 두 가지 시스템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재정관리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임
 - FMI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정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오류가 감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네고로는 발전된 형태의 재정관리를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시스템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부족,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변화시키면서 극복하고 있음
 - 보조네고로는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제로 현금(zero cash), 현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네고로의 사례는 FMIS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함을 보여줌

국고회계분과 Session 3

System interfaces of the FMIS and lessons learnt

Presentation 1

• Alexandre Streicher (France)

- 프랑스는 CHORUS라 불리는 FMIS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에 재정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는 예산 관련 행정업무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CHORUS는 2008년부터 국가 행정업무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에 모든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소속 기관과 지방정부 내 의회, 기관들도 모두 CHORUS를 사용하고 있음
 - CHORUS는 250개 부처의 정보를 보관하는 국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재정관리, 온라인 인보이스 작성, 구매 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CHORUS의 여러 응용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업무 수행의 편리성을 높임
 - 응용프로그램 간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CHORUS는 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 통신 규약(protocol) 등을 도입함

■ 첫 도입 이후 CHORUS는 응용프로그램 연결성 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효과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함

- 기존의 정보관리시스템이 수행했던 역할에 회계거래(accounting transaction) 기능이 추가됨
- CHORUS의 인터페이스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EDI 모드로 구축되었으나, 2016년에 PISTE라 불리는 API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이를 CHORUS에 적용하면서 CHORUS는 온라인 인보이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됨
- 현재 CHORUS는 EDI와 API를 모두 사용함

■ CHORUS의 현 인터페이스는 프랑스 재무부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부처별 인터페이스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운영됨

- 프랑스 재무부가 CHORUS를 총괄하며, 다양한 부처들의 요구를 수집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담당함

로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온라인서비스 사용률을 기록함

■ 2021년 11월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요청받은 납입 건을 수동 방식으로 처리하였지만, 현재는 처리 방식도 온라인으로 변화함

-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이 기존의 3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위 성공에 힘입어 베트남은 전기, 수도, 전화요금과 같은 월례 고정지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안함

- 위 입장을 제출한 서비스 공급자들은 베트남 재무부의 공공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FMIS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청구 및 징수할 수 있음
- 현재 3만 7,386개의 국가 예산 지출부서가 위 방식을 사용하여 4,100만달러 규모의 세금을 징수함
-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과 정확성, 투명성 증대의 효과를 창출하고 효과적인 현금 유동성을 가능케 함
- 이 효과를 전기와 수도 요금 징수에도 더욱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전기 공급자들이 사용하는 IT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

Presentation 2

• Nguyen Thi Minh Phoung (Vietnam)

■ 베트남은 모든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연간 200만건이 넘는 납입 요청을 온라인으

Presentation 3

• Arif Wibawa (Indonesia)

• Cahyo Nugroho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FMIS는 납세자, 기업, 정부가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SPAN과 SAKTI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재무관리에 혁신을 불러옴

- 2022~2023년 SPAN 사용자는 2억 5,777만명으로, 84개의 정부 부처와 541개의 지방정부가 사용 중임
 - SPAN은 데이터 센터, 광역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준비 및 집행을 수월하게 함
 - SPAN과 함께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SAKTI, 요금청구시스템 인터페이스인 MPN도 FMIS를 구성함
 - 인도네시아의 FMIS에는 OM SPAN이라 불리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어 투명성을 제고함
- 복잡하지만 긴밀하게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통합에 기여하고 저장된 정보 관리를 수월하게 함
 - SPAN이 도입되면서 은행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해짐
 - OM SPAN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현 예산 규모 및 지출,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SPAN에 저장된 정보는 지방정부와도 공유되어 지방정부의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함
-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FMIS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단기간에 도입될 수 없는 인

적·기술적 한계를 지닌 시스템임을 보여줌


DAY 3

11월 9일(목)

WRAP UP SESSION

Closing Remarks

• **Kyoungsun Heo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PEMNA 사무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3일간의 연차총회가 PEMNA 11개 회원국의 재무부 공무원 및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EU), OECD, UNICEF 등 국제기구 참석자들이 모여 성장과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교류의 장이었음을 언급하며, 특히 후난(중국), 보초네고로(인도네시아), 사라왁(말레이시아), 보릭함싸이(라오스), 호치민, 다낭(베트남)과 같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음을 언급함
-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발표자, 국제전문가, 분과 의장, 분과 간사,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본 회의를 주최한 라오스 재무부 차관 Phouthanouphet Saysombath와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2024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Inflation Adjustments)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11월 9일, 60개 이상의 소득·세액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발표함^{1), 2), 3)}

- 국세청은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토대로 내국세 입법(IRC)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해 매년 조정함
- 동 조정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감소, 과세표준 구간 이동 등을 방지함
 - 동 조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므로 2025년 제출할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됨
- 주요한 조정사항은 과세표준, 표준공제, 근로장

<표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단위: 달러)¹⁾

구분	부부합산		부부 별도		세대주		독신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10%	~23,200	~22,000	~11,600	~11,000	~16,550	~15,700	~11,600	~11,000
12%	23,201~ 94,300	22,001~ 89,450	11,601~ 47,150	11,001~ 44,725	16,551~ 63,100	15,701~ 59,850	11,601~ 47,150	11,001~ 44,725
22%	94,301~ 201,050	89,451~ 190,750	47,151~ 100,525	44,726~ 95,375	63,101~ 100,500	59,851~ 95,350	47,151~ 100,525	44,726~ 95,375
24%	201,050~ 383,900	190,750~ 364,200	100,526~ 191,950	95,376~ 182,100	100,501~ 191,950	95,351~ 182,100	100,526~ 191,950	95,376~ 182,100
32%	383,900~ 487,450	364,200~ 462,500	191,951~ 243,725	182,101~ 231,250	191,951~ 243,700	182,101~ 231,250	191,951~ 243,725	182,101~ 231,250
35%	487,450~ 731,201	462,500~ 693,750	243,726~ 365,600	231,251~ 346,875	243,701~ 609,350	231,251~ 578,100	243,726~ 609,350	231,251~ 578,125
37%	731,201~	693,750~	365,600~	346,875~	609,350~	578,100~	609,350~	578,125~

주: 1) 2023년 12월 11일 기준 1달러는 약 1,318원임

출처: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 - Part I," 2022. 10.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9_us_4%23tns_2022-10-19_us_4, 검색일자: 2023. 12. 11.

- 1)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4," 2023. 11. 9.,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4>, 검색일자: 2023. 11. 24.
- 2)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4 - Part I," 2023. 1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3_us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 3) Bloomberg, "IRS Releases 2024 Inflation-Adjusted Payroll Amounts (1)," 2023. 11. 1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MGNST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Ww0cy81ZDU1Mzk2NTE3OWI1NTJhMDhmMTMxMzE3N2VkdWlWYiJdXQ-f15d240afe49d52b7457acafa8da0a94d81e12b6&criteria_id=5d553965179b558c08f1313177ed020b&search32=ohP-BwgiVEPvsH-ediiHUsG%3D%3DWFMTNZlzmwjH-ayypWQdjXWJBOM2pG_k_dvV9Tk-OKR_iYKuYtJLk8C1FX8xUscKGQ_EFb07QWcu7elyQoer2Olv-Lorf_kzJctfgEVjV6ftNsZcKbbRtmfPnAD4ivCzAGqlyh9ebEbDoTghab_6EBVdiltNJZhtShX3T55Fw9j8F7Hl7vmEAYFFSDFkKrRwtd8ZkLMNRFOA-wP_axiw_NH6wAojVal5nH2JwEnt1gtS06mg7PTPz-ztbfMORYbBSKfKzmG8Czj_SJtYZzztY9k2OL8UfJAF_CzskMLn56KNs5_sG_EL_Zl8-OpGrAr, 검색일자: 2023. 11. 27.

려세제, 해외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음

-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조정함
 - 소득세 최고세율인 3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73만 1,201달러,⁴⁾ 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36만 5,601달러,⁵⁾ 세대주와 독신의 경우 60만 9,351달러⁶⁾ 이상으로 조정함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는 아래와 같이 조정됨

<표 2> 소득세 표준공제 조정

신고유형	2024년 ¹⁾	2023년
부부개별 및 독신 신고	14,600달러 (약 1,882만 6,700원)	13,850달러
부부합산 신고	29,200달러 (약 3,765만 3,400원)	27,700달러
세대주 신고	21,900달러 (약 2,824만 50원)	20,800달러

주: 1) 2023. 11. 29. 기준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7,430달러⁷⁾에서 7,830달러⁸⁾로 조정됨
-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12만달러⁹⁾에서 12만 6,500달러¹⁰⁾로 조정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2024년 연금계획(CPP) 발표]

■ 캐나다 국세청은 2023년 11월 1일, 2024년 캐나다 연금계획(the Canada Pension Plan, CPP)을 발표함^{11), 12)}

- CPP는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연금제도로, 캐나다는 CPP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 동 발표에는 새로운 소득상한(maximum pensionable earnings)인 CPP2(second additional CPP contributions)에 대한 내용이 담김
 - 2024년부터 시행되는 CPP2는 새로운 소득상한으로 기존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다른 요율을 적용함¹³⁾

4)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9억 4,288만 2,400원임

5)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4억 7,144만 2,489원임

6)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7억 8,575만 6,825원임

7)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958만 985원임

8)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009만 6,785원임

9)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억 5,474만 원임

10) 2023년 11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억 6,312만 1,750원임

11)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venue Agency announce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and contributions for 2024," 2023. 11. 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3/maximum-pensionable-earnings-contributions-2024.html?utm_source=mediaroom&utm_medium=eml, 검색일자: 2023. 11. 27.

12) IBFD, "Canada to Increase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Amount, Implements Second Earnings Ceiling for 2024," 2023.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6_ca_1.html, 검색일자: 2023. 11. 27.

13) Government of Canada, "Canada Pension Plan Enhancement: Second CPP Contribution," 2023. 6. 2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cra-multimedia-library/businesses-video-gallery/canada-pension-plan-enhancement-second-cpp-contribution.html>, 검색일자: 2023. 11. 29.

- 소득상한액은 연간 평균 임금증가율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되고 2024년 소득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 소득상한액은 6만 6,600캐나다달러¹⁴⁾에서 6만 8,500캐나다달러¹⁵⁾로 인상됨
 - 면제소득액(basic exemption amount)은 3,500캐나다달러¹⁶⁾임
 - 새로운 소득상한액인 CPP2는 7만 3,200캐나다달러¹⁷⁾임
 - 6만 8,500~7만 3,200캐나다달러¹⁸⁾ 구간에서는 CPP2가 적용됨

<표 3> 2024년 CPP 요율 및 최대기여금

구분	2024년	2023년
직원 및 고용주	5.95% (각 3,867.50CAD)	5.95% (각 3,754.45CAD)
자영업	11.90% (7,735.00CAD)	11.90% (7,508.90CAD)

<표 4> 2024년 CPP2 요율 및 최대기여금

구분	2024년
직원 및 고용주	4% (각 188.00CAD)
자영업	8% (376.00CAD)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영국

[2023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 영국은 2023년 11월 22일, 2023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을 발표함^{19), 20)}
 - 금번 예산안은 연간 약 150억파운드²¹⁾ 규모의 법인세 감면 계획을 담고 있으며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금번 예산안이 투자 활성화, 근로에 대한 보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함
- 법인세 및 기타 세목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정책을 발표함²²⁾
 -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R&D SME scheme)는 2024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존 연구개발비 지출 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 RDEC)와 합쳐질 예정임
 -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 기업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6년

14) 2023년 11월 30일 원화 환산 시 약 6,328만 5,318원임

15) 2023년 11월 30일 원화 환산 시 약 6,509만 755원임

16) 2023년 12월 11일 원화 환산 시 약 339만 4,930원임

17) 2023년 11월 30일 원화 환산 시 약 6,955만 6,836원임

18) 2023년 11월 30일 원화 환산 시 약 6,509만 755~6,955만 6,836원임

19) IBFD, "United Kingdom - Tax Cuts for Working People and Businesses Headline Chancellor's 2023 Autumn Statement," 2023. 11.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2_uk_3.html, 검색일자: 2023. 11. 23.

20)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3," 2023. 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5e107697196d000d985d6b/E02982473_Autumn_Statement_Nov_23_Accessible_v3.pdf, 검색일자: 2023. 11. 23.

21)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조 6,147억원임

22) IBFD, "United Kingdom - Autumn Statement 2023 in Depth: Chancellor Introduces Permanent Full Expensing, other Measures for Businesses," 2023. 1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7_uk_3.html, 검색일자: 2023. 11. 30.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를 영구화함

- 영국은 지난 2023년 3월, 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즉시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시 동 제도를 2023년 4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²³⁾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 신규 특별투자구역 역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특별투자구역에서의 세금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숙박·소매·레저 업종 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법인세 75% 인하 조치도 5년간 연장하기로 함
 - 동 조치는 산출된 법인세액의 75%를 감면하며, 기업당 최대 11만 파운드²⁴⁾를 한도로 함
- 주세는 2024년 8월까지 동결될 예정임

■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요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²⁵⁾

- 2024년 1월 6일부터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요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함
 - 이를 통해 연간 3만 5,400파운드²⁶⁾의 소득

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는 2024/2025연도에 450파운드²⁷⁾ 이상 국민보험을 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2024년 4월 6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NI 부과를 폐지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영국은 2023년 11월 10일, 암호화폐의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힘^{28), 29)}

- 공동성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48개 국가³⁰⁾ 및 관할권이 참여하였음
- 공동성명의 참여국은 2027년까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3호, p. 8
 24) 2023년 12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270만원임
 25) IBFD, “United Kingdom - Autumn Statement 2023 in Depth: Chancellor Announce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Measures,” 2023. 1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27_uk_4.html, 검색일자: 2023. 11. 30.
 26)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47만원임
 27) 2023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만원임
 28)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Joins Collective Agreement to Imple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3.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7_uk_1.html, 검색일자: 2023. 11. 23.
 29) GOV.UK., “Policy Paper - International Joint Statement on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3. 11.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joint-statement-on-th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 검색일자: 2023. 11. 23.
 30)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아일랜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3년 11월 15일, 암호화폐의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힘^{31), 32)}

- 공동성명의 참여국은 2027년까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가 발표한 DAC 8지침을 통해 CARF를 이행해야 함
 - EU 재무장관이사회(ECOFIN)는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DAC 8(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 지침을 승인한 바 있음³³⁾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벨기에

[세법 일부개정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10월 11일, 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병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 입법, 조세피난처의 거주자 등에 대한 지급액 보고 의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 도입임³⁴⁾

- EU 지침(2019/2121)에 따라³⁵⁾ 합병 및 분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합병 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관련 모든 회사의 모든 주식 및 의결권을 각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는 경우 신주에 대해 과세 면제함
 - 규정은 EU 지침 실행에 따라 2023년 7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됨
- 납세자는 조세피난처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급액이 10만유로³⁶⁾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액을 보고해야 함
- 비영리단체, 민간재단 및 국제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³⁷⁾에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면제

31) IBFD, "Ireland - Ireland Confirms Commitment to Imple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by 2027," 2023. 1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5_ie_1.html, 검색일자: 2023. 11. 16.

32) 아일랜드 정부, "Collective engagement to implement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2023. 11. 10., <https://www.gov.ie/en/publication/9a551-collective-engagement-to-implement-th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carf/>, 검색일자: 2023. 11. 23.

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06호, p. 16

34) DE KAMER,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fiscales diverses," <https://www.dekamer.be/FLWB/PDF/55/3607/55K3607001.pdf>, 검색일자: 2023. 11. 21.;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Update Merger Definitions, Expand Reporting Obligations for Payments to Tax Havens, Make Compensatory Inheritance Tax Progressive," 2023.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25_b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35) EUR-Lex, "DIRECTIVE (EU) 2019/21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s://eur-lex.europa.eu/eli/dir/2019/2121/oj>, 검색일자: 2023. 11. 21.

36)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181만원임

37) 법인은 그 성질상 상속세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로 유산세(Patrimony Tax)라고도 함

<표 5> 벨기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

(단위: 유로, %)

자산가치	세율
50,000 이하	0
50,001~250,000	0.15
250,001~500,000	0.30
500,000 이상	0.45

출처: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Update Merger Definitions, Expand Reporting Obligations for Payments to Tax Havens, Make Compensatory Inheritance Tax Progressive," 2023.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25_b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대상금액을 기존 2만 5,000유로³⁸⁾에서 5만유로³⁹⁾로 인상함

-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허가된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개조되고 특정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장치로서 다른 용도 여부를 불문하는 휴대전화의 공급
- 최종 소비 상품에 결합되기 전 상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중앙처리 장치와 같은 집적회로장치의 공급
- 게임 콘솔, 태블릿 PC 및 노트북의 공급
-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에 대한 특별제도 또는 금(gold) 투자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⁴¹⁾ 귀금속을 포함한 원료 및 반제품 금속의 공급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금액이 1만유로⁴²⁾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 룩셈부르크는 2023년 11월 3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함⁴⁰⁾

- 매입자는 일정한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일

[제조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

■ 독일 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2023년 11월 9일 향후 5년간 독일 내 일반 제조기업을 포함한

38)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45만원임

39)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90만원임

40)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Projet de loi modifiant la loi modifiée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3/041/286412.pdf>, 검색일자: 2023. 11. 21.; IBFD, "Luxembourg Proposes to Extend Reverse Charge Mechanism," 2023.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6_lu_1.html, 검색일자: 2023. 11. 21.

41)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에 대한 특별제도 금 투자제도는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LOI modifiée DU 12 FE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Art. 56ter~56ter-3 및 56quater)

42) 2023년 11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7만원임

전력소비가 높은 제조기업 대상 전기요금 지원책을 발표함⁴³⁾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 및 전기세법(Stromsteuergesetz)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전기세를 감면할 예정으로, 내년에만 총 120억유로⁴⁴⁾의 구제책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전기세 인하) 2024년 상반기 송전망 요금 안정화⁴⁵⁾ 결정과 함께 제조업 부문의 모든 기업에 대한 전기세가 유럽연합 허용범위의 최소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임
 - 현행 15.37유로/MWh 또는 1.537센트/kWh에서 0.50유로/MWh 또는 0.05센트/kWh로 인하
- 이 외에도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기존 전기요금 보전 규정의 연장 등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스웨덴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 스웨덴 정부는 2023년 10월 26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을 이행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⁴⁶⁾

- 과거 연속적인 2개 회계연도의 총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그룹 내 기업은 추가세액으로 인해 1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법안은 고율과세 관할국에서 저율과세 관할국으로 이익을 이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감소시킴
- 수정안은 9월에 발표된 법안 초안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세금신고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스웨덴 국세청에 추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는 그룹이 최저한세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평가를 위한 기초 역할을 할 것임
-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연체료 및 추가세금(tax surcharges)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규모 다국적 및 그룹기업 내 약 1만 3,000개의 스웨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24개 기업은 스웨덴에 모회사를 두고 있음
- 수정안에는 영구적인 세이프하버 규정이 포

43) Bundesregierung, "Strompreispaket für produzierende Unternehmen – Bundesregierung entlastet stromintensive Unternehmen," 2023. 11. 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rompreispaket-fuer-produzierende-unternehmen-bundesregierung-entlastet-stromintensive-unternehmen-2235602>, 검색일자: 2023. 11. 23.

44) 2023년 11월 28일 기준 17조 308억 8,000만원임

45) 주요 대량전력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내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Übertragungsnetzbetreiber 또는 Transmission system operator)는 50Hertz Transmission GmbH, Amprion GmbH, TenneT B.V., TransentBW GmbH로 총 4개의 운영업체로 이루어져 있음

46) News IBFD, "Sweden Presents Revised Bill on Pillar Two Implementation to Parliament," 2023. 1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4_s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행은 후속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PSP 업체의 부가가치세 기록 보고 의무에 관한 법안 관보 게재]

■ 스웨덴은 2023년 11월 9일,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2020/284)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PSP)에 대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절차법 개정법률(No. SFS 2023:638)을 공포함⁴⁷⁾

- 새로 도입된 요건에 따라 스웨덴에 소재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급인 또는 수취인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 분기 동안 동일한 수취인에 대한 국경 간 결제 건수가 25건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수취인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이 회사 식별 코드에 따라 EU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지급인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결제가 이루어진 회계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의무가 존재함
- 보고 정보에는 수취인의 이름, 부가가치세 번호, IBAN 번호,⁴⁸⁾ 결제 날짜, 금액 및 통화
가 포함되어야 함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SEK⁴⁹⁾을 한도로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또한, 이러한 결제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할 경우, 최대 100만SEK⁵⁰⁾을 한도로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개인소득세 개혁 계획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덴마크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개혁 계획을 발표함⁵¹⁾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덴마크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개혁을 통해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금 부담을 67억 5,000만DKK⁵²⁾까지 낮추는 것을 계

47) News IBFD, "Sweden Gazettes Bill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2023.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7_se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48) 국제은행계좌번호를 뜻함

49)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233만원임

50)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81만원임

51) News IBFD, "Danish Government Presents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2023. 1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9_dk_1.html, 검색일자: 2023. 11. 24.

52)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2,820억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확하고 있음

- 이 조치는 현재 일하고 있는 330만명의 덴마크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혁은 일반 고용수당 공제, 추가 고용수당 공제, 소득구간의 조정 등 총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 일반 고용수당 공제율을 기존 10.65%에서 12.75%로 2.1%p 인상함
 - 이로 인하여, 최대 공제액이 4만 4,800DKK⁵³⁾에서 5만 6,200DKK⁵⁴⁾로 1만 1,400DKK⁵⁵⁾ 증가할 것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5,700DKK,⁵⁶⁾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900DKK⁵⁷⁾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의 추가 고용수당 공제율을 기존 6.25%에서 11.5%로 5.25%p 인상함
 - 이로 인하여, 최대 공제액이 2만 4,400DKK⁵⁸⁾에서 4만 4,900DKK⁵⁹⁾로 2만 500DKK⁶⁰⁾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최대 5,100DKK⁶¹⁾의 추가 세금혜택을 의미함

- 61만 8,400⁶²⁾~75만⁶³⁾DKK 구간의 소득에 대해 7.5%의 새로운 중간 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가구 내 한 사람의 소득이 75만DKK 이상인 경우 최대 9,100DKK,⁶⁴⁾ 가구 내 두 소득자의 소득이 모두 75만DKK 이상인 경우 최대 1만 8,200DKK⁶⁵⁾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세율을 적용받는 250만DKK⁶⁶⁾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약 9,000명의 덴마크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 정부는 2025년부터 해당 조치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이러한 계획의 직접적인 효과는 개인소득세가 2025년에 50억DKK 감소⁶⁷⁾하고, 2026년부터는 100억DKK⁶⁸⁾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계획으로 5,15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53)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1만원임

54)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68만원임

5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7만원임

56)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8만원임

5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만원임

58)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4만원임

59)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3만원임

60)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9만원임

61)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7만원임

62)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743만원임

63)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42만원임

64)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3만원임

6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6만원임

66)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7,465만원임

67)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496억원임

68)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993억원임

[2025년부터 승객세 도입 계획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11월 9일, 2025년 1월 1일부터 항공편에 대한 새로운 승객세(passenger-afgift)를 도입하여 국가의 항공 부문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함⁶⁹⁾

- 새로 도입되는 승객세액은 비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유럽 내 여행의 경우 60DKK,⁷⁰⁾ 중거리 항공편(예: 뉴욕행)의 경우 240DKK,⁷¹⁾ 장거리 항공편(예: 방콕행)의 경우 390DKK⁷²⁾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승객세로 인해 2025년에 9억DKK⁷³⁾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12억 DKK⁷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7년에 세금의 영향에 대한 중간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승객세의 최종 설계가 달라질 예정임
-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승객세 수입 중 10억 DKK⁷⁵⁾가 항공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정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사업구조 변경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 면제 법안 연장 발표]

■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22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변경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 면제 법안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함⁷⁶⁾

- 기업의 이전,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 발표되었으며 열거된 사업구조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면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 개편방법으로는 비법인 기업을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형식을 전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회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합병 및 분할 등 법적 형태가 변경되거나 전체적인 구조조정 상황을 거친 기업의 경우 기업 전환 시 부동산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투자 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해당 면제 법안은 2021년도에 2023년도 말까지 연장된 이후 추가 연장되었으며 부동산 개

69) News IBFD, "Danish Government to Introduce Passenger Tax as of 2025," 2023. 1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9_dk_2.html, 검색일자: 2023. 11. 24.

70)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423원임

71)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5,693원임

72)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252원임

73)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13억 5,100만원임

74)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84억 6,800만원임

75) 2023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03억 9,000만원임

76) Guangdong Provincial Tax Service,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财政部 税务总局关于继续实施企业改制重组有关土地增值税政策的公告," 2023. 9. 22., https://guangdong.chinatax.gov.cn/gdsw/dgsw_gkwj/2023-10/10/content_723ff2583cc8478ab9153ea6ceaa798f.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발 기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품 및 서비스세(GST)에 따른 공급 장소 규칙을 명확히 하는 회보를 발행함⁷⁸⁾



홍콩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감면 시행 발표]

■ 홍콩 정부는 2023년 11월 15일, 투자자의 비용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에 부과되는 인지세(Stamp duty) 인하 법안을 통과함⁷⁷⁾

- 2023년 입법 의회 법안 발표에서 제시된 주식 양도 인지 세율 인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해당 법안 시행으로 인지 세율이 0.13%에서 0.1%로 인하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효림 세무사>



인도

[운송, 광고,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GST 공급 장소 규칙 명확화]

■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는 10월 27일 GST 위원회가 제안한 권장 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운송, 광고,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 물품 운송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알려진 경우 그곳이 공급 장소가 되며,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수령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 장소는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임

- 해당 규정은 표준 운송 서비스와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모두에 적용됨

■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광고 서비스는 광고회사에 광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에 따라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 또는 광고회사의 소재지 등이 광고 용역의 공급지가 됨

-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판/구조물의 제공이 있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IGST 법 Section 12(3)(a)⁷⁹⁾에 따라 그 광고판/구조물이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에 의해 광고 서비스의 공급지가 결정됨

- 광고회사가 광고 장소 제공업자가 제공한 구조물에 자신의 광고를 표시하려고 하고, 그 광고회사에 광고 공간에 대한 매각이나 동산사용권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광고회사에

77) IBFD, "Hong Kong Enacts Reduction of Stamp Duty on Stock Transfers," 2023. 11.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16_hk_1.html, 검색일자: 2023. 10. 16.

78) IBFD, "India Clarifies Place of Supply Rules in GST for Transport, Advertising, Co-location Services," 2023.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1-01_in_2.html, 검색일자: 2023. 11. 27.

79) IGST, Section 12(3)(a) :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directly in relation to an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services provided by architects, interior decorators, surveyors, engineers and other related experts or estate agents, any service provided by way of grant of rights to use immovable property or for carrying out or co-ordination of construction work shall be the location at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or boat or vessel, as the case may be, is located or intended to be located

의한 광고 공간의 판매 또는 동산 사용권한 부여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광고 장소 제공업자가 광고회사에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

- 이러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지는 IGST 법 Section 12(2)에 따라 광고회사가 등록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소재지,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경우(회사 등) 기록상 주소가 존재하는 수취인의 소재지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소재지로 결정됨

■ 코로케이션 서비스⁸⁰⁾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수령인의 위치 또는 부동산의 위치가 공급장소가 됨

-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공급자가 충분한 호스팅 및 IT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IGST 법 Section 12(2)에 따라 서비스 수령인의 위치 등에 의해 공급지가 결정됨
- 그러나 기본 인프라를 갖춘 물리적 공간의 임대만 포함되고 호스팅 및 IT 인프라 제공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부족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공급 장소는 IGST법 제12(3)(a)조에 따라 인프라가 위치한 부동산의 위치로 결정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호주

[R&D 세제혜택 관련 정보공개 요구]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10월 12일, 2024년부터 시작되는 R&D 세제혜택 투명성 보고서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내 비즈니스 게시판 뉴스룸(business bulletins newsroom)에 발표함^{81), 82)}

- 2021년 7월 1일, R&D 세제혜택 프로그램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24년 9월부터 국세청에서 작성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매년 R&D 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지니게 됨

- 보고서에는 기업명, 사업자번호(ABN) 또는 회사번호(ACN), 총공제액 내용이 포함되며, 국세청은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2년 후에 R&D 지출액을 공개함

- 이와 함께 R&D 세액공제 청구 내용에 대한 무작위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2022년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소득연도가 2021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 R&D 기업들이 첫 대상이 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80) Co-location Service란 “호스팅 및 정보 기술(IT)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서, 물리적 공간 임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버 및 하드웨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결, 백업 시설, 방화벽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감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서비스임

81) Australian Tax Office, Business bulletins newsroom - “Our new requirement to publish R&D expenditure information(Last updated 12 October 2023),” 2023. 11. 9., <https://www.ato.gov.au/newsrooms/tax-professionals-newsroom/our-new-requirement-to-publish-r-d-expenditure-information>, 검색일자: 2023. 11. 23.

82) Bloomberg Tax, “Australia Aims to Report R&D Tax Information in September 2024,”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aims-to-report-r-d-tax-information-in-september-2024>, 검색일자: 2023. 11. 23.

[기업의 장외 자사주 매입 단속 법안 상원 승인]

■ 호주 상원은 2023년 11월 15일, 기업의 장외 자사주 매입 허용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 Treasury Laws Amendment(Off-Market Share Buy-Backs) Bill 2022를 최종 승인함⁸³⁾

- 기업들이 장외 주식 매입을 통한 세액공제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어 주주들에게 보다 높은 세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임
 - 최근 회계연도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변칙적 대규모 장외 주식매수 및 비일상적 자본조달을 하는 상장회사의 사례가 47회 발견됨
- 이에 따라 장외 주식과 장내 주식의 배당금 관련 내용을 일치시켜, 세법상 불평등을 종식시키고자 함
 - 지금까지는 장외 주식의 매수 금액을 어떤 계정에서 출자하는지에 따라 주주의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전면 금지함⁸⁴⁾
- 본 법안은 기타 추가적인 변경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음
 - 세무실무자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함
 -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됨

- 세무대리인은 매년 재등록이 요구되고, 자격이 없는 자는 세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83) Bloomberg Tax, "Australian Lawmakers Back Crackdown on Share Buyback Tax Credits," 2023. 11. 15.,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n-lawmakers-back-crackdown-on-share-buyback-tax-credits>, 검색일자: 2023. 11. 23.

84) The Treasury, "Exposure Draft Explanatory Materials: Treasury Laws Amendment(Off-Market Share Buy-Backs) Bill 2022," p. 9,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2-11/c2022-336731-bill-exm.pdf>, 검색일자: 2023. 11. 23.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의회, 2024년 연간 예산 합의(2023. 11. 11.)¹⁾

- (규모) 확정된 2024년 예산은 승인기준 1,893억 8,540만유로, 지출기준 1,426억 3,030만유로

〈표 1〉 2024년 EU 확정 예산

(단위: 100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¹⁾	지급기준 ²⁾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93	20,828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4,561	33,716
천연자원 및 환경	57,339	54,151
이주 및 국경관리	3,893	3,249
안보 및 국방	2,321	2,035
파트너 및 세계	16,230	15,291
유럽 공공 행정	11,988	11,988
기타 특수 기금 ³⁾	2,222	1,734
합계	189,385	142,630
EU 27개국 GNI 대비 %	1.06	0.8

주: 1)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2)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3)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세계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조정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출처: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4: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3. 11.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11/eu-budget-for-2024-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3. 11. 13.

-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06%, 0.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지출한도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약 3억 6,000만유로의 재정적 여유(financial leeway)를 확보

- (주요 내용)²⁾ 2024년 예산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경제 회복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진행 중인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 개정³⁾은 향후 신속하게 수정 예산을 채택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3. 11. 15.)⁴⁾

- (전체 평가) 올해 유럽 경제는 높은 물가, 대외 수요 약화,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성장 추진력을 잃었으나, 향후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GDP 성장률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여름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어, 2023년에 두 지역 모두 0.6%에서 2024년에는 각각 1.2%, 1.3%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

* 여름 전망(9월 발표)에서 유로지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두 지역 모두 0.8%에서 2024년에 각각 1.3%, 1.4%로 증가 전망

1)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4: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3. 11.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11/eu-budget-for-2024-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3. 11. 13.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7월호, 2023 참고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0월호, 2023 참고

4)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3 Economic Forecast: A modest recovery ahead after a challenging year," 2023. 11.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743, 검색일자: 2023. 11.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팬데믹 이후 2021~2022년에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2년 4분기부터 실질 GDP가 둔화되어 2023년 1~3분기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음
-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통화 긴축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1.6%, EU는 1.7%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각각 5.6%, 6.5%에서 2024년에 3.2%, 3.5%로 감소할 전망
 - 10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1년 전 최고치인 10.6%에서 2.9%로 하락하여 202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전망 기간 동안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작년에는 주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영향이 컸으나, 현재는 에너지와 식품 외에 모든 주요 소비 범주의 물가상승률이 광범위하게 완화되고 있음
- (노동)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2023년 상반기에 강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회복력이 유지될 전망
 - 2023년 2분기에 EU 경제활동참가율(61.4%) 및 고용률(65.3%)이 Eurostat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실업률은 6.0%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
 - EU 고용 증가율은 2023년 1.0%에서 2024년과 2025년에 0.4%로 완화될 전망이며, EU 실업률은 2023년과 2024년에 6.0%로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에 5.9%로 감소 전망
- (재정) 재정 지원 조치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재정적자가 감소 전망
 - 불리한 경제 환경 및 높은 이자지출로 인한 재정 압박은 팬데믹 관련 지원 조치의 단계적 중단, 민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에너지 관련 조치의 순예산 영향(net budgetary impact) 감소로 인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과 EU의 재정적자는 재량적 재정 지원 조치의 지속적인 제한으로 2023년에 3.2%에서 2024년 2.8%, 2025년 2.7%로 개선될 전망
 - 유로지역과 EU의 국가 채무는 각각 2023년 90.4%, 83.1%에서 2024년 89.7%, 82.7%로 개선될 전망이며, 2025년에는 채무비율이 대체로 안정화되어 2019년 수준인 약 79%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함
 - (지정학적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증가했으며, 에너지 공급 중단 위기가 글로벌 생산량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벨기에	1.4	1.4	1.5	2.4	4.2	1.9	5.6	5.6	5.4	-4.9	-4.9	-5.0
독일	-0.3	0.8	1.2	6.2	3.1	2.2	3.1	3.2	3.2	-2.2	-1.6	-1.3
에스토니아	-2.6	1.9	2.7	9.4	3.5	2.1	7.0	6.9	6.8	0.6	1.1	0.5
아일랜드	-0.9	3.0	3.4	5.3	2.7	2.1	4.2	4.2	4.3	0.9	0.6	1.0
그리스	2.4	2.3	2.2	4.3	2.8	2.1	11.4	10.7	9.9	-2.3	-0.9	-0.8
스페인	2.4	1.7	2.0	3.6	3.4	2.1	12.1	11.6	11.1	-4.1	-3.2	-3.4
프랑스	1.0	1.2	1.4	5.8	3.0	2.0	7.2	7.4	7.5	-4.8	-4.4	-4.3
크로아티아	2.6	2.5	2.8	8.1	2.4	1.6	6.5	6.2	5.8	-0.1	-1.8	-1.8
이탈리아	0.7	0.9	1.2	6.1	2.7	2.3	7.6	7.4	7.3	-5.3	-4.4	-4.3
키프로스	2.2	2.6	2.9	4.1	3.0	2.2	6.4	6.1	5.9	2.3	2.1	2.5
라트비아	-0.2	2.4	3.0	9.6	3.2	1.9	6.8	6.6	6.5	-3.2	-3.1	-3.1
리투아니아	-0.4	2.5	3.4	8.8	2.9	2.5	6.8	6.7	6.5	-1.6	-2.3	-2.1
룩셈부르크	-0.6	1.4	2.0	3.2	3.0	1.8	5.5	5.9	6.0	-1.9	-2.1	-1.0
몰타	4.0	4.0	4.2	5.7	3.3	3.1	2.7	2.7	2.7	-5.1	-4.6	-4.1
네덜란드	0.6	1.1	1.7	4.6	3.7	2.0	3.6	3.9	3.9	-0.5	-1.8	-2.0
오스트리아	-0.5	1.0	1.3	7.7	4.1	3.0	5.3	5.4	5.3	-2.6	-2.4	-2.2
포르투갈	2.2	1.3	1.8	5.5	3.2	2.4	6.5	6.5	6.4	0.8	0.1	0.0
슬로베니아	1.3	2.0	2.7	7.5	3.9	2.4	3.6	3.7	3.6	-3.7	-3.3	-2.9
슬로바키아	1.3	1.7	2.0	10.8	5.2	3.0	5.7	5.4	5.2	-5.7	-6.5	-6.8
핀란드	0.1	0.8	1.5	4.4	1.9	2.0	7.2	7.3	7.0	-2.4	-3.2	-3.4
유로지역 20개국	0.6	1.2	1.6	5.6	3.2	2.2	6.6	6.6	6.4	-3.2	-2.8	-2.7
불가리아	2.0	1.8	2.6	8.8	4.0	2.9	4.2	4.2	4.2	-3.0	-3.0	-3.2
체코	-0.4	1.4	3.0	12.2	3.2	2.4	2.4	2.5	2.5	-3.8	-2.4	-1.8
덴마크	1.2	1.4	1.6	3.6	2.4	2.1	4.6	5.2	5.5	2.6	1.8	1.2
헝가리	-0.7	2.4	3.6	17.2	5.2	4.1	4.1	4.2	4.1	-5.8	-4.3	-3.8
폴란드	0.4	2.7	3.2	11.1	6.2	3.8	3.0	2.8	2.7	-5.8	-4.6	-3.9
루마니아	2.2	3.1	3.4	9.8	5.9	3.4	5.4	5.2	5.3	-6.3	-5.3	-5.1
스웨덴	-0.5	-0.2	1.3	5.7	1.8	2.2	7.6	8.4	8.6	-0.2	-0.7	-0.6
EU 27개국	0.6	1.3	1.7	6.5	3.5	2.4	6.0	6.0	5.9	-3.2	-2.8	-2.7

주: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3, Table 1

및 전반적인 가격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외 환경)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높은 채무 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 둔화가 EU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통화 정책) 고금리 환경에서 통화 긴축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기후) 폭염, 화재,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EU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신규 후보 국가) 금번 경제전망에서는 처음으로 EU 가입 후보 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 침공 이후 2022년에 -29%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와 공공투자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4.8%, 2024년 3.7%, 2025년 6.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4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에 대한 평가 발표(2023. 11. 21.)⁵⁾

※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유로지역 국가들은 차년도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11월 회원국의 재정계획안이 안정성장협약(SGP) 요건 및 2023년 7월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함

- 2024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더욱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고, 경제는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멘텀을 상실했으며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상황

- 2024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미만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4년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재정기조는 잔존하는 에너지 관련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긴축 재정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집행위는 이러한 긴축 기조는 적절하며,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책은 기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
- 2024년 대다수 회원국에서 긴축 재정기조 예상
 - 그러나 다섯 개의 회원국에서는 확장적 재정기조 예상(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에너지 관련 조치를 폐지하는 중이며 에너지 관련 조치 절감액의 사용 계획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조치 절감액을 모두 적자 감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면, 2024년 예상 재정기조는 더욱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
 - 많은 회원국에서 비에너지 관련 새로운 순경상지출을 도입하기로 계획했고, 이러한 조치가 영구적이고, 보상조치(compensatory measures)가 따라오지 않는다

5) EU 집행위원회, "Draft budgetary plans 2024," 2023. 11. 2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4_en, 검색일자: 2023. 11. 22.

면, 회원국의 장기적인 조정 필요에 부담
이 될 수 있음

- EU 집행위의 회원국 재정계획안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재정권고에 기초하여 에너지 지원 조치의 철회, 투자 증대 등을 권고
 - 2023년 말 일반 면책 조항⁶⁾이 종료될 예정이며, 2023년 7월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기준으로 국가별 양적 권고가 이루어짐(2023년 중기재정목표⁷⁾ 미달성이 예상되는 회원국은 제외)
 - 회원국 공통 사항으로 세 가지를 권고
 - 첫째, 2023년과 2024년에 에너지 지원 조치의 빠른 폐지(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은 에너지 관련 절감을 사용하여 적자 감소 권고)
 - 둘째, 국내 자금 조달 투자를 유지
 - 셋째, 회복·복구기금(RRF)⁸⁾ 및 기타 EU 자금의 효과적 활용 보장
- 재정긴축 기조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로지역 전역에서 투자 증가 예상
 - 2024년 투자가 약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 국가 조달 자금 및 EU 자금의 투자 성장 기여 정도는 회원국에 따라 다름
 - 국가 예산 재원의 투자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사회 회의 투자에 대한 권고와 RRF 기금 투자 지원과 일치)
- 유로지역 평균 재정적자는 감소하지만, 일부 회원국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EU 조약 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8개 회원국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GDP 대비 3% 초과 적자가 예상되며, 2024년은 9개 회원국에서 초과 전망
 - 2023년과 2024년 적자 기준을 초과하는 8개 회원국은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이며, 2024년에는 핀란드가 추가됨
 - 2024년 봄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규정에 따라 20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적자 절차 개시를 제한할 예정이므로 회원국은 2023년 예산 집행과 2024년 재정계획 수립 시에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전달

6) EU 안정성장협약은 EU 또는 유로지역 전체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이 재정준칙 준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escape clause)을 규정하고 있으며, E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일반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시행.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됨

7)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objectives, MTO): EU 안정성장협약에서 예방적 조치(The preventive arm)를 통해 EU 회원국이 각 국가의 재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정책 및 협조에 관한 약속(commitments)의 이행을 지원. 모든 EU 회원국이 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하거나 연간 GDP의 0.5%의 비율로 구조적 예산 흑자(또는 적자)를 개선하여 건전 재정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함

8)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잘 대비하고자 함

■ EU 집행위, 2024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2023. 11. 21.)⁹⁾

※ 경고체계보고서(AMR)는 EU의 경제 기능을 저해하는 불균형(imbalance)을 확인하고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¹⁰⁾의 첫 단계인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국가를 선별함

- (전반적 평가) 강력한 명목 경제 성장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감축(deleveraging)을 촉진했으나 타이트한 자금 조달 여건으로 기존의 높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일부 회원국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부채 등 취약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022년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지가 회복됨
 - 대부분의 회원국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가격 인상 속도가 감소되거나 완만하게 인하되는 모습을 보임
- (심층검토 대상) 대내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¹¹⁾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12개 회원국을 심층검토 대상으로 지정

-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1개 회원국은 2023년에도 심층검토 대상이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를 업데이트하고 불균형이 약화되고 있는지 2024년 상반기에 심층검토가 수행될 예정
- 슬로바키아의 경우 현재 불균형 상태는 아니나, 새로운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심층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비용 경쟁력, 대외 수지, 국가 채무, 주택 가격, 가계 부채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나머지 회원국들은 현시점에서 심층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2023년 봄에 심층검토 대상이었던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경제 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 불균형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



IMF

■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9) EU 집행위원회, “2024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3. 11. 21.,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4-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검색일자: 2023. 11. 22.

10) 경고체계보고서(AMR)를 통해 심층검토 대상 국가 지정(11월경) → 대상 국가에 대한 심층검토보고서 발표(차년도 2월경) → 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 시행

11) i) 대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군: 경상수지(3년 평균), 순국제투자지위, 실질실효환율, 수출시장비율, 명목단위 노동비용지수, ii) 대내 불균형 지표군: 주택 가격지수, 민간 부문 여신, 민간 부문 채무, 국가 채무, 총금융 부문 부채, iii) 고용지표군: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15~24세)

(2023. 11. 16.)¹²⁾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한국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 국내 노동시장의 호조,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2023년 1.4%, 2024년 2.2% 성장할 전망
 - 반도체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국내 주택시장 안정, 중국인 단체관광 등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수요 및 국내 수요의 약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장기적으로 높은 글로벌 금리로 2022년 중반부터 성장세가 감소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띌
 - 물가상승률은 2024년 말까지 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하방위험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 주요국의 성장 둔화와 긴축 통화 정책,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금융불안, 국내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위험으로 작용하며, 단기 전망에는 반도체 주기의 반등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결정적으로 작용
 - IMF는 단기적으로 공공 부채의 증가를 제한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정책조합과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 규제·감독을 통한 재정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강조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준칙 기반의 프레임워크, 연금 개혁, 비은행 금융 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의 건전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중요

<표 3>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연평균)	2.6	1.4	2.2
실업률	2.9	2.7	3.2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5.1	3.6	2.4
재정수지(GDP 대비 %)	-3.0	-1.8	-1.7
중앙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47.8	49.3	50.6
경상수지(GDP 대비 %)	1.8	1.3	2.6

주: 2023년, 2024년은 예측치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2023, pp. 39~41 편집

12) IMF 집행위원회,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2023. 11. 1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1/16/pr23397-republic-of-korea-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11. 20.

성 등을 강조

- 현재 가계부채가 높고,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므로 장기주택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주택 및 금융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잠재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민정책 고려 필요
- 개방적인 무역 환경과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과 더불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권고



OECD

■ OECD, 2023년 9월 실업률 발표(2023. 11. 14.)¹³⁾

-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23년 9월 4.8%로 안정적이었고, 2022년 7월 이후 5.0% 미만을 유지 중

- 2023년 9월 OECD 회원국 실업률은 남성, 여성, 청년(15~24세), 25세 이상 근로자 등 모든 범주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남

■ OECD,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11. 21.)¹⁴⁾

<표 4>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OECD 전체	6.2	5.0	4.8	4.8	4.8	4.8	4.8	4.8
G7	5.2	4.1	3.9	4.1	4.0	4.0	4.1	4.1
유럽연합	7.1	6.2	6.0	5.9	6.0	6.0	6.0	6.0
유로지역	7.7	6.7	6.5	6.5	6.4	6.5	6.4	6.5
호주	5.1	3.7	3.7	3.6	3.5	3.7	3.7	3.6
캐나다	7.5	5.3	5.0	5.2	5.4	5.5	5.5	5.5
프랑스	7.9	7.3	7.3	7.3	7.3	7.4	7.3	7.3
독일	3.6	3.1	2.9	3.0	3.0	3.0	3.0	3.0
이탈리아	9.6	8.1	7.8	7.6	7.4	7.6	7.3	7.4
일본	2.8	2.6	2.6	2.6	2.5	2.7	2.7	2.6
한국	3.7	2.9	2.6	2.5	2.6	2.8	2.4	2.6
스페인	14.8	12.9	12.1	11.9	11.9	11.9	11.9	12.0
영국	4.5	3.7	4.0	4.2	4.3
미국	5.4	3.7	3.4	3.7	3.6	3.5	3.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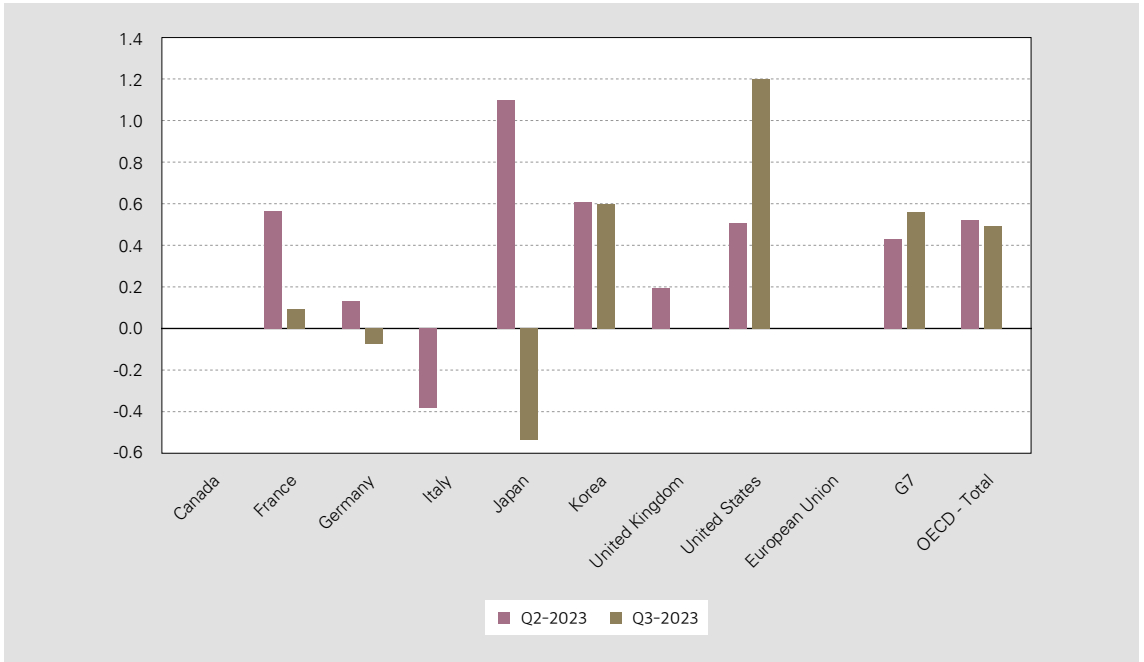
출처: OECD, "UNEMPLOYMENT," 2023. 11. 14., p. 3 Table 1 재구성

13) OECD, "Unemployment Rates," <https://www.oecd.org/newsroom/unemployment-rates-oecd-updated-november-2023.html>, 검색일자: 2023. 11. 15.

14)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3,"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23-oecd.html>, 검색일자: 2023. 11. 22.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주: 2023년 2분기 및 3분기 캐나다, 유로지역 성장률은 0.0%, 2023년 3분기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제로 성장을 기록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Database), 다운로드일자: 2023. 11. 22.

- 2023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잠정) 전 분기 대비 0.5% 증가
- G7 국가의 GDP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이 크게 가속화¹⁵⁾되면서 3분기 0.6%로 상승
 - 나머지 G7 국가들은 3분기에 0에 가까운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었고, 프랑스는 0.1%,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0.5% 및 -0.1%)를 기록
- 그 외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와 코스타리카가 3분기에 가장 높은 GDP 성장률

(각각 1.4%, 1.3%)을 기록했고, 대조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아일랜드는 -1.8%, 그 뒤를 이은 핀란드가 -0.9%를 기록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 2024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6363; P.L. 118-15) 가

15) 민간소비가 2분기 0.2% 증가한 데 비해 3분기 1.0% 증가하면서 GDP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2분기 0.5%에서 3분기 1.2%로 많이 증가

결(2023. 11. 15.)¹⁶⁾

- (규모 및 만료시한) 임시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¹⁷⁾로 진행되며, 만료시한은 두 시기(two-tiered)로 나누어 2024년 1월 19일 또는 2월 2일까지로 규정
 - (2023년 1월 19일 만료) 총 4개¹⁸⁾ 분야(① 군사시설·재향군인 ② 에너지·수자원 ③ 농업 등 ④ 교통·주택/도시개발)
 - (2023년 2월 2일 만료) 1월 19일 만료 분야 외 나머지 8개 분야
- (특이 사항)^{19), 20)}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시한을 두 시기(1월 19일, 2월 2일)으로 나누어 설정한 점을 포함하여, 바이든 정부에서 추경 세출 예산으로 요청해 온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항목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 요청해 온 국경안보 강화 예산 배정 및 예산 삭감 등도 미포함
- (향후 전망) 2차 임시예산안 만료시한까지 정규 세출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 섰다운 가능성도 존재
 - 한편, 두 시기로 나누어진 이번 임시 세출예

산법에 대해 2개의 섰다운 예정일이 설정된 것이기에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섰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공존²¹⁾

-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임시 세출예산이 두 시기로 나누어짐에 따라 정규 세출 예산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견을 피력²²⁾

[기타]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3분기 GDP(속보) 발표(2023. 10. 26.)²³⁾

- 2023년 3분기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4.9%(연율 기준)를 기록하여 전 분기(2.1%) 대비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1.7%)에 비해 상승
 - 2023년 3분기 전기 대비 명목 GDP 성장률은 8.5%이며, 명목 GDP 규모는 27조 6,235억

16)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6363," 2023. 11. 1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3/11/17/press-release-bill-signed-h-r-6363/>, 검색일자: 2023. 11. 20.

17) 2023회계연도(2022. 10.~2023. 9.)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7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3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12월 23일 통과

18) ① 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② Energy and Water, Agriculture ③ Rural Development, FDA ④ Transportation, HUD

19) National Public Radio(NPR), "Bill to keep the government running doesn't include aid to Israel or Ukraine," 2023. 11. 16., <https://www.npr.org/2023/11/16/1213400996/bill-to-keep-the-government-running-doesnt-include-aid-to-israel-or-ukraine>, 검색일자: 2023. 11. 17.

20) Government Executive, "House passes two-tiered stopgap bill days before shutdown," 2023. 11. 14., <https://www.govexec.com/management/2023/11/house-passes-two-tiered-stopgap-bill-days-shutdown/392007/>, 검색일자: 2023. 11. 17.

21) Government Executive, "House passes two-tiered stopgap bill days before shutdown," 2023. 11. 14., <https://www.govexec.com/management/2023/11/house-passes-two-tiered-stopgap-bill-days-shutdown/392007/>, 검색일자: 2023. 11. 17.

22) CNBC, "House passes bill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Senate to vote next," 2023. 11. 14., <https://www.cnbc.com/2023/11/14/house-passes-bill-to-avoid-government-shutdown-senate-to-vote-next.html>, 검색일자: 2023. 11. 22.

23) 미국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3(Advance Estimate)," 2023. 10. 26.,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10/gdp3q23_adv.pdf, 검색일자: 2023. 11. 1.

- 달리(계절조정된 연율 기준)로 집계됨
- 2023년 3분기 실질 GDP의 증가에는 개인소비, 민간 재고투자, 수출, 정부지출, 주택 고정투자의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증가세는 비주택 고정투자의 감소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해 상쇄됨
 - 개인소비 지출의 증가에는 재화 및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의 지출 증가가 반영됨
 - 2023년 2분기 대비 3분기의 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개인소비(0.8→4.0%), 민간 재고투

자, 연방 정부지출(1.1→6.2%) 증가율의 상승, 수출(-9.3→6.2%) 및 주택 고정투자(-2.2→3.9%)의 호전(uptum)이 반영됨

- 이러한 GDP의 상승추세는 비주택 고정투자(7.1→-0.1%), 주·지방정부 지출 증가율의 감소(4.7→3.7%), 수입 증가율의 증가(-7.6→-5.7%)로 인해 상쇄됨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3. 11. 1.)²⁴⁾

<표 5> 미국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2년				2023년		
		2022년	Q1	Q2	Q3	Q4	Q1	Q2
GDP(실질)	1.9	-2.0	-0.6	2.7	2.6	2.2	2.1	4.9
개인소비	2.5	0.0	2.0	1.6	1.2	3.8	0.8	4.0
재화	0.3	-1.2	-0.3	-0.7	0.0	5.1	0.5	4.8
서비스	3.7	-2.7	0.0	-1.6	0.5	0.5	0.9	3.3
민간투자	4.8	6.2	-10.6	-7.6	3.4	-9.0	5.2	8.4
고정투자	1.3	7.2	-0.2	-4.3	-5.4	3.1	5.2	0.8
비주택	5.2	10.7	5.3	4.7	1.7	5.7	7.1	-0.1
주택	-9.0	-1.8	-14.1	-26.4	-24.9	-5.3	-2.2	3.9
민간 재고투자	-	-	-	-	-	-	-	-
순수출	-	-	-	-	-	-	-	-
수출	7.0	-4.6	10.6	16.2	-3.5	6.8	-9.3	6.2
수입	8.6	14.7	4.1	-4.8	-4.3	1.3	-7.6	5.7
정부지출	-0.9	-2.9	-1.9	2.9	5.3	4.8	3.3	4.6
연방	-2.8	-6.9	-3.9	1.2	9.8	5.2	1.1	6.2
주·지방	0.2	-0.4	-0.8	3.8	2.8	4.6	4.7	3.7
GDP(명목)	9.1	6.2	8.5	7.0	6.5	6.3	3.8	8.5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Table 1

24)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3. 11.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1101a1.pdf>, 검색일자: 2023. 11. 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결정 배경) 1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 상황을 평가
 - 경제활동은 3분기에 강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음
 - (9월 표현) 견조한(solid) 속도로 성장 → (11월 표현) 강세(strong pace)를 보임
 - 고용 증가율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고용 증가율은 (9월 표현) 둔화(slowed) → (11월 표현) 완화(moderated)

<표 6> 미국 2023년 9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구분	202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PCE 물가	4.0	3.2	3.4	3.4	3.4
재화	1.2	-0.4	-0.2	0.7	0.9
서비스	5.4	5.1	5.3	4.9	4.7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7	4.3	4.3	3.8	3.7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3," 2023. 8. 31., Table 7,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10/piO923.pdf>, 검색일자: 2023. 11. 8.

-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자구 변화 없음

-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⁵⁾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장기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물가가 2% 수준에서 유지되기까지는 전도요원하다고(long way to go) 발언

- 신용평가사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Aaa 안정적 → Aaa 부정적으로 하향(2023. 11. 10.)²⁶⁾

- (하향 결정배경) 무디스(Moody's)의 신용평가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바뀐 주된 원인은 미국의 재정 여력(fiscal strength)의 하방위험이 미국만의 특별한 신용강점으로 더 이상 완전히 상쇄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

※ 무디스²⁷⁾와 함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강등하였으며,²⁸⁾ S&P는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하향 조정

- 이자율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없다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은 부채 감당능력의 약화를 막기 위한 재정계획이 정권교체 때마다 일관되게 실행될 가능성이

25)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November 1, 2023," 기자회견문, 2023. 11. 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1101.pdf>, 검색일자: 2023. 11. 8.

26) Moody's, "Moody's changes outlook on United States' ratings to negative, affirms Aaa ratings," 2023. 11. 10., https://www.moody.com/research/Moodys-changes-outlook-on-United-States-ratings-to-negative-affirms-Rating-Action-PR_480815?cy=emea&lang=en, 검색일자: 2023. 11. 20.

27) 무디스는 Aaa > Aa1 > Aa2 > A1 > A2 > A3... 순으로 등급 설정하며, 피치 및 S&P는 AAA → AA+ → AA → AA- → A+ → A → A- ... 순으로 등급 설정

28)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2023. 9., https://www.kipf.re.kr/tmp/skin/padata/popup_2.jsp?dataNo=6037&atchFileId=FILE_000000027930Sv1&fileSeq=0&downloadType=Overseas 참조

낮음을 시사

- (재정정책 부재)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채 감당능력(debt affordability)²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함
 - 추가적인 정책결정이 없다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자 지출은 2033년 GDP의 26%로(2022년 9.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적자는 2033년 GDP의 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부채 부담(debt burden)보다 부채 감당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재정여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 (정치적 분열) 최근 채무 한도(debt limit)의 벼랑 끝 협상, 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예산안 합의에 불발로 인한 섣다운 위협 증가 등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보여줌
 - 무디스는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것이며, 재정적자의 확대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에는 중기적 재정계획이 법률적 재정준칙이나 양당간 합의 등의 제도가 부

재하다는 점은 미국이 Aaa 등급의 다른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점임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2023. 11. 10.)³⁰⁾
 - 2023년 11월 2일 발표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시행 관련 경비 추가 등을 위해 13조 1,992억엔 규모의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세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한 추가 세출은 경제대책 관계 경비 13조 1,272억엔, 기타 경비 1조 4,851억엔,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³¹⁾ 전출 1조 3,147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7,820억엔이며, 3조 5,098억엔 규모의 기존 경비가 감액
 - (세입) 공채금 8조 8,750억엔(건설국채 2조 5,100억엔, 특례국채 6조 3,650억엔)을 증액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세 및 인지수입 1,710억엔, 세외수입 7,621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 3조 3,911억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9) 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중을 의미

30)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補正予算」, 2023. 11. 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20231110_071409.html, 검색일자: 2023. 11. 14.

3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채, 차입금 등의 상환 및 이자 등 지분을 시행하는 회계 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출처: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about_mof/mof_budget/special_account/kokusaiseiri/kokusaiseiri.html, 검색일자: 2023. 11. 1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표 7> 일본의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고물가 대책	27,363	1. 세수	1,710
2.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13,303		
3.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34,375		
4.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13,403	2. 세외수입	7,621
5. 국민 안전·안심 확보	42,807		
소계(경제대책 관계경비) ¹⁾	131,272	1)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응	2,222
		2) 기타	5,399
6. 기타 경비	14,851	3. 전년도잉여금 수입	33,911
1) 방위력강화자금 ²⁾ 편입	10,390		
2) 기타	4,460		
7.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전출	13,147	4. 공채금	88,750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7,820		
9. 기존 경비 감액	-35,098		
1)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³⁾	-20,000	1) 건설국채	25,100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5,000	2) 특례국채	63,650
3) 기타	-10,098		
합계	131,992	합계	131,992

주: 1) 경제대책 관계경비는 소득세 등 정액 감세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하여 약 17조엔으로 전망

2)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및 강화된 방위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확보하는 재원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총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일본 법령 검색 홈페이지, 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69>, 검색일자: 2023. 11. 15.)

3)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는 용도를 변경하고 '유가·물가 급등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로 재검토함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フレーム」, 2023. 11. 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hosei231110a.pdf, 검색일자: 2023. 11. 14.

<표 8> 일본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후 2023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3회계연도 예산 (당초)	2023회계연도 예산 (추경 후)	증감액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727,317	847,245	119,928	16.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3,992	171,812	7,820	4.8
	국채비	252,503	256,748	4,244	1.7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63,895	177,042	13,147	8.0
	이자지급비용	84,723	75,820	-8,903	-10.5
	소계	1,143,812	1,275,804	131,992	11.5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4,400	696,110	1,710	0.2
	기타 수입	93,182	134,714	41,532	44.6
	공채금(세출과 세수 등과의 차이)	356,230	444,980	88,750	24.9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 제외)	163,895	177,042	13,147	8.0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4,723	75,820	-8,903	-10.5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기초재정수지적자)	107,613	192,118	84,506	78.5
	소계	1,143,812	1,275,804	131,992	11.5

주: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총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補正後予算フレーム」, 2023. 11. 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hosei231110d.pdf, 검색일자: 2023. 11. 14.를 참고하여 작성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7조 5,804억엔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국채의존도는 당초 예산 대비 3.8%p 증가한 34.9%임

[기타]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발표(2023. 10. 31.)³²⁾

- 일본은행은 10월 30~31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 장기금리 목표는 기존 0%로 유지하면서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
- (금융시장 조절방침) 12월에 개최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기존 장·단기금리 수준과 장·단기금리 운용을 유지
 - (장·단기금리) 단기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대상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 정도로 유지되도록 운용
 - *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0.756%(11/20 기준)³³⁾
 - (금리 운용) 장기금리의 상한을 1.0%로 조정

- (자산매입 방침) ETF 및 J-REIT³⁴⁾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은 약 2조엔의 잔고를 유지

- 회사채 등은 코로나19 확대 전과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엔으로 매입 잔고를 서서히 조정할 것이며, 매입 잔고의 조정은 회사채 발행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

* 현재 일본은행의 CP 등 잔고는 2.3조엔, 사채 잔고는 6.4조엔(11/10 기준)³⁵⁾

-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금리를 조절하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임금 인상이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10. 31.)³⁶⁾

- (경제) 해외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이 있으나 보복소비 수요, 완화적인 금융환경, 경제대책 효과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

32)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3. 10.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3/k231031a.pdf, 검색일자: 2023. 11. 2.

33) 일본 재무성, 「国債金利情報(令和5年11月20日)」, <https://www.mof.go.jp/>, 검색일자: 2023. 11. 21.

34) J-REIT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빌딩, 상업시설,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임대 수입이나 매매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법률상 투자신탁의 일종.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REIT라는 구조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REIT라고 지칭하며, 일본에서는 앞에서 J를 붙인 J-REIT라고 지칭. J-REIT는 투자신탁의 일종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01년 9월에 처음 상장(출처: 사단법인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 <https://www.toushin.or.jp/rei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23. 1. 26.)

35) 일본은행, 「営業毎旬報告(令和5年11月10日現在)」, <https://www.boj.or.jp/statistics/boj/other/acmai/release/2023/ac231110.html>, 검색일자: 2023. 11. 21.

36)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2023年10月)」, 2023. 10.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10b.pdf>, 검색일자: 2023. 11. 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와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4회계연도에는 2.8%를 나타낼 전망이다, 2025회계연도에는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3년 7월 전망과 비교) 2023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3~2024회계연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의 영향, 원유 가격 상승 등에 의해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

<표 9> 2023~2025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회계연도	1.8~2.0 <2.0>	2.7~3.0 <2.8>
2023년 7월 전망	1.2~1.5 <1.3>	2.4~2.7 <2.5>
2024회계연도	0.9~1.4 <1.0>	2.7~3.1 <2.8>
2023년 7월 전망	1.0~1.3 <1.2>	1.8~2.2 <1.9>
2025회계연도	0.8~1.2 <1.0>	1.6~2.0 <1.7>
2023년 7월 전망	1.0~1.2 <1.0>	1.6~2.0 <1.6>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하여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10月)」, p. 10, 일부발췌, 2023. 10. 31.

■ 일본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2023. 11. 2.)³⁷⁾

- (배경) 일본은 현재 30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기업의 높은 투자 의욕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오래 지속된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 (주요 내용) 종합경제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물가 대책,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국민 안전·안심 확보 - (고물가 대책)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사업자 지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사업자 지

37) 일본 내각부,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日本経済の新たなステージにむけて~」, 2023. 11. 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3/20231102_taisaku.pdf, 검색일자: 2023. 11. 14.

- 원) 소득세·개인주민세 정액 감세 실시 (납세자 및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1명당 2024년분 소득세 3만엔, 개인주민세 1만엔 감세), 저소득가구 지원, 연료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³⁸⁾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 등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기업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촉진, 재생에너지 지원, 원자력 활용 등
-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강화 등 중견·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환경 정비, 인력 부족 대응,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 지원 지속,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삼위일체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지방 경제 회복 지원 및 경제 교류 확대
-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과학 기술 진흥 및 혁신 촉진, 프런티어 개척, GX (Green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등 생산성 향상·공급력 강화를 통한 국내 투자 확대, 혁신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등 지원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 공적 부문 개혁,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제도·규제 개혁
- (국민 안전·안심 확보)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의 가속,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의 추진,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및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저출산 대책, 공교육 지원, 여성 및 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인 사회 실현
- (규모) 이번 경제대책에 필요한 경비는 소득세 등 정액 감세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하여 약 17조

〈표 10〉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 규모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 규모
	합계	국가 및 지방의 세출	재정투용자	
고물가 대책	6.3	6.3	-	12.8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3.0	3.0	-	9.1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4.7	4.5	0.2	7.5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1.6	1.6	0.0	1.7
국민 안전·안심 확보	6.1	5.4	0.7	6.3
합계	21.8	20.9	0.9	37.4

출처: 일본 내각부,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日本経済の新たなステージにむけて~」 2023. 11. 2., p. 75

38) 2022년 4월 26일 각의 결정된 「원유 가격·물가 상승 등 종합 긴급대책」에서 발표한 정책. 원유가격 상승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제 정세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료유 도매가격 억제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소매가격 급등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에는 연료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를 2023년 9월까지 실시 예정이었음(출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https://nenryo-gekikenkanwa.jp/>, 검색일자: 2023. 11. 1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엔으로 전망되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반회계 추가 금액은 약 13.1조엔 규모

-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 재정지출은 21.8조엔, 총사업 규모는 37.4조엔으로 예상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외에 특별회계 추가 금액 1.2조엔, 기존 경비 활용, 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

- (경제효과)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실질 GDP

약 19조엔(연 성장률 환산 약 1.2%, 향후 3년간 효과가 발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순 평균)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망되며,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약 0.1%p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 일본 내각부, 2023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3. 11. 15.)³⁹⁾

- 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연율 -2.1%)로 3분기 만에 감소세로

<표 1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¹⁾
	Q3	Q4	Q1	Q2	Q3	Q3
실질 GDP	-0.1	-0.1	0.9	1.1	-0.5	-2.1
국내수요	0.5	-0.3	1.1	-0.7	-0.4	-1.6
민간수요	0.7	-0.5	1.4	-1.0	-0.6	-2.3
민간최종소비지출	0.2	0.2	0.7	-0.9	-0.0	-0.2
민간주택	0.1	1.0	0.5	1.8	-0.1	-0.3
민간기업설비	1.9	-0.9	1.7	-1.0	-0.6	-2.5
민간재고변동	(0.1)	(-0.4)	(0.4)	(-0.1)	(-0.3)	-
공적수요	-0.0	0.4	0.3	0.1	0.2	0.6
정부최종소비지출	-0.0	0.1	0.1	0.0	0.3	1.2
공적고정자본형성	1.1	0.0	1.4	0.3	-0.5	-2.0
공적재고변동	(-0.1)	(0.1)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6)	(0.3)	(-0.2)	(1.8)	(-0.1)	-
재화·서비스 수출	2.2	1.5	-3.5	3.9	0.5	2.1
재화·서비스 수입	5.1	0.2	-2.1	-3.8	1.0	4.2
명목 GDP	-0.8	1.3	2.3	2.5	-0.0	-0.2
GDP 디플레이터	-0.7	1.4	1.3	1.4	0.5	-

주: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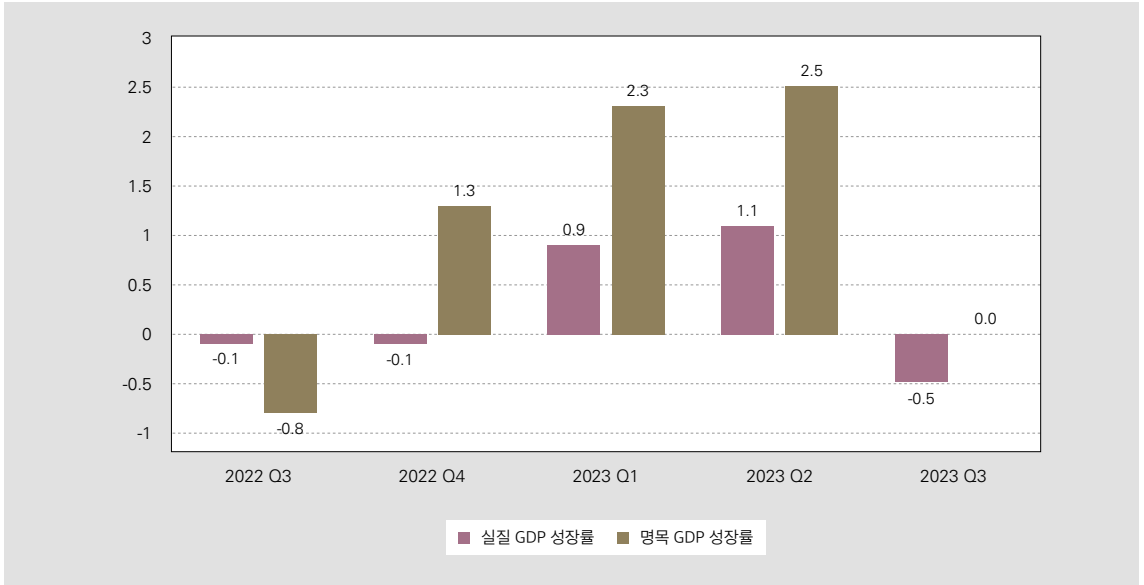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 = 재화·서비스 수출 - 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7-9월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39) 일본 내각부, 「2023년7-9월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3.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3. 11. 17.

[그림 2]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 7~9월 4분기별 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을 참고하여 작성

전환하였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0%(연율 -0.2%)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4%p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1%p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하여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자동차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저작권 사용료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1.0% 증가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에 대해 위헌 판결(2023. 11. 15.)⁴⁰⁾

40)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Zweites Nachtragshaushaltsgesetz 2021 ist nichtig,” 보도자료, 2023. 11. 15.,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bvg23-101.html>,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정부, “Regierung wird Urteil genau beachten,” 2023. 11. 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urteil-zum-nachtragshaushalt-2240768>, 검색일자: 2023. 11. 17.

- (개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1회계연도 제2차 독일 추경예산법이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
- (배경) 독일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법에서 당초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법을 통해 승인된 2,400억유로의 신규차입 중 사용하지 않은 600억유로를 에너지기후기금(현 기후변화기금)으로 이전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사용하도록 함
 - 2021년 연방 예산에서 1,800억유로의 신규 차입을 승인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법(2021. 4.)에서 신규차입이 약 600억유로 증액되었음
 -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적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규정의 예외로 인정
 - 제2차 추경예산법(2022. 2.)을 통해 예산 규모를 추가 증액(5,477억→5,727억유로)하고, 미사용 차입금 600억유로⁴¹⁾는 에너지기후

<표 12> 2021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구분	2021년 본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재정지출	4,986	5,477	5,727
에너지기후기금 배정	25	25	625
재정수입	4,986	5,477	5,727
신규차입	1,798	2,402	2,402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Das ist ein Booster für die Volkswirtschaft," 2021. 12. 1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12/2021-12-13-zweiter-nachtragshaushalt-2021.html>, 검색일자: 2023. 11. 17.

- 기금으로 소급적으로 이전해 차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촉진할 계획
- (판결)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이 독일 기본법 제109조 제3항, 제110조 제2항, 제115조 제2항⁴²⁾에 합치하지 않아 무효로 판결
 - 입법부가 긴급 상황(부채규정 한도의 초과

41) 독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투자(특히 기후보호 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 자금이 발생

42) - 독일 기본법 제109조 제3항: 연방과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주는 정상 국면을 벗어난 경기변동의 영향을 경기 호황 및 침체 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규정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황 규정도 제정되어야 한다. 연방의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제1문에 부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제115조에서 정한다. 주의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떠한 차입수입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1문에 부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추가 그 헌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다.

- 독일 기본법 제110조 제2항: 예산안은 그 연한에 따라 1년 또는 다년 회계연도로 나누며 제1차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예산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분리되어 상이한 기간에 적용된다고 규정될 수 있다.

- 독일 기본법 제115조 제2항: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위 원칙에 부합한다. 정상국면을 벗어난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신용차입을 할 경우에는 경기호황 및 침체 시 재정에 대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이루어진 신용차입이 제1문부터 제3문까지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차입 상한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는 통제계정에서 관리된다. 명목 국내총생산의 1.5퍼센트를 넘는 초과부담은 경기상황에 맞추어 상환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 특히 재정적 금융거래만큼의 수입 및 지출의 보정, 경기보정 절차에 따른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순신용차입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실제 신용차입이 규정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 및 조정 등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다수의 의결에 따라 이러한 신용차입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연방의회 의결 시 그 신용차입에 대한 상환계획도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 제6문에 따른 신용차입은 적절한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국회도서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번역본』, 2018에서 해당 조항 발취)

- 허용 요건)과 이에 대응한 위기관리 조치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추경예산법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115조 제2항 제6문에 따른 긴급 상황의 판정이 실제 차입수권⁴³⁾의 사용과 연동되지 않는 것은 기본법이 규정한 단년도 예산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
 - 기금 지출이 실제 발생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2021년의 채무로 반영하면서 긴급 상황의 차입수권을 차후 회계연도에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 불가
 - 2021회계연도 종료 후에 2021회계연도 추경 예산법을 채택한 것은 기본법 제110조 제2항 제1문의 예산의 사전 원칙⁴⁴⁾에 위반
 - (영향) 이번 판결로 기후변화기금으로 이전된 600억유로를 기후보호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기후변화기금의 재정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 연방정부는 판결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
 - 독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당초 11월 23일에 예정된 2024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조정 회의 표결 일정을 연기(2023. 11. 22.)
 -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는 연방예산의 신규 지출부담승인⁴⁵⁾ 예산 중단 조치를 단행⁴⁶⁾
 - 린드너 재무장관은 11월 23일 언론 성명에서 추후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⁴⁷⁾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5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2023. 10. 26.)⁴⁸⁾
- (개요)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⁴⁹⁾를 발표하며 이번 세수추계는 2023년 연방정부 가을 경제전망의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계
 - 가을 경제전망과 제165차 세수추계는 2024년 연방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에서 고려
 - (총세입) 독일의 총세입은 2023년 9,161억유

43)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

44) 예산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법률에 의해 확정

45) 향후 다년도 기간의 지출 집행을 위한 승인 한도(참고: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독일 연방예산 규정』, 2017, p. 21)

46) tagesschau, “Finanzministerium weitet Haushaltssperre aus,” 2023. 11. 21., <https://www.tagesschau.de/inland/haushaltssperre-koalition-schuldenbremse-100.html>, 검색일자: 2023. 11. 24.

47) 독일 연방 재무부, “Christian Lindner in einem Pressestatement zum Entwurf eines Nachtragshaushalts 2023,” 2023. 11.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23/2023-11-23-Pressestatement-Christian-Lindner/2023-11-23-pressestatement-christian-lindner.html>, 검색일자: 2023. 11. 24.

48)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Es ergeben sich keine neuen Verteilungsspielräume,” 보도자료,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10/2023-10-26-ergebnisse-der-165-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정부, “Keine neuen Verteilungsspielräume,” 2023. 10.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165-steuerschaetzung-2233082>, 검색일자: 2023. 11. 17.

49)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로, 2024년 9,641억유로로 추계

- 직전 추계(2023년 5월)와 비교해 2023년은 주로 경제성장 약세의 영향으로 45억유로 하향조정, 2024년은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해 19억유로 상향조정됨

- 특히 법인세 및 부과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직전 추계 대비 약세가 나타남

- 2027년까지의 총세입 조정 규모 합계는 직전 추계 대비 233억유로 상향조정

- 다만 이번 추계에 성장기회법, 전기요금 지

원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미반영

- (부문별 세입) 2023년에 연방정부 세입은 직전 추계 대비 36억유로 낮아질 전망이나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각각 27억유로, 1억유로 늘어날 전망

- 돌봄 서비스 개선법, 지방정부의 난민 관련 비용 지원법 등 일부 세법 개정은 주 정부에 유리하도록 세입을 재배분

- EU 관련 이전 세액⁵⁰⁾ 규모는 2023~2025년에는 직전 추계보다 낮아졌으나 2026년과 2027년에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EU 구조기금의 후속 자금 이전의 영향

<표 13> 독일의 제165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10억유로,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방정부	금액	337.2	356.3	381.2	399.9	408.8	422.5	437.2
	전년 대비 증감률	8.0	5.7	7.0	4.9	2.2	3.3	3.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6	3.8	5.3	-0.3	1.2	.
주정부	금액	384.5	383.4	399.9	419.6	434.5	449.4	465.5
	전년 대비 증감률	8.3	-0.3	4.3	4.9	3.5	3.4	3.6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7	1.6	2.4	2.7	3.6	.
지방자치단체	금액	135.4	139.3	145.9	154.6	161.4	166.9	172.3
	전년 대비 증감률	7.3	2.8	4.8	6.0	4.4	3.4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1	1.5	1.7	1.6	1.9	.
EU	금액	38.6	37.1	37.2	42.9	49.9	49.5	49.0
	전년 대비 증감률	-2.5	-4.0	0.3	15.5	16.2	-0.7	-1.0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7	-5.1	-1.6	4.3	3.2	.
총세수	금액	895.7	916.1	964.1	1,017.1	1,054.5	1,088.3	1,124.0
	전년 대비 증감률	7.5	2.3	5.2	5.5	3.7	3.2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4.5	1.9	7.8	8.3	9.8	.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5.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5-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3. 11. 17.; _____, "Abweichungen des Ergebnisses der Steuerschätzung Oktober 2023 vom Ergebnis der Steuerschätzung Mai 2023,"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5-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3. 11. 17.

50) EU 귀속 세수는 연방 세수에서 조달하는 부분(부가가치세 기반 자원, 국민총소득 기반 분담금, EU 플라스틱세 등)과 관세를 포함

[기타]

■ 독일 연방정부, 제조업 부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발표(2023. 11. 9.)⁵¹⁾

- (개요) 독일 정부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에 직면한 제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세(electricity tax) 인하, 기존 보조금 제도 연장·확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패키지에 합의
 - 신규 법안을 통해 내년에 최대 120억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
- (전력세 감면)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해 전력세를 EU 허용 최저 수준으로 인하
 - (세율) 기존 15.37유로/MWh(1.537센트/kWh)에서 0.5유로/MWh(0.05센트/kWh)로 전력세율을 대폭 인하
 - (지원 기간) 법률로 2024년과 2025년의 전력세율 감면을 규정하고, 추후 연방 예산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추가 3년(2026~2028년)간 지원을 연장할 예정
 - (관련 제도 변경)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해 전력세를 인하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던 전력세 일부 감면 제도는 중단
- (배출권 거래제 관련 보조금 확대) 전력 탄소

배출 비용 관련 정부 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혜택도 확대

- (기대 효과) 이번 지원 계획은 기존 발표된 2024년 전력망 요금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부과금 폐지,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연장 등과 함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예산종료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LFG 2023) 발표(2023. 10. 31.)⁵²⁾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한 4.9%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1.0%, GDP 대비 채무비율도 109.7%로 2024년 예산법안 전망 유지
- 2023년 재정적자는 1,714억유로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3년 예산법 대비 64억유로 높은 수치
 - 채무비용이 38억유로 증가했고, 기타세입과

51) 독일 연방정부, “Strompreispaket für produzierende Unternehmen – Bundesregierung entlastet stromintensive Unternehmen,” 보도 자료, 2023. 11. 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trompreispaket-fuer-produzierende-unternehmen-bundesregierung-entlastet-stromintensive-unternehmen-2235602>, 검색일자: 2023. 11. 17.; _____, “Energie bezahlbar halten,” 2023. 11. 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rompreispaket-energieintensive-unternehmen-2235760>, 검색일자: 2023. 11. 17.

52)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3(PLFG 2023),” 2023. 10. 31.,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de-finances/articles/le-projet-de-loi-de-finances-de-fin-de-gestion-pour-2023>, 검색일자: 2023. 11.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세의수입이 각각 80억유로, 44억유로 감소함
- 법인세 수입, 소득세 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은 각각 60억유로, 27억유로, 19억유로 증가하여 재정적자 증가 요인이 다소 상쇄됨

- 국가지출범위(PDE) 내에서 기존 지출 계획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52억유로를 편성
 -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관련 추가 비용 조달
 - 최근 다양한 농업 위기(조류 인플루엔자와 서리 등)에 대한 지원
- 50억유로 규모의 기존 지출 계획의 취소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편성
 - 과소 집행이 관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Programme n° 174: Énergie, climat et après-mines)의 예산 취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23년 국가지출범위는 예산법(LFI) 기준 4,961억유로에서 4,953억유로로 8억유로 감소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10. 31.)⁵³⁾
 - 2023년 3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1%를 기록
 - 가계 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로 국내 수요가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 식품 소비가 8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3분기 다시 증가세(0.7%)를 보임
- 반면 가계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2023년 2분기 0.8%에서 3분기 0.4%로 다소 둔화
-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감소하면서 대외무역은 GDP 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 발표(2023. 11. 22.)⁵⁴⁾
 - (경제전망) 영국 경제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2023년 봄 전망(-0.2%) 대비 높은 성장률(0.6%)이 기대되며, 이후 예측 기간 매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은 2022년 4.3%에서 2023년 0.6%, 2024년 0.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실질 임금의 상승 압력, 고금리, 정부 지원 축소 등에 기인
 - 실질 임금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생산량 갭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2025년에는 최대 1.4%, 2026~2028년 동안 평균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53) 프랑스 통계청, "GDP grew modestly in Q3 2023(+0.1% after +0.6%)," 2023. 10. 3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710176>, 검색일자: 2023. 11. 16.

54) HM Treasury, "Chancellor backs business and rewards workers to get Britain growing," News story, 2023. 11.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backs-business-and-rewards-workers-to-get-britain-growing>, 검색일자: 2023. 11. 23.

<표 14> 주요 경제전망

(단위: %, 100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4.3	0.6	0.7	1.4	2.0	2.0	1.7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9.1	7.5	3.6	1.8	1.4	1.7	2.0
실업률	3.7	4.2	4.6	4.6	4.4	4.2	4.1
고용자 수	32.7	32.9	32.9	33.1	33.4	33.7	34.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3, 2023. 11., Table 1.3

7.5%, 2024년 3.6%, 2025~2028년 동안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4.6%로 절반 아래로 감소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3년 4.2%에서 2024년

과 2025년에 4.6%로 상승하나 2028년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참여는 봄 전망 이후 개선되었으나, 장기 질병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은 증가

• (재정 전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

<표 15> 주요 재정 전망

(단위: 10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2~2023	2023~2024	2024~2025	2025~2026	2026~2027	2027~2028	2028~2029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923.9	988.7	1,036	1,072	1,116	1,163	1,212
(GDP 대비 %)(a)	40.1	40.3	41.2	41.1	41.2	41.4	41.6
총관리지출(TME)	1,151	1,222	1,237	1,265	1,301	1,334	1,373
(GDP 대비 %)(b)	45.1	44.8	44.2	43.8	43.4	42.9	42.7
공공부문 경상지출(c)	41.0	40.0	39.4	39.3	39.1	38.7	38.6
공공부문 순투자(d)	1.9	2.6	2.5	2.2	2.1	1.9	1.8
감가상각(e)	2.2	2.2	2.3	2.3	2.3	2.3	2.3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5.0	4.5	3.0	2.7	2.3	1.6	1.1
경기조정 순차입	6.0	4.8	2.7	2.1	1.9	1.5	1.1
경상예산 적자(c+e-a)	3.2	1.9	0.5	0.5	0.2	-0.3	-0.7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¹⁾	84.9	89	91.6	92.7	93.2	93.2	92.8
공공부문 순채무 ¹⁾	95.8	97.9	98.6	96.3	95.5	95.0	94.1

주: 1) 3월 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3, 2023. 11., Table A.5, Table A.9 발췌

로 감소하여 2023년 봄 전망 대비 재정여력(headroom)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세수확대에 힘입어 2023~2024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봄 전망 대비 0.6%p 낮은 4.5%로 예측되고, 중기적으로 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채무) 2023~2024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봄 전망 대비 5.2%p 낮은 97.9%로 예측되고, 2025~2026회계연도에 감소 전환되어 2028~2029회계연도에 9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의 채무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부 기준 총채무는 2022년에 G7 국가 중 독일(66.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101.9%)을 기록

- (주요 정책) 리시 수백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큰 정부, 높은 지출, 높은 세금이 아닌 채무 감축, 세금 감면,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조

- (조세) 물가상승률 하락과 채무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근로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감면을 계획

- 2024년 1월부터 근로자국민보험(Employee National Insurance) 기본요율을 12%에서 10%로 2%p 인하하여 2,7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조속히 경감 혜택을 제

공할 예정

- 이에 따라 기본요율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국민보험의 합산 세율은 32%에서 30%로 인하되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최저 합산 기본세율에 해당

- (기업)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영국과 G7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향후 10년 동안 기업투자에 연간 20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

- ‘영구적인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Permanent Full Expensing)⁵⁵⁾를 통해 적격 주요 공장 및 기계 투자에 대해 100% 자본공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

- 향후 5년 동안 43억파운드 규모의 ‘법인세 지원 패키지(business rates support package)⁵⁶⁾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인 소기업을 보호

- 영국 기업은행 내 ‘성장 기금(Growth Fund)’ 설립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고성장 기업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명목으로 750억파운드를 확보

- (노동 및 복지개혁) 노동력 확대 및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근로에 대한 보상, 임금지급 지원, 복지개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법정생활임금을 9.8% 인상하여 11.44파운드로 적용하

55) 2023년 3월 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3. 4. 1~2026. 3. 31.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를 통해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해에 100% 자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6%)이 적용되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50%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

56) 소기업 승수 동결, 소매업, 레저 및 접객업에 대한 감면 연장 등을 포함

- 고, 대상을 확대(기존 23세 이상에서 21세와 22세도 포함)
- 청년층과 견습생에 대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또한 대폭 인상할 예정(18~20세의 경우 14.8% 인상된 8.6파운드, 16~17세와 견습생의 경우 21.2% 인상된 6.4파운드 적용)
 - 근로능력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⁵⁷⁾를 개편하여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가능 인력이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의료서비스(NHS)의 대화 요법(Talking Therapies), 개별 배치 및 지원(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등 4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향후 5년간 최대 11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
- (인프라 및 균형발전)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와 자금 지원 패키지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Green Industries Growth Accelerator’에 할당된 9억 6,000만파운드를 포함하여 미래 고성장 산업 중 영국 제조업체에 45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 Greater Manchester, East Midlands 및

West Midlands 지역에 3개의 첨단 제조 투자 구역을 설립(향후 10년 이내에 34억 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6만 5,000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투자 구역 프로그램(Investment Zones programme)’과 자유항(Freeport)⁵⁸⁾ 세금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억 5,000만파운드의 ‘투자 기회 기금(Investment Opportunity Fund)’을 통해 투자 구역과 자유항을 지원

[기타]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2023년 11월 1일부터 ‘환경원칙 의무’ 발효(2023. 11. 1.)⁵⁹⁾
 - (주요 내용)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다음 5가지 원칙에 따라 해당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환경법 2021(Environment Act 2021)」)
 - (통합) 환경보호가 정책 수립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 (환경 피해 예방) 정책 입안자들이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 (근원 교정) 정책은 파생되는 영향을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환경 피해를 근원부터 다루

57) 영국은 기존 장애 관련 급여와 소득보조를 받던 장애인에 대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 적합과 근로 관련 활동 집단, 근로가 불가능한 지원 집단 등으로 분류

58) 해외기업 유치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영국 내 경제특구를 의미

59)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principles duty comes into force,” News story, 2023. 11.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vironmental-principles-duty-comes-into-force>, 검색일자: 2023. 11. 14.

어야 한다는 원칙

- (오염자 부담) 가능한 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사람이 환경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사전 예방)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환경원칙 의무는 군대, 국방 또는 국가 안보, 정부 내 수입, 정부 내 지출 또는 정부 내 자원 배분 등을 제외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수립되는 신규 또는 개정 정책에 적용

재정포럼

2023년 12월호 통권 제330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12월 15일 발행 / 통권 제33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ipf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